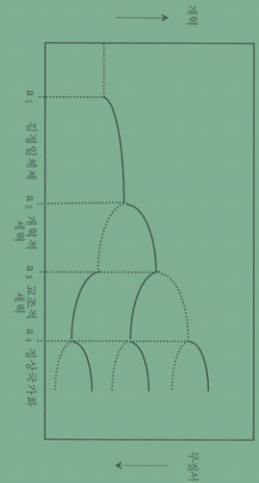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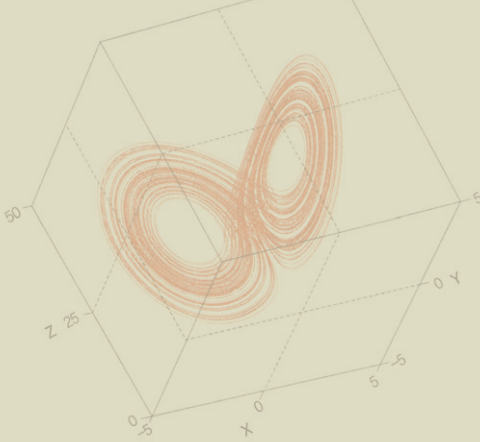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16-02



#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 김국신 · 조정아 · 박영자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서울산업대학교

www.kinu.or.kr

##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인 쇄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7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양동문화사 (02-2272-1767)  
인 쇄 처 양동문화사

가 격 8,000원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 이교덕, 김국신, 조정아, 박영자 [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09-16-02)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479-529-7 93340 : ₩8,000

북한 체제[北韓體制]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9004209

##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통일연구원
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한국개발연구원
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서울산업대학교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김 국 신 선임연구위원 (협동연구 총괄팀장)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이 교 덕 선임연구위원 조 정 아 연구위원 박 영 자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이 석 부연구위원 김 창 욱 수석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양 문 수 부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석 기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김 은 영 주임연구위원
	서울산업대학교	민 병 원 교수 조 동 준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 치 욱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 목차

C o n t e n t s

##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김국신, 조정아, 박영자

### 제 1장 서론 / 1

### 제 2장 복잡계 이론과 북한체제

- |                    |                        |    |
|--------------------|------------------------|----|
| 01 복잡계 이론          | 가. 제1세대 시스템 이론         | 7  |
|                    | 나. 카오스 이론과 제2세대 시스템 이론 | 12 |
|                    | 다. 제3세대 시스템이론: 복잡계 이론  | 14 |
| 02 북한체제에 대한 복잡계 적용 | 가. 복잡계 이론 적용 가능성       | 17 |
|                    | 나. 복잡계 분석틀             | 18 |

### 제 3장 김정일과 측근

- |                           |                      |    |
|---------------------------|----------------------|----|
| 01 상호관계의 규정력: 수령과 유일 지배체제 | 가. 절대적 존재로서의 수령과 김정일 | 24 |
|                           | 나. 혁명적 수령관과 유일지배체제   | 27 |
| 02 정책결정상의 상호작용            | 가. 상호작용의 일반 유형       | 30 |
|                           | 나. 김정일과 측근간 상호작용의 특징 | 33 |
| 03 김정일과 측근의 네트워크          | 가. 네트워크의 중심성         | 40 |
|                           | 나. 시기별 네트워크의 중심성 변화  | 46 |
|                           | 다. 김정일을 제외한 네트워크 구조  | 49 |

### 제 4장 당과 국가기구

- |                   |                                      |    |
|-------------------|--------------------------------------|----|
| 01 위상과 운영방식의 비평형성 | 가. 위상과 성격: 절대권력자의 전위조직과 집행자          | 58 |
|                   | 나. 운영방식: '수령 영도'와 '민주집중제의 중앙집권제로 변형' | 65 |

02 상호작용, 관계의 비선형성	가. 관계의 질서	73
	나. 관계의 무질서	80

## 제 5장 일반 주민

01 주민과 최고지도자간 관계: 시혜로부터의 독립	가. 물질적 자립	92
	나. 사회심리적 독립	98
02 주민과 간부간 관계: 타협과 기생	가. 생존전략으로서의 흥정과 타협	100
	나. 중간간부의 기생과 주민의 불만	105
03 일반 주민간 관계: 사적 관계망의 팽창	가. 개인주의 확산, 가족의 복귀, 사적 영역의 팽창	110
	나. 시장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의 진화	116
	가. 행위의 규칙	119
04 행위의 규칙과 창발성의 영역	나. '창발'의 영역: 외부 문화의 유입과 소통, 대항 담론 형성	130

## 제 6장 결론 / 137

## 참고문헌 / 145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3

〈표 II-1〉 통제의 사이버네틱 위계	9
〈표 II-2〉 사회적 창발성	16
〈표 III-1〉 현지도 수행 횟수 순위	41
〈표 III-2〉 주요 인물의 중심성 순위(노드중심성 지수 이용)	43
〈표 III-3〉 당 간부의 중심성 순위(노드중심성 지수 이용)	44
〈표 III-4〉 군부 인사의 중심성 순위(노드중심성 지수 이용)	45
〈표 III-5〉 1996~2008년 김정일 현지도 수행시 상호접촉 횟수	51

〈그림 II-1〉 사회체계와 기능	8
〈그림 II-2〉 정치체계	11
〈그림 II-3〉 북한의 국가통치 구조	19
〈그림 II-4〉 체제위기 상황에서의 국가-사회관계	20
〈그림 II-5〉 북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자기조직화	21
〈그림 III-1〉 경쟁모델	31
〈그림 III-2〉 형식주의모델	32
〈그림 III-3〉 합의모델	33
〈그림 III-4〉 북한 권력중추부의 정책결정 모델	35
〈그림 III-5〉 북한 주요 인사의 네트워크	46
〈그림 III-6〉 당 간부 네트워크	48
〈그림 III-7〉 군부 인사 네트워크	49
〈그림 III-8〉 김정일을 제외한 북한 주요 인물의 네트워크 구조	50
〈그림 IV-1〉 조선노동당 구조(2009년 10월 현재)	60
〈그림 IV-2〉 중앙국가기구 구조(2009년 10월 현재)	63
〈그림 IV-3〉 북한 군당위원회 기구도	79



# 제1장

## 서론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 제1장

## 서론

탈냉전 이후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심각한 경제·식량 위기를 겪었다.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사회통제는 이완되고 장마당이 확산되는 등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와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여 김정일 정권은 부분적인 개방을 실시하여 외부의 지원을 끌어들이는 한편, 사회 감시망을 확대하고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사회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후계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대내외에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체제안보의 보루로서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점차 개혁·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은 북한도 장기적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 사례를 적용하여 북한의 급진적 또는 점진적 체제변화 가능성을 논의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권의 전반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근본적인 변화없이 장기간 유지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또는 체제 내구력 등을 평가하는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 사례를 적용한 연구들은 북한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될 체제변화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균형지향적인 사회과학 이론에 준거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북한체제의 안정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변화잠재력을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포기라는 역사적 대세를 거스르고 근본적인 체제변화를 기피하면서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은 경제·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정권 안정을 유지하는 원인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균형(평형)을 흔들

어 놓을 수도 있는 변화잠재력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보다 복합적인 이론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간 추진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연구’ 중 1차년도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체제 내부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사회는 각 개체가 모여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자기조직의 원리에 따라 창발적으로 질서구조를 만들어낸다. 복잡계 연구의 핵심은 어떻게 개체간 상호작용에 의해 집단적 패턴이 창발적으로 생성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혼란하고 복잡한 거시적인 것에서 미시적인 하나의 규칙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복잡성과학을 활용한 분석은 보통 3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으로 시작된다. 첫째는 분석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것인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경계, 행위자, 각각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등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는 분석방식 및 도구를 결정하는 것이다. 분석의 목적을 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그런데 복잡계의 특징은 일정한 외부요인이나 법칙보다는 계(system)를 이루고 있는 많은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도구로서 행위자 기반 모형(ABM)이 널리 활용된다. 행위자 기반 모형은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환경과 행위자가 활동하는 시스템 공간 속에서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유용하다.

여기서는 북한체제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체제의 행위자를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상에 따라 핵심부, 중간부, 하층부로 구분하고 분석의 편의상 3개 행위자를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권력중추부(Inner circle), 당 및 국가기구, 일반 주민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이에 앞서 본 연구는 II장에서 복잡계 이론의 주요 내용을 시스템 이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적 요인들을 다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복잡계 이론에 따른 새로운 분석틀’(복잡계 분석틀)을 제시한다.



# 제 2 장

## 복잡계 이론과 북한 체제

북한 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 제2장

# 복잡계 이론과 북한체제

### 1. 복잡계 이론

복잡계는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각기 개별적 특성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나는 시스템(system)을 의미한다.<sup>1)</sup> 그런데 복잡계 개념과 이론은 단일한 이론체계가 아니다. 복잡계 이론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 내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질서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는 공통의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각기 동시에 발전되어온 이론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즉,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카오스이론, 인공생명, 프랙탈, 유전자 알고리즘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진화경제학, 카오스 경영, 공진화 등의 이름으로 발전되어 온 이론들을 총괄하는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산타 페연구소가 이전까지 각 학문영역에 나뉘어져 있던 다양한 연구의 흐름을 통합하는 작업을 1980년대에 추진하면서 이들을 모두 복잡계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취합함으로써 공식화된 것이다.<sup>2)</sup>

복잡계 이론의 특징은 뉴턴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근대 과학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그 방법론으로서의 요소환원주의(reductionism) 패러다임에 대비되는 새로운 사유의 준거틀이라는 것이다.<sup>3)</sup> 뉴턴 물리학에서 보는 세계는 시계처럼 정확하고 예측이 가능한 세계이다.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에서는 복잡한 현상을 몇 개 중요한 변수로 환원하여 일반법칙을 제시하고, 평형(equilibrium)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된 일반적 법칙에 의거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단순하고 질서정연한 세계관을 갖는 뉴턴의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1) 윤영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민병원·김창욱 편, 『복잡계 워크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2) 미첼 월드롬, 김기식·박형규 옮김, 『카오스에서 인공생명으로』 (서울: 범양사, 1995).

3) 에릭 바인허커, 안현실·정성철 옮김, 『부의 기원』 (서울: 랜덤하우스, 2007).

입각한 전통적인 사회과학은 사회적 현상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쪼개어 이들 중 중요한 몇 가지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선형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한다. 또한 사회체제의 평형(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이론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서 단순한 인과적 결정론과 방법론적 환원주의로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상호 연관된 복잡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이론을 도입하였다.

시스템이란 “서로 연관작용 관계에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 전체성” 즉,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를 의미한다.<sup>4)</sup> 시스템이론은 ‘많은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성’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잡한 현상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이론에서 말하는 복잡성과 복잡계에서 말하는 복잡성은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평형이론에 입각한 기존 시스템이론의 복잡성은 구조와 역할의 다양한 분화를 의미한다. 즉, 다양한 하위체계의 전문화와 자율성이 제고되고 조직이 세분화되는 것을 뜻한다. 여하튼 사회과학 분야의 시스템이론 관점에서 보면, 1950~60년대 구조기능주의이론과 연계되어 발전된 시스템이론은 제1세대 시스템이론, 1970년대 이후 카오스, 사이버네틱, 엔트로피 이론 등을 도입하여 보다 역동적인 시스템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제2세대 시스템이론, 그리고 1980년대부터 산타페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된 복잡계 이론은 제3세대 시스템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 가. 제1세대 시스템 이론

제1세대 시스템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파슨즈(Talcott Parsons)는 행위체계이론에 기초를 두고 사회체계(social system)를 설명하였다.<sup>6)</sup> 파슨즈는 행위체계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유기체, 인성(personality)체계, 사회체계, 문화체계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행위유기체

4) 오란 R. 영, 진덕규 옮김, 『정치학이론체계』 (서울: 법문사, 1985), pp. 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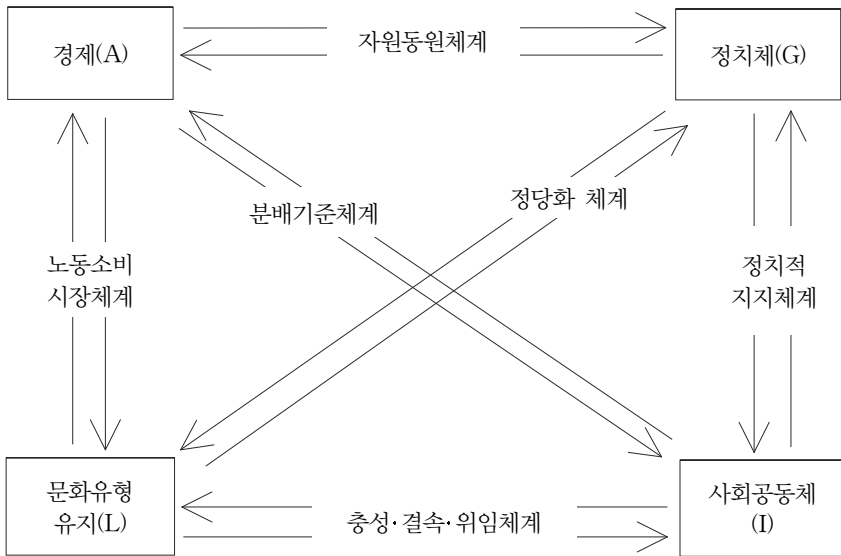
5) R. Keith Sawyer, *Social Emergence: Societies As Complex Syste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6) Talcott Parsons,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ew York: McGraw, 1937): 조나단 터너, 정태환 외 공역, 『현대 사회학 이론』 (서울: 나남출판, 2002), pp. 61~76에서 재인용.

(behavioral organism)는 유기체가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시킨 생태학적 행동유형, 인성체계는 개인의 욕구성향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 사회체계는 다수의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문화체계는 이념·가치·신념과 기타 광범위한 상징적 유형 등과 관련된 체계를 의미한다.<sup>7)</sup> 네 가지 행위체계는 각기 적응(Adaptation), 목표달성(Goal attainment), 통합(Integration), 잠재성(Latency)/유형유지(pattern maintenance)라는 기능(AGLI)을 수행한다.

파슨스는 AGLI 기능에 입각하여 사회체계를 경제(A)·정치체(G)·유형유지(L)·사회공동체(I) 등 네 가지 하위단위로 분류하였다.

<그림 II-1> 사회체계와 기능



출처: Talcott Parsons and Neil J. Smels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6), p. 68; 田野崎昭夫 編, 송정부 옮김 『파슨스의 사회이론』 (서울: 재동문화사, 1985), p. 107.

사회체계의 하위단위들 사이에서는 경제는 화폐, 정치는 권력(power), 사회공동체는 설득력, 유형유지는 신뢰 등을 교환매체로 사용하여 긴밀한 상호

7) Talcott Parsons and Neil J. Smels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6), p. 68; 田野崎昭夫 編, 송정부 옮김, 『파슨스의 사회이론』 (서울: 재동문화사, 1985), p. 107, p. 133~135.



작용이 진행된다. 파슨즈에게 있어서 사회공동체는 공동의 가치에 입각하여 결속감과 충성심을 만들어내는 자율적인 조직을 의미하며, 정치는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구성원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파슨즈의 사회체계 모델에서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도덕적 충동이다. 정치권력을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힘으로 보고 있는 파슨즈 이론체계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강제력(force)의 역할은 지엽적이고 사소한 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sup>8)</sup>

파슨즈는 인공두뇌적 위계체계(cybernetic hierarchy) 원리를 이용하여 행 위체계 유형에 기능적인 중요도에 따른 위계질서를 부여하였다.<sup>9)</sup>

<표 II-1> 통제의 사이버네틱 위계

전반적 기능	체계	체계 수준들간의 상호관계	
잠재성(L)	문화체계		
통합(I)	사회체계	정보적 통제	↑
목표달성(G)	인성체계	↓	에너지 조건
적응(A)	유기체		

출처: Talcott Parsons, *Societies: Evolutionary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 p. 28.

인공두뇌적 위계질서 논리에 의하면, 위계질서 정점에는 고도의 정보를 지닌 통제행위가 있고 밑바닥에는 원동력을 지닌 조건행위가 있다. 위계상의 각 하위체계는 바로 위의 체계에서의 행위에 필요한 에너지 조건(energetic conditions)을 제공한다. 파슨즈는 문화체계를 가장 중시하는 한편,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유기체를 낮은 단계로 간주하는 정보적 통제의 서열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문화체계는 사회체계를, 사회체계는 인성체계, 인성체계는 유기체를 각기 정보적으로 규제한다.

8) Alvin W. Gouldner,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New York: Basic Books, 1970): 알빈 W. 굴드너, 김쾌상 옮김, 『현대 사회학의 위기』 (서울: 한길사, 1982), pp. 353~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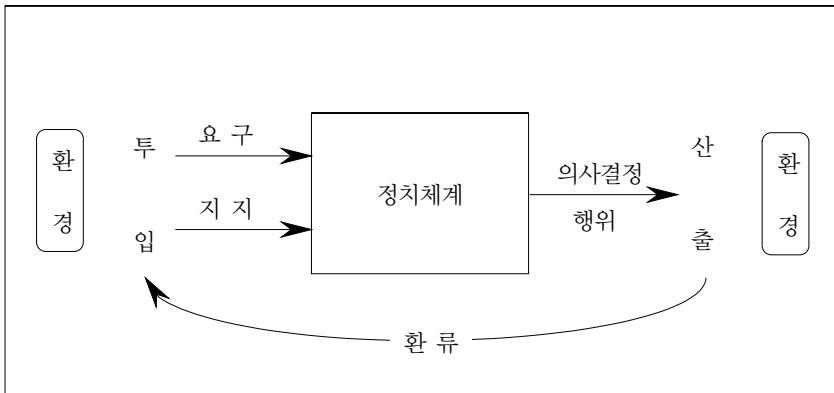
9) J. H. 터너, 김진균 외 옮김, 『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1989), pp. 58~90.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생산기술의 변화나 경제·사회적인 변화는 문화체계와 인성체계의 정보적 통제에 의해 쉽게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즉, 이념에 의해 사회화된 주민들의 인성체계가 바뀌지 않으며 경제적인 조건의 변화만으로는 사회체계의 변동을 촉발하지 못한다. 또한 사회체계 내부의 일부 변화도 문화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혁명적 상황으로 발전되기 어렵다. 평형과 안정을 중심으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한 파슨즈는 정보적 통제의 최고 수준에서의 이념과 가치관의 변동을 혁명적 변동으로 보며 이러한 현상이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고 파악하고 있다. 파슨즈의 사회체계 이론은 안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평가를 받았다.

파슨즈의 사회체계 이론은 정치학에서의 체계적 분석을 자극하였다. 정치학에서 정치체계(political system)이론은 이스턴(David Easton)에 의해 제시되었다.<sup>10)</sup> 이스턴의 정치체계이론에서 핵심개념은 환경과 정치체계간의 교환관계 분석을 위한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이다. 투입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로 이루어져 있다. 정치체계에 대한 요구는 재화와 용역의 배분에 대한 요구, 행태의 규칙에 대한 요구, 정치적 참여 요구, 정보에 대한 요구 등이 있다. 정치체계에 대한 지지는 물질적 지지, 법규에의 복종, 참여적 지지, 공적 권위에 대한 존경 표명 등이 있다. 정치체제는 투입된 요구를 정책결정과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하여 산출시킨다. 사회적 환경에 산출된 정책은 다시 환류(feedback)되어 정치체계에 투입된다. 이스턴은 투입-산출 과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allocation)을 정치체계의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다.

10) David Easto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5).

&lt;그림 II -2&gt; 정치체계



출처: David Easto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5), p. 112.

알몬드(Gabriel A. Almond)와 파우엘(G. Bingham Powell)은 이스튼의 모델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조기능주의 접근법에 의한 정치체계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sup>11)</sup> 이들은 정치체계를 비교할 때 체제능력(systems capabilities), 전환기능(conversion functions), 체제유지와 적응기능(system maintenance and adaptive functions)의 정도 차이를 분석할 것을 강조한다.

체제능력은 체제가 환경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또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다. 체제능력의 범주는 투입과 산출의 유형에 대한 분석에서 직접 나오는 것으로서 규제·추출·배분·상징조작 및 반응능력으로 분류된다. 전환기능은 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기능으로서 요구와 지지로 표명된 투입을 권위적인 결정을 통하여 산출로 전환시키는 기능이다. 전환기능에는 이익표출·이익통합·법률제정·법률적용·법률판결·정치적 의사소통 등 6개의 기능이 포함된다. 체제유지와 적응기능은 체제의 낡은 부속품을 수선하거나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기능을 뜻하는데 정치체제에서는 정치적 사회화와 정치적 충원을 의미한다.

알몬드와 파우엘은 체제능력의 변화는 전환기능의 성과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은 또한 정치사회화 및 충원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정치발전

11)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1966); 가브리엘 A. 알몬드, G. 빙햄 파우엘 공저, 김영훈·이종익 공역, 『비교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6).

문제도 결국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정치발전 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이 직면한 정치발전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이론으로 평가받았다.

이스튼과 알몬드 같은 다원주의 정치이론가들은 기존의 국가 중심적 이론은 협소하고 제한적이라고 비판한다.<sup>12)</sup> 이들은 정치는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의 모든 인간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이론적으로 다른 특별한 지위가 부여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국가를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무해(無害)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원주의 입장은 정치는 복합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가이론보다 체계이론을 적용할 때 더 잘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3)</sup> 사실 체계이론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인 도구들을 많이 개발하였다. 그러나 경제·사회 문제와의 연계성을 배제하고 정치현상만을 중심으로 단순화시킨 정치체계 이론은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의 강압적인 사회통제와 경제·사회적 갈등 등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 나. 카오스 이론과 제2세대 시스템 이론

1950~1960년대에 유행한 파슨즈의 사회체계이론, 이스튼의 정치체계이론,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이론 등은 정치·사회적 행위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평형이론에 입각한 이들의 이론은 사회변동, 제3세계 근대화 등 비평형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사회적 구조변화에 대해 적실성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사회과학자들은 카오스이론, 엔트로피이론 등을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이론의 정태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2세대 시스템이론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루만(Nikals Luhmann)의 사회체계이론<sup>14)</sup>과 베일리(Kenneth

12) David Easton,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New York: Routledge, 1990); 데이빗 이스튼, 이용필 옮김, 『정치구조의 분석』 (서울: 인간사랑, 1991), p. 33~35.

13) John Hoffman, *State, Power and Democracy: Contentious Concepts in Practical Political Theor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John Hoffman, 이종호 옮김, 『국가와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신아출판사, 2000), p. 24.

14) 니클라스 루만, 박여성 옮김, 『사회체계이론 1』 (파주: 한길사, 2007).

D. Bailey)가 저술한 사회 엔트로피이론<sup>15)</sup> 등을 들 수 있다. 이용필 교수가 제시한 「남북한 통합의 복합적 체계 모델」 등은 제2세대 이론으로 분류된다.<sup>16)</sup> 이용필 교수는 시스템이론, 카오스이론, 비평형 열역학적 접근법, 생명 체계론적 접근법, 사회 엔트로피 분석방법 등을 도입하여 복잡계 이론이 체계화되고 있던 초기 상태에서 유행한 개념들을 남북한 통합문제에 적용한 선례를 보여 주었다. 이 중 특히 카오스이론은 정치·사회적 불안 및 체제변동 등과 관련된 비평형상태의 역동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들을 제공하였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모든 시스템은 외부와 고립되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 모든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 열역학 제2법칙에서 가정하는 닫힌 시스템에서는 단순한 열평형상태가 결정론적으로 정해져 있고, 모든 물질과 현상의 방향은 엔트로피 증가의 방향이며 궁극적으로 ‘열 죽음(heat death)’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진화하며 분화되는 생명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는 생명체 진화의 과정에서 복잡성이 증가하면서도 일정한 질서가 나타나거나, 무정부상태의 사회 속에서도 협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열역학 법칙은 이러한 모순된 현상에 대해 적실성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프리고진(I. Prigogine)은 닫힌 시스템에서는 엔트로피가 내부에 축적되지만 환경과 에너지, 물질, 정보 등을 교환하는 열린 시스템은 엔트로피를 내보냄으로써 시·공간적으로 안정된 구조가 생기고 유지된다는 점을 밝히는 카오스 이론을 제시하여 열역학 이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sup>17)</sup>

프리고진은 전반적인 에너지 양이 언제나 보존된다는 고전적인 열역학의 개념에 반대하여, 오로지 닫힌 시스템의 경우에 한하여 에너지 양의 보존이

15) Kenneth D. Bailey, 이용필 옮김, 『사회엔트로피 이론』 (서울: 신유, 1996).

16) 이용필 외, 한국체계과학회 편, 『시스템과학과 국가정책』 (서울: 신유, 1997); 이용필, 『사회과학연구와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7) 일리아 프리고진·이사벨 스텐저스, 신국조 옮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서울: 정음사, 1989); 일리아 프리고진, 이덕환 옮김, 『확실성의 종말: 시간, 카오스, 그리고 자연법칙』 (서울: 사이언스북스, 1997).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이 예언하는 지속적인 무질서의 증가와는 달리 비평형상태에서 질서의 창발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주장한다. 시스템의 내부와 외부 간의 에너지의 흐름이 차단되지 않은 열린 시스템 상태에서는 외부적 인자가 시스템의 내부적 평형상태를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혼돈상태가 발생하여 안정적 형태와 혼돈상태가 공존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상태는 평형상태, 평형에 가까운 상태, 평형상태에서만 상태, 비평형상태라는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중 창조가 일어나기 쉬운 상태는 세 번째, 즉 완전한 혼돈도 아니고, 완전한 질서도 아닌 ‘평형에서만 상태’이며, ‘혼돈의 가장자리’란 바로 이 상태를 뜻한다. 평형상태에서 시스템의 요동은 진정되지만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구조는 끊임없이 요동하고, 결국 작은 요동이 격화되어 분기점에 이르면 종래의 구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구조가 나타난다. 즉,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부분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프리고진은 비평형상태에서 에너지의 끊임없는 출입을 통해 구성요소가 자발적으로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생성되는 안정된 구조를 소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로 부르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자기조직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카오스이론의 핵심 개념들은 제2세대 시스템 이론에서 사회적 변동, 조직 혁신, 기업 경영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유적 표현으로 자주 인용되었으며, 그 후 복잡계 이론이 형성되는 골격이 되었다.

#### 다. 제3세대 시스템이론: 복잡계 이론

1984년 복잡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산타페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산타페연구소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복잡성의 중요성을 인정한 노벨상 수상자 겔만(M. Gell-Mann) 등을 주축으로 설립되어 물리학, 수학, 생물학, 컴퓨터과학, 경제학, 경영학, 역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으로 학제간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카오스이론, 프랙탈이론 등을 복잡계 이론으로 포괄하여 점차 통합된 학문적 체계를 갖추

었다.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계산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복잡계 이론은 급속히 발전되어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으로 부각되었다.

복잡계는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 비선형적 상호작용, 피드백 루프, 경계가 불분명한 열린 시스템, 적응하는 구성요소 등 5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sup>18)</sup>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요소들의 차원을 넘어 연관관계와 상호작용을 보아야 한다.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네거티브 피드백의 형태로 변화를 진정시키기도 하지만 포지티브 피드백의 형태로 변화를 증폭시키기도 한다. 비선형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요동은 구성요소들 사이를 전파해 나가면서 증폭되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열린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 에너지·정보·물질·사람 등을 끊임없이 주고 받으며 새로운 질서를 창발해 낸다. 여기서 ‘창발성(emergence)’이란 개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할 때 전체가 자연히 새로운 질서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9)</sup>

사회과학에서 제1세대 시스템이론과 제2세대 카오스이론은 현재 복잡계 이론의 부분 집합에 속하고 있지만 ‘제3세대 시스템이론’으로서의 복잡계 이론의 특징은 ‘비선형적인 성질과 창발적 진화’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별성이 부각된다. 제1세대 시스템이론도 비선형성을 다루지만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는다”는 개념은 다루지 않는다.

한편, 카오스이론은 비선형적 성질과 창발성을 강조하지만, 주로 혼돈상태의 복잡계만 다룬다. 이와 대조적으로 복잡계 과학은 혼돈 상태, 안정 상태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창조적 적응지대 3가지 상태의 존재를 인식하고, ‘적응과 진화’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sup>20)</sup> 현재 사회과학에서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조직이론, 진화경제학, 네트워크,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창발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단일한 이론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사회학자 소얼(R. Keith Sawyer)은 사회적 창발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창발성 영역

18) 조현일, 『1000』 (서울: 접힘/펼침, 2008), p. 37.

19) 스티븐 존슨, 김한영 옮김, 『이머전스』 (파주: 김영사, 2004).

20) 로저 르윈·버루트 레진, 김한영 옮김, 『컴플렉스노믹스』 (서울: 황금가지, 2002), p. 36~37.

은 Level B(상호작용)에서 Level D(안정적 창발)에 걸쳐있다.

<표 II-2> 사회적 창발성

<p><b>사회구조 (Level E)</b>                  성문법규(규칙·법·규제); 사회하부구조(건축·도시계획·통신·교통망)</p>
<p><b>안정적 창발 (Level D)</b>                  집단 문화, 집단 용어, 일상 대화, 공유된 사회적 관행, 집단적 기억</p>
<p><b>일시적 창발 (Level C)</b>                  토픽, 문맥, 상호작용 틀, 참여 구조, 상대적 역할, 신분</p>
<p><b>상호작용(Level B)</b>                  담화 형식, 상징적 상호작용, 협동, 협상</p>
<p><b>개인적 행위 (Level A)</b>                  의도, 대리인, 기억, 성격, 인식 과정</p>

출처: R. Keith Sawyer, *Social Emergence: Societies as Complex Syste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211.

복잡계 이론에서 창발성은 미시적 행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거시적인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비롯한 거시적인 총체적 효과는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카오스이론은 과정 초기의 미세한 변동이 과정의 끝에서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 예측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카오스이론에서 말하는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을 사회적 현상에 대비하면 우발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사건의 진행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비가역적인 정치·사회적 변동은 단순한 변수를 이용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평형상태에서 새로운 질서가 창발하는 현상을 다루는 복잡계 이론은 정치·사회적 변화 예측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지만 복잡한 과정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크다.



## 2. 북한체제에 대한 복잡계 적용

### 가. 복잡계 이론 적용 가능성

북한은 전체주의국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체주의(Totalitarianism)는 국가가 시민의 활동·사상·태도 등 사회 모든 영역을 총체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를 지칭한다.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는 파시즘·나치즘·볼셰비즘 등 전체주의체제의 특성을 ① 정교한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존재, ② 일인 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 대중정당 통치, ③ 비밀경찰에 의한 심리적·물리적 테러체제, ④ 라디오·신문·영화 등 대중매체에 대한 총체적 독점, ⑤ 무장력의 효율적 독점, ⑥ 중앙집권적 통제·지시 경제체제 등의 여섯 가지로 기술하였다.<sup>21)</sup>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 김일성 수령 중심의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외부의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엄격히 통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및 당·국가기구의 철저한 사회통제를 통하여 체제안정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체주의체제의 경우에는 복잡계 이론의 적용이 한계가 있다. 그러나 1989년과 1991년에 걸쳐 폴란드·동독·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붕괴되자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이념적 기반과 경제적 기반이 크게 흔들리며 폐쇄체제에 균열을 보이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이러한 북한의 사회·경제적 혼란이 복잡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소련·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심각한 경제·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탈북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겪게되었다. 북한체제의 위기상황에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 정권은 체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방을 실시하는 반면,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계획경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지배층의 부패는 만연되어 있고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이반하여 국가의 사회통제력도 점차 이완되고 있다. 배급제가 붕괴된

21)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은 장마당과 암시장 등을 통해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북한 도시·농촌지역에는 원시적 시장경제가 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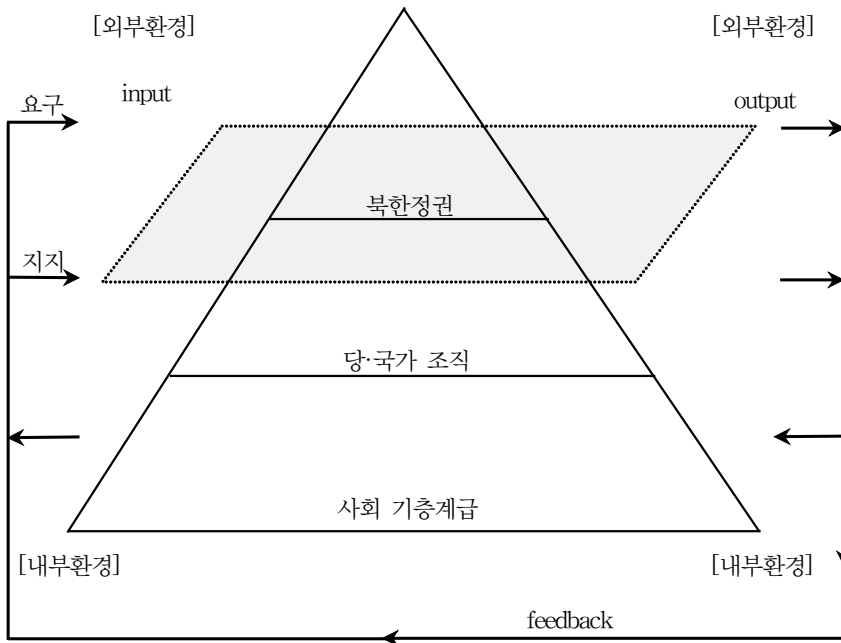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계획부분을 강화하고 국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북한체제는 이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제각기 생존을 추구하고 새로운 관행을 습득해 가고 있으며, 보위부·보안성 요원들은 뇌물을 매개로 상인들과 공생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경제·사회적 혼란상황에서 각 계층별로 자기조직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나. 복잡계 분석틀

복잡계란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각기 개별적 특성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복잡계 이론에 의해 북한체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취급하여 논의하는 거시적 구조분석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미시적 행태분석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요소환원주의를 거부하는 복잡계 방법론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두 가지 분석수준은 하나의 분석틀에 통합되어 총체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상 이를 각기 개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국가통치 구조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어서 국가의 통제력을 벗어나 사회적 무질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가 창발하는 동태적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한 국가·사회관계를 배경으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구도를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lt;그림 II-3&gt; 북한의 국가통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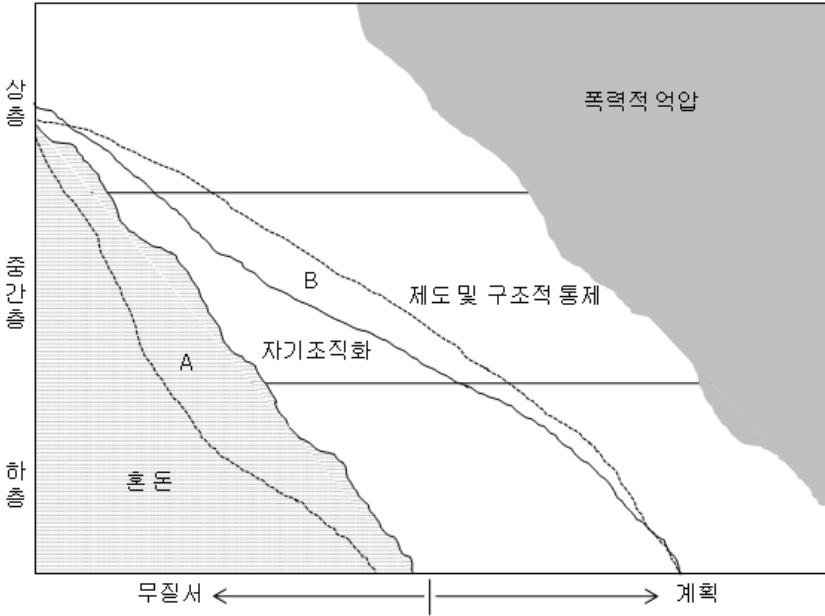
하나의 국가로서의 북한체제는 <그림 II-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내적으로 당·국가조직이라는 정치제도를 수립하고 법·규범 및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여 계급으로 분화된 북한사회를 통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주권적 행위자로서 국제사회(외부환경)와 자주적인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정치체제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북한정권도 내부환경과 요구 및 지지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을 지속해야 한다. 즉, 주민들의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그 업적을 바탕으로 다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주의적인 위계질서의 정점에 위치한 김정일 정권은 폐쇄적인 정책결정구조를 형성하고 자의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집행하고 있다. 당·국가기구가 사회집단에 깊숙이 침투하여 강압적인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 북한체제에서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치체제는 작동하지 않고 통치체제만 존재한다.

국가가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체주의체제의 경우에는 복잡계 이론이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의 사회·경제적 혼란은 이를 적용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국가-사회관계를 복잡계 이론의 거시적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그림 II-4>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II-4> 체제위기 상황에서의 국가-사회관계



- A: 혼돈 지역으로 자기조직화 확대
- B: 제도 및 구조적 통제 지역으로 네트워크 확대

북한체제는 국가의 통제와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북한 행위자들은 새로운 행위 패턴을 구축하고 자기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가 창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위자들이 처한 입장은 국가 권력 위계질서에 따라 각기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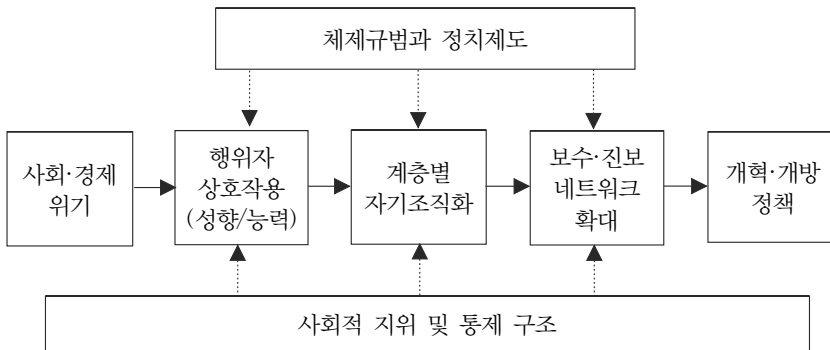
하층 행위자들은 사회·경제적 혼란과 무질서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생계 유지와 신변안전에 크게 고통을 받는다. 이들은 제각기 생존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통해 새로운 관행을 습득해 나간다. 중간층과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행위자들이 무질서와 혼란에 의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이에 비례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강도가 약해진다. 최상

층에 위치한 북한정권과 지배계층은 법·규범 및 물리적 강제력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상층 행위자도 아래로부터 확산되어 온 혼란과 무질서 파급효과의 충격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보수·개혁 파벌로 분리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인다. 중간층에 위치한 당·국가 관료들은 정권에 순응하여 사회통제에 앞장서는 한편, 하층 주민들과 시장에서 공생하는 방향으로 자기조직화 해나갈 수 있다. 향후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북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자기조직화 역량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림 II-5>는 북한체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5> 북한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자기조직화



북한 행위자들은 주어진 현실에 대해 제한적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며, 개인적 고립, 타자 동조, 연대·결속, 상호경쟁, 적대적 대립 등의 행위 양식을 전개한다.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반복됨에 따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집단 사이에 자기조직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자기조직화는 진공상태에서 집단 행위자들의 내부역량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들이 놓여있는 정치·사회적 공간의 제약, 즉 체제규범·사회계급·국가통제 등의 구조적인 영향을 받으며 진행된다.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혼돈과 무질서가 확산되는 상황에

서 권력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배연합의 결속을 강화한다. 정권 차원의 권력 네트워크는 외부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확대될 수 있지만, 동원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이 그 한계를 규정한다.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해진 상태에서는 상층 계층 사이에서도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될 수 있다.

당·국가기구를 중심으로 개인적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상층과 중간층에 위치한 관료들은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체제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 정책방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행위자 네트워크는 향후 북한체제가 추구하는 목표에 관해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네트워크로 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네트워크가 확대되면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권력에 소외되어 있는 식량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층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자율적인 연대를 강화하게 된다. 이들의 결속은 비정치적인 시장적응형 네트워크로 발전되어 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체제집단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 당·국가기구의 하부조직이 건재한 상황에서 하층 주민들의 자기조직화는 비정치적인 시장적응형 네트워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가의 억압이 완화되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주어질 경우에는 반체제집단의 자기조직화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변화가 불가피한 임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는 북한에서 행위자들이 자율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리고 이들의 자기조직화가 정치적 세력으로 발전되어 갈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계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북한체제는 미래에 대한 단순한 직선적인 예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체제 행위자들의 실질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구체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 제 3 장

## 김정일과 측근

북한 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 제3장

## 김정일과 측근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법과 제도에 의해 지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와 소수의 그의 측근이라는 개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결정과정이나 그 결과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흔히 비판을 받는다. 특히 역사거나 정치학자들은 개인들이 결과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원인이라는 주장에 매우 회의적이다. 개인에 치중한 분석은 필연적으로 부정확하기 마련이며 개인이 그 속에서 행동하는 환경과 제도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상 오도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므로 체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정치체제이든 최고지도자와 권력 핵심에 속하는 극소수의 인물들이 주요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들의 특징이 정치체제의 핵심요소로서 세밀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 1. 상호관계의 규정력: 수령과 유일지배체제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수령으로 호칭되지만 북한에서 수령은 단순히 최고의 직책을 가진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인적인 능력과 인격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이다. 수령이라는 독특한 존재가 북한체제를 수령체제로 규정하게 하는 이유이자 그 속의 모든 행위자를 지배하는 구속력이다.

#### 가. 절대적 존재로서의 수령과 김정일

북한 특유의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중심 명제로서 수령이라는 존재와 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밝히고 있는데 그 골자는 모든 것의 중심에 인민대중이 있고 인민대중의 중심에 수령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수령론의 이론적 배경인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이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자주성이란 인간이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사회적 속성이며, 창조성이란 것은 목적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이며, 의식성이란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속성을 말한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간관에 입각하여 자연과 사회를 사람에 의한 개조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개조과정을 통해서 사람 자체의 지위와 역할도 높아진다고 주장한다.<sup>22)</sup>

이와 같은 사람 중심의 철학적 원리는 북한의 역사관인 ‘사회역사원리’의 기본 토대를 이룬다. 북한의 역사관은 역사가 합법칙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점에서 유물사관과 동일하지만 그 발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물질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라는 사회역사원리가 도출된다.<sup>23)</sup> 즉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과 모든 사회적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이러한 투쟁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자신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해 실현된다고 전제하고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옳바른 지도’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인민대중은 “운명개척의 길을 알지 못하며 자기의 생활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욕망과 념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현실로 전변시킬 방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4)</sup> 다음의 글은 역사발전과정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지도’가 왜 필요한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22) 리성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171~246.

23)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8~344.

24) 위의 책, p. 203.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나 스스로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은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전일성과 조직성을 가질 때에만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인민대중은 현실적으로 개별적 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지와 이해관계, 지향과 요구를 달리하는 여러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속하는 계급과 계층들, 개별적 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에 묶어세우는 올바른 지도를 떠나서 인민대중은 집단으로서의 전일성과 조직성을 가질 수 없다.

인민대중은 옳은 지도를 받을 때에만 그 개별적 성원들과 계층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지향과 요구를 가지고 통일적으로 활동하는 공고한 집단으로 될 수 있으며 조직되고 단결된 전일적인 대오로 될 수 있다.<sup>25)</sup>

이 논리에 따르면 인민대중은 그냥 대중이 아니라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어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해야만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것이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다. 다시 말해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자면 탁월한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운동은 그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것만큼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

25) 위의 책, p. 200, 202.

도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sup>26)</sup>

주체사상에서 수령론이 도출되는 원천은 위에서 보듯이 ‘대중과 지도의 결합’이다. ‘대중과 지도의 결합’이라는 이 명제로부터 당과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을 이끌어내어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올바르게 영도하는 존재의 필요성이 도출되고 그 귀착점이 수령이다. 이 점에서 인민의 역할을 중시하는 역사적 유물론과 결정적으로 다른데, 이것이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논리임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현명한 령도자”라고 한다. 따라서 수령은 노동계급과 당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등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 방송은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우리의 수령님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선전했다.<sup>27)</sup>

#### 나. 혁명적 수령관과 유일지배체제

수령론에 따르면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성에 대한 자기의 지향과 요구를 조직적 의사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수령뿐이다. 따라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조직적 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자 대표자이며 인민대중 속에서 최고의 영도적 지위를 차지

2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57~158.

27) 『조선중앙방송』, 1994년 8월 8일.

하는 최고뇌수이다.

인간활동에서 뇌수의 지위가 그러하듯이 역사발전과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령의 지위는 ‘절대적’이기 마련이다. 거꾸로 인민에게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인식하여 수령을 진심으로 최고 지도자로 받드는 자세와 입장이 요구된다. 곧 수령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드는 관점이 강요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이다.<sup>28)</sup>

‘혁명적 수령관’에서는 수령만이 역사발전의 주체이고 수령은 무오류의 인간으로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수령만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은 의심없이 무조건적으로 수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특히 김정일은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sup>29)</sup>

그러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역사적 운동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하는 존재가 수령이지만 그는 자신의 지도를 어떤 장치를 통해 구현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수령의 ‘영도체계’이다.

북한에 따르면 수령의 영도체계란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기구들의 총체이며 당, 국가, 단체들로 구성된다.<sup>30)</sup> 이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실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sup>31)</sup>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은 1974년에 제시된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위대

28) 혁명적 수령관에 대해 김정일은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어 나간다는 것”이라고 교시했다. 김정일,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8월 23일, 『김정일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7), p. 277.

29)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32~471.

30)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84.

31) 영도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민·한봉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영도체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77~226.

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둘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셋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넷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섯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여덟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아홉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열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sup>32)</sup>

이 원칙에 의해서 북한체제의 어떤 행위자든 그는 혁명위업의 중국적 승리를 위하여 수령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조화하고 무조건 따르는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 2. 정책결정상의 상호작용

어떤 정치체제이든 최고위 수준의 정책결정은 그 체계의 핵심요소이다. 체계의 모든 흐름과 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과 향후의 변화 여부에 대한 전망에서 고위 수준의 정책결정을 둘러싼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조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책결정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의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그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의 제약에서 훨씬 자유로운 수령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하는 북한의 경우 정책결정을 둘러싼 수령과

32)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91~124.

그 측근의 상호작용은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 가. 상호작용의 일반 유형

정책결정을 둘러싼 최고지도자와 그 측근 또는 참모의 관계를 조지 부부(Alexander L. George & Juliette L. George)는 세 가지 모델로 유형화했다. 세 가지 모델은 이념형이고 역대 미국 대통령의 경영스타일(management style)을 분석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정책결정구조가 어느 한 가지 모델에 정확히 대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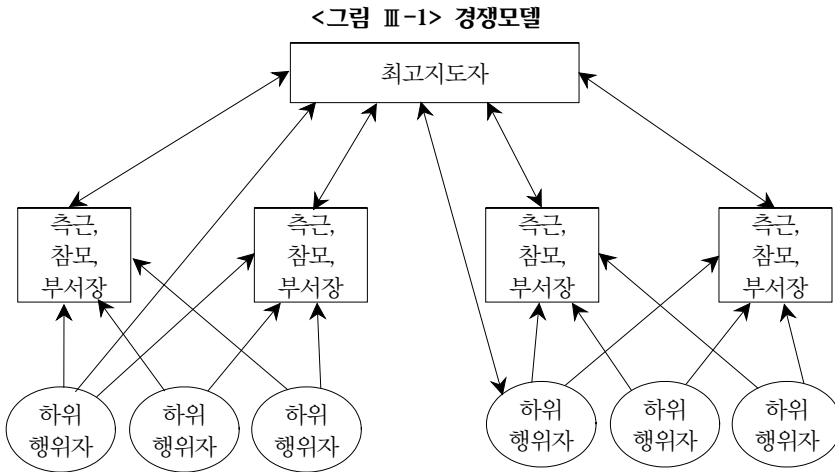
세 가지 모델이란 경쟁모델(competitive model), 형식주의모델(formalistic model), 합의모델(collegial model)인데 그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33)</sup>

첫째, 경쟁모델은 최고 정책결정자의 참모와 정부부처의 부서장들이 다양한 의견이나 분석, 제안을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개진한다. 이 때문에 이 모델은 조직상의 업무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소관 부처가 중복되는 현상을 낳기도 하며 최고지도자와 소통되는 통로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최고지도자는 특정 정책과제에 관한 임무와 권한을 각각 다른 참모와 부서장에게 동일하게 주고 이로써 그들 간의 경쟁을 의도적으로 조장한다. 반면 동일한 임무를 부여받은 참모들 사이에서는 의사교환이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고지도자는 때때로 부서장을 뛰어넘어 개인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구하기 위해 부서장의 부하에게 직접 접촉한다.

따라서 중요한 정책문제에서 최고지도자가 해결책을 찾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경쟁적인 의견이 최고지도자에게 보고된다. 최고지도자는 이 구조를 선택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자신의 정책결정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위험을 피한다.

33) Alexander L. George and Juliette L. George, *Presidential Personality and Performance*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8), pp. 203~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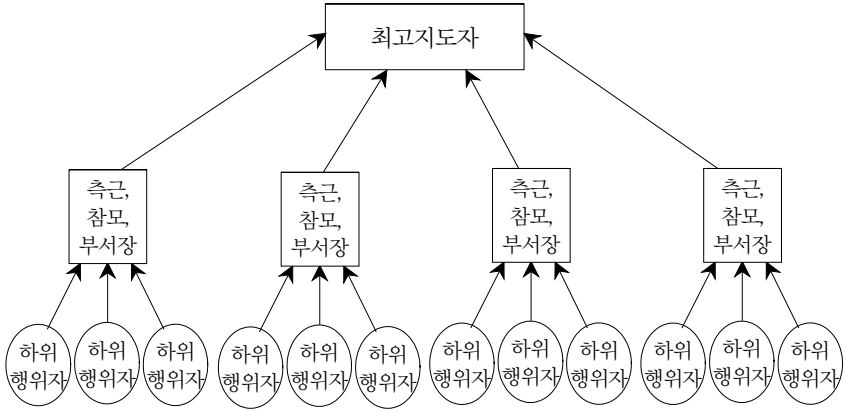


둘째, 형식주의모델은 잘 짜여진 정책결정 절차, 의사소통상의 위계질서, 조직화된 참모체계를 갖춘 가장 질서있는 모델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모델은 정책결정 참여자의 다양한 견해와 판단을 구하려 노력하지만 그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나 의견절충은 방해받는 형태이다.

최고지도자에게는 해당 참모와 부서장으로부터 전문 정보와 의견이 보고된다. 최고지도자는 부서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부서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권위를 가지고 최고지도자에게 보고한다. 각 부서장은 자기 부하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얻는다.

최고지도자는 부서장들이 해결책 모색이나 정책분석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최고지도자는 위계질서상의 채널을 고수하며 부서장을 제치고 그의 부하로부터 의견과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최고지도자는 각기 독립적인 통로로 자신에게 보고되는 전문 정보와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따라서 그 책임도 자신이 진다.

<그림 Ⅲ-2> 형식주의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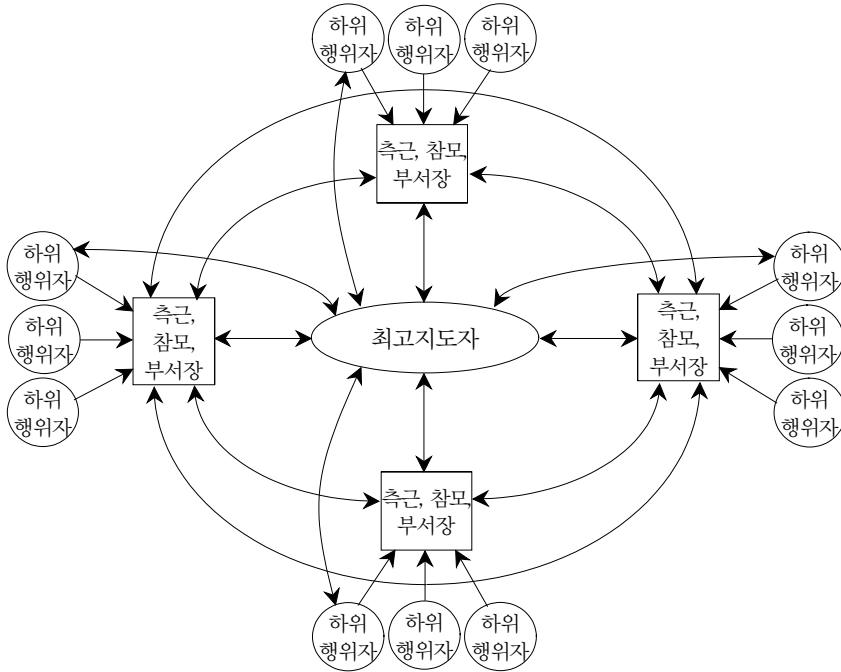


셋째, 합의모델은 위의 두 가지 모델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극복한 형태이다. 이 모델에서 최고지도자는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참모들이 가진 다양한 시각을 가능한 한 조정하고 통합하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 이 모델은 정책결정구조내의 다양성과 경쟁이라는 이점을 살리면서도 참모들로 하여금 최고지도자의 시각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편협성을 피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참모들이 같이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권장함으로써 경쟁모델이 지닌 과도한 내분, 흥정, 타협에서 벗어나게끔 해준다.

이 모델에서 최고지도자는 각 참모들을 연결하는 바퀴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참모는 팀을 구성하고 팀원으로서 문제해결에 참가하는데 팀에는 각기 다른 관점의 다양한 정보가 보고된다. 참모는 최고지도자에게 개인적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여러 대립되는 관점에서 정보와 정책대안을 숙고하면서 검증하고 창조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토론팀’의 일원으로 기능한다. 참모에게는 정책문제의 어느 한 측면의 전문가(specialist)로서보다는 그 문제의 모든 측면을 두루 살피는 다방면 지식인(generalist)으로서의 역할이 권장된다. 토론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져 각자의 견해와 판단을 솔직하게 개진할 수 있으며 지위에 따라 다르게 가질 수 있는 정보도 팀내에서는 공유하게 된다. 최고지도자는 간혹 복수의 부서에 동일한 임무를 중첩하여 주고 더 많은 정보와 개별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 부서장의 부하를 직접 접촉하기도 한다.



&lt;그림 Ⅲ-3&gt; 합의모델



#### 나. 김정일과 측근간 상호작용의 특징

정책결정을 둘러싼 김정일과 측근의 상호작용은 경쟁모델과 형식주의모델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모델의 특성이 있다는 것은 김정일이 각 기구의 최고 책임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지 않고 하위 직책의 간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임무도 주고 그들로부터 보고도 받는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당의 부장이나 내각의 상(相)보다는 부부장이나 부상(副相)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며 권력의 공식 서열이 낮은 인사에게 별도의 임무를 주기도 한다. 예컨대 외교부문의 경우 김정일이 외무상을 제쳐두고 전화로 강석주 제1부상에게 지시를 하달하고 그것을 외무상이 뒤늦게 전달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사실상 외무성에는 두 명의 수장이 존재하는 형국이었다.<sup>34)</sup>

김정일은 확고하고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시하면서 공개된 토론이나 의

34)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pp. 222~223.

견교환을 피하고 당, 정, 군의 각 보고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같은 성향은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가 모두 최고지도자인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자신이 그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형식주의모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책결정을 둘러싼 김정일과 측근 간 상호작용은 형식주의모델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노동당, 인민군, 내각, 공안기구 등을 별도로 장악하고 그것들로부터 올라오는 정보를 직접 취합한다. 그는 해당 기관에 직접 지시하며 직접 점검하는 것을 선호한다. 김정일은 한 해 평균 120여 차례의 현지시찰을 통해 국정 현장을 직접 살피고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상의 일정한 수준에서 부서간의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김정일의 지침에 따른 일상적 업무에 한정된 것이다. 보통은 그들 사이의 정보 흐름이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정의 전반을 모두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정일 뿐이다. 이는 정책결정이 일관성과 단일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사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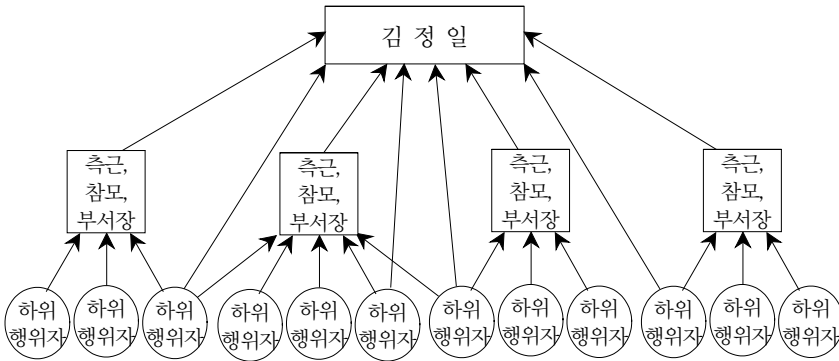
김정일이 모성에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타인에 대한 의심, 불신, 경쟁심, 질투심 등이 많고 애증과 호기심이 뒤섞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력독점에 대한 불안감 또는 초조감으로 이어져 경쟁 및 견제를 기초로 하는 정책결정구조를 선호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각 기구의 최고 책임자 외에 그 하위직책의 간부를 자신의 심복으로 삼아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공식 기구가 아닌 곳이나 복수의 기관에 같은 임무를 중복적으로 지시하여 충성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sup>35)</sup>

북한 권력중추부의 정책결정구조에서 합의모델의 요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원래 합의모델은 최고지도자의 권위가 선거에 의해 부여되는 민주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나고 사회주의체제의 경우는 권력이 분산되어 정책결정이 정치국과 같은 기구에서 합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지도체제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김정일처럼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치체제에서는 합의모델이 권력불안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쉽사리 택할

35) 김성철, “통치스타일과 정치체제의 운용,” 통일연구원 편, 『김정일 연구: 리더십과 사상(1)』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8.

수 없는 것이 된다.<sup>36)</sup>

<그림 Ⅲ-4> 북한 권력중추부의 정책결정 모델<sup>37)</sup>



북한 권력중추부의 정책결정은 김정일이 자신의 직접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주요노선과 정책을 결정하여 상의하달식으로 집행하는 과정이다. 김정일이 직접 판단, 하달한 정책들은 그 집행에서 절대성을 가진다. 노동당 규약 제1장 4조 1항과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 제4조 및 5조는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고 수령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해당 부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그것이 김정일의 사상과 의도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sup>38)</sup> 정책결정 과정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김정일의 사상과 의도인 것이다.

형식주의 및 경쟁 모델의 혼합형인 북한의 정책결정구조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책결정이 김정일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과부하(overload)에 걸려있다는 점이다. 과부하 현상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현 정치체계의 특징에서 오는 것이자 직할통치를 선호하는 그의 스타일에서 비롯된다.

1990년대 들어 김정일의 통치영역이 당을 벗어나 군 정으로 확대되면서 당을 통한 수직적 정책지도 방식은 김정일이 모든 분야를 직접 장악하는 수평적

36) 위의 글, p. 9.

37) 위의 글, p. 7.

38) 고영환,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소고,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1997), p. 68.

직할통치 구조로 전환되었다. 당 국제부와 외무성의 수직적 종속관계가 수평적 병렬관계로 전환되었고 군부에서도 인민무력부와 총정치국, 총참모부가 대등한 관계로 바뀌어 김정일의 직할통치를 받게 되었다. 당의 정책적 지도 기능이 약화되면서 주로 군사, 외교, 보안 분야 등의 조직들은 당 비서국의 해당 담당부서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김정일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sup>39)</sup>

이처럼 국정전반이 권력자 일인에게 집중되면 업무부담의 가중과 혼동, 정책결정에서의 객관성과 합리성, 신속성의 결여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된다. 김정일은 노동당, 내각,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권력, 행정, 공간기구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문건을 전부 읽고 단독으로 처리하는데 일주일여 접하는 문건의 분량이 약 500쪽 이상이라고 한다.<sup>40)</sup> 자신에게 보고 되는 문건의 양이 증가하여 어떤 경우에는 그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되는 정책안을 모두 결재해 주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sup>41)</sup> 1995년 평양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설치에 대해 동의, 재검토, 동의, 재검토, 부정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결정을 번복했다고 한다.<sup>42)</sup> 김정일에게 의사결정이 과부하됨으로써 결정이 지연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북한 권력중추부의 정책결정구조는 형식주의모델과 경쟁모델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 의사소통이 존재할 수 없다. 형식주의적이든 경쟁적이든 모두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에게 보고가 집중되며 참모와 관료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정일은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는 있지만, 견해 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견해차를 뛰어넘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전문화되고 파편화되고 독립된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한 뒤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김정일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러 변수가 다양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 이런 정책결정구조는 적합하지 않다.

김일성은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주요 정책은 당 정치국이나 당 중앙위

39)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p. 413~414.

40) 고영환(전 북한 외교관)의 증언, 김성철, “통치스타일과 정치체계의 운용,” p. 20에서 재인용.

41)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 413.

42) 현성일(전 북한 외교관)의 증언, 김성철, “통치스타일과 정치체계의 운용,” p. 20에서 재인용.

원회 전원회의 등의 협의체 기구에서 토론을 거친 뒤 결정했다. 김정일은 이런 협의체 기구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선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993년 12월의 제6기 제21차 회의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개최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 비서, 군사위원 등이 새로 충원되고 있지 않은 것이 그 근거의 하나이다.

또한 당 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게 되어 있는 기관이자 당정책 결정의 중추기관인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역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일만 위원으로 남아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었다. 북한 언론은 김일성 사망 직후 3~4년 사이에 정치국회의가 몇 차례 열린 것으로 보도했으나<sup>43)</sup> 1995년부터 각종 행사에서 정치국의 명의를 사라져 버려 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건국 기념일의 축하주체가 1994년 이전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였으나, 1995년부터는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로 바뀌었다. 창군 축하 주체도 1993년까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였으나,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1997년부터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변화했다. 이처럼 정치국 명의를 사라진 것은 중앙당을 대표하는 기구가 일상적으로 당사업을 지도하는 정치국 대신 좀더 명목적이고 상징성이 강한 중앙위원회라는 기구로 대체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중앙위원회는 정식 회의를 개최해 당의 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sup>44)</sup>

43) 『평양방송』은 2000년 2월 25일 김일성 사망직후 “애도기간에 처음으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어버이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었다고 공개했다. 이 방송은 1999년 2월 보도를 통해서도 김정일이 1994년 7월 17일 정치국 회의를 소집, 경제회생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2001년 9월 8일자 『청년전위』도 김정일이 1998년 9월 4일 정치국 회의에서 “수령님이 계시지 않는 조건에서 주석제가 필요없게 되었다”면서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석과 관련한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주석제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44)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p. 68~71.

한편, 선군정치가 시행되면서 국방위원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관여하는 폭이 넓어지고 일부의 주요 정책을 토의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2009년 4월에 개정된 헌법 109조 1항에서도 국방위원회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세운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통치스타일, 국방위원회의 성격과 위원들의 면면을 감안할 때 과거의 정치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러한 협의체 기구의 기능 상실은 중앙당 차원에서 고위 엘리트들 사이의 의사소통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수평적 의사소통의 결여는 참여와 설득에 바탕한 의사결정 대신에 수동적 동의에 기초한 정책의 집행만을 놓고 각 분야가 자기의 일방적 견해만 고집하거나 자기 입장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논리개발에 치중함으로써 김정일이 국가차원에서 종합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sup>45)</sup>

김정일에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반면 그의 참모들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상의 특징은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김정일 이외에 변화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불가능한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체계의 경화현상을 낳는다. 정치체계는 외부로부터의 요구 뿐 아니라 체계내 행위자들의 요구, 즉 내투입에 반응함으로써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내투입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46)</sup>

경제위기 동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이 학습하고 체득한 경제활동 방식은 주민생활과 의식 전반을 바꾸어 놓았다. 7·1조치 이후 개인들의 상행위가 공식화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자본주의와 상품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주민들의 가치의식도 정치·사상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에서 돈·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으로 탈바꿈했다.<sup>47)</sup> 그러나 사회 저변의 이러한 변화 움직임과는 달리 북한 권력중추부는 개혁·개방과 같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보통 개혁·개방은 기존정책의 부정과 반성에서 출발하는데 북한의

45)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 413.

46) 김성철, 『김정일 연구: 리더쉽과 사상(1)』, pp. 22~23.

47) 이교덕 외, 『새터민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97.

경우 7:1 조치 등으로 취하고 있는 경제개선 방침의 출발점은 기존체제, 기존 노선의 고수를 전제로 한 고난으로부터의 탈출이자 지금까지의 실책이나 폐해를 은폐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 하는 책략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 개혁·개방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은 오직 김정일 뿐이나 그는 “나에게서 0.0001mm의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고 공언했다. 젊어서부터 아버지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한지 수십년이 지난 그로서는 새로운 노선의 채택이 자신의 과거 업적 부정을 의미하므로 과거와 결별한 본질적 변화를 주도하기는 어렵다.

위로부터의 체제내 변화에는 엘리트간 파벌 및 노선갈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부자세습으로 이어진 장기집권은 집권자가 선호하지 않는 엘리트들의 등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특히 선군정치는 지배집단에 속할 수 있는 후보집단의 규모를 줄였고 지배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을 군부에 더 많이 부여했다. 동시에 군부를 중심으로 엘리트를 동심원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배집단의 크기를 줄였다.<sup>48)</sup> 이러한 특징은 현재 북한의 권력 엘리트 가운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위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조직은 오히려 쇠퇴한다. 안정적이고 평형상태에 있는 조직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 3. 김정일과 측근의 네트워크

김정일의 측근은 그의 가까이에서 통치와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북한 권력중추부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전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은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발상하에 구성원 사이의 연결관계를 통해 전체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고 네트워크의 ‘허브’를 찾으려 한다.

48)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1호(세종연구소, 2009), p. 133.

### 가. 네트워크의 중심성

제6차 당대회가 열린 1980년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권력구조내의 인물변화는 매우 적다. 주요 간부들이 권력 핵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인적 변동은 자연사로 인한 인사교체가 압도적으로 많고 숙청은 지극히 미미하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구축할 당시 기반구축을 위해 기존 권력엘리트들을 측근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후계자 내정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인물들을 대거 권력에 영입하거나 핵심요직에 등용했다. 이로써 북한의 권력구조는 혁명1세대들이 대표하는 공식서열과는 무관하게 김정일의 측근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구조로 급속히 재편되고 김정일 특유의 측근정치가 출현했다.

김정일은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비서국을 비롯한 당의 핵심부서를 장악하게 하고 자신이 주최하는 비공식 연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곳에서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측근으로 구성된 밀실정치가 실질적인 주요 정책결정과정으로 부상했다. 측근연회는 단순한 피로연이나 단합대회, 친목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의 역할을 했다.<sup>49)</sup> 밀실정치로 인해 공식서열과 공식 정책결정과정은 점차 무력화되었고<sup>50)</sup> 측근들은 고도의 동질감과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김정일은 측근에게 사유재(private goods)를 공급하여 정치적 충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측근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히 충성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입수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김정일의 주변에서 그의 신임을 받고 측근연회에 참석하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흔히 사용되는 기준이 김정일의 현지도도를 수행하는 빈도이다. 김정일의 현지도도 수행 여부는 자신이 맡고있는 직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행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측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극렬처럼 현지도도를 수행하지 않고서도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인물도 많고 공식 직책은 높지 않으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을

49)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p. 97;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 221에서 재인용.

50)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p. 219~220.



가지고 있음으로써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고리 권력’이 중요한 국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점과 현지 시찰 수행을 통해서 김정일을 자주 대면하면 측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측근 선정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일정한 수준의 공식 직책을 가진 인물 가운데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얼마나 수행했느냐 하는 횟수 외의 다른 대안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기서도 김정일의 현지지도 때 수행하거나 김정일이 참석한 공식행사에 함께 참석한 빈도를 사용하여 김정일의 측근으로 분류했다.

한편, 2008년까지 김정일의 통치시기를 세분화한다면 대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김일성 사망직후부터 헌법을 수정하여 지위가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이 재추대됨으로써 공식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는 1998년까지이고, 둘째 시기는 1999년부터 새로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고 1998년에 취임한 국방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2003년까지이며, 셋째 시기는 2004년부터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기 직전인 2008년까지이다.

시간이 다소 흐른 첫 번째 시기를 제외하고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현지지도 수행 등으로 김정일과 자주 대면한 인물을 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현지지도 수행 횟수 순위

	수행인물	99-03 수행횟수	04-08 수행횟수	99-08 수행횟수
1	현철해	187	195	382
2	박재경	178	121	299
3	이명수	109	184	293
4	김국태	215	47	262
5	김기남	100	125	225
6	이용철	114	82	196
7	장성택	142	25	167
8	김영춘	106	58	164
9	김일철	95	56	151
10	김용순	110	0	110
11	조명록	93	13	106
12	정하철	87	12	99
13	강석주	43	51	94

14	최태복	47	46	93
15	연형묵	59	26	85
16	박송봉	66	0	66
17	이용무	48	15	63
18	황병서	0	62	62
19	이재일	0	57	57
20	박봉주	1	55	56
21	박남기	9	44	53
22	김영남	30	22	52
23	전병호	28	19	47
23	주규창	32	15	47
23	최춘황	46	1	47
26	김중린	25	19	44
27	양형섭	21	21	42
28	김양건	12	26	38
29	최영립	14	15	29
30	이을설	25	2	27
30	홍성남	14	13	27

위의 사람들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의 연결망(network)이 어떤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연결망 속에서 누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시도했다.<sup>51)</sup>

우선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핵심적 개념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은 중심성(centrality)인데 이는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한 정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여 연결망을 구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연결망 속에서 김정일의 중심성 수치를 1.000으로 가정했을 때 다른 인물들의 상대적인 중심성(relative centrality)을 보면 다음과 같다.

51) 사회연결망 분석에 대해서는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서울: 박영사, 2007).

〈표 Ⅲ-2〉 주요 인물의 중심성 순위(노드중심성 지수 이용)

순위	이름	소속	1996~1998년
1	김정일		1.000
2	김기남	당	0.808
3	박재경	군	0.769
3	조명록	군	0.769
3	현철해	군	0.769
6	김용순	당	0.750
7	계응태	당	0.731
7	김국태	당	0.731
7	김하규	군	0.731
10	김영춘	군	0.692
11	이용철	당	0.673
12	장성택	당	0.654
13	최태복	인민회의	0.635
14	박송봉	당	0.596
15	최룡해	기타	0.442
16	이을설	군	0.423
17	이명수	군	0.404
18	김일철	군	0.346
18	이용무	군	0.346
18	장성우	군	0.346
∴	∴	∴	∴
23	김중린	당	0.308
∴	∴	∴	∴
순위	이름	소속	1996~1998년
26	이하일	군	0.269
∴	∴	∴	∴
29	정하철	당	0.250
29	최 광	군	0.250
29	한성룡	당	0.250
∴	∴	∴	∴
35	최춘황	당	0.231
∴	∴	∴	∴
46	전병호	당	0.135
∴	∴	∴	∴
∴	∴	∴	∴

순위	이름	소속	1999~2003년
1	김정일		1.000
2	김국태	당	0.956
3	김영춘	군	0.838
4	정하철	당	0.824
5	김용순	당	0.809
5	김일철	군	0.809
7	김기남	당	0.779
8	조명록	군	0.765
9	연형목	내각	0.750
9	이용무	군	0.750
9	최태복	인민회의	0.750
12	전병호	당	0.647
13	계응태	당	0.632
14	전재선	군	0.618
14	한성룡	당	0.618
16	장성택	당	0.603
17	김중린	당	0.588
17	박기서	군	0.588
19	김영남	인민회의	0.574
20	양형섭	인민회의	0.559
20	현철해	군	0.559
22	김윤희	인민회의	0.544
22	박재경	군	0.544
∴	∴	∴	∴
22	이을설	군	0.544
25	곽범기	내각	0.515
26	김영대	기타	0.515
26	이용철	당	0.515
∴	∴	∴	∴
41	강석주	내각	0.500
42	박송봉	당	0.456
43	이명수	군	0.441
∴	∴	∴	∴
46	최춘황	당	0.368
∴	∴	∴	∴

순위	이름	소속	2004~2008년
1	김정일		1.000
2	김기남	당	0.767
3	김일철	군	0.756
4	최태복	당	0.709
5	박봉주	내각	0.698
6	김영춘	군	0.686
7	김국태	당	0.640
8	양형섭	인민회의	0.616
9	김영남	인민회의	0.581
10	노두철	내각	0.570
11	김중린	당	0.558
11	전병호	당	0.558
13	이용무	군	0.523
14	김영대	기타	0.488
14	연형목	내각	0.488
16	이명수	군	0.465
16	조명록	군	0.465
18	김양건	당	0.453
18	이용철	당	0.453
18	이재일	당	0.453
20	현철해	군	0.453
20	현철해	군	0.453
22	강석주	내각	0.442
∴	∴	∴	∴
28	이을설	군	0.407
∴	∴	∴	∴
43	김격식	군	0.372
44	박남기	당	0.360
45	박재경	군	0.349
45	장성택	당	0.349
47	김영일	내각	0.314
47	김정각	군	0.314
∴	∴	∴	∴
∴	∴	∴	∴

위의 표에서 보듯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중심성이 높은 인물은 김기남, 김일철, 김국태, 김영춘, 최태복이다. 이들은 김정일의 공식활동을 수행하면서 같이 수행한 다양한 사람과 접촉했다는 의미로서 다른 사람과의 연결망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뜻한다. 김정일을 수행한 횟수가 많으면 중심성이 높게 나오지만 연결망 분석의 핵심의 하나는 다른 인물(nord)과의 연결정도만이 아니라 모든 노드와의 연결 정도에 주목하므로 중심성이 높은 인물은 일반적으로 다른 노드들과, 특히 중심성이 높은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정도가 많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 인물의 소속을 당, 군, 내각, 최고인민회의, 기타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당과 군 소속 인물만을 보면 그들의 중심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Ⅲ-3> 당 간부의 중심성 순위(노드중심성 지수 이용)**

순위	이름	1996~1998년	순위	이름	1999~2003년	순위	이름	2004~2008년
1	김정일	1.000	1	김정일	1.000	1	김정일	1.000
2	김기남	0.950	2	김국태	0.955	2	김기남	0.727
3	김국태	0.900	3	김기남	0.773	3	이용철	0.591
3	박송봉	0.900	3	김용순	0.773	4	이재일	0.545
5	김용순	0.800	3	장성택	0.773	5	김국태	0.500
5	이용철	0.800	3	정하철	0.773	5	김양건	0.500
5	장성택	0.800	7	박송봉	0.636	5	장성택	0.500
8	계응태	0.750	8	전병호	0.545	5	주규창	0.500
순위	이름	1996~1998년	순위	이름	1999~2003년	순위	이름	2004~2008년
9	최용해	0.650	9	이용철	0.500	9	박남기	0.455
10	정하철	0.550	9	최춘황	0.500	10	전병호	0.409
11	최춘황	0.500	11	계응태	0.364	11	김평해	0.364
∴	∴	∴	∴	∴	∴	∴	∴	∴
∴	∴	∴	∴	∴	∴	∴	∴	∴

당 소속 인물의 중심성 순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 기간에 걸쳐 김기남, 김국태, 장성택의 순위가 높고 2004~2008년 기간에 이용철과 이재일, 김양건의 순위가 급부상한 것이다. 이 기간에 그만큼 이들은 김정일의 현지지도 를 많이 수행한 동시에 수행 시 다른 인사들과 동행한 경우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004~2008년 기간에서 김용순과 박송봉이 사라진 것은 그들이 사망한 때문이며 정하철과 최춘황은 숙청된 때문이다.

<표 Ⅲ-4> 군부 인사의 중심성 순위(노드중심성 지수 이용)

순위	이름	1996~1998년	순위	이름	19996~2003년	순위	이름	20046~2008년
1	김정일	1.000	1	김정일	1.000	1	김정일	1.000
2	박재경	0.944	2	김영춘	0.999	2	김일철	0.783
2	조명록	0.944	3	김일철	0.941	3	김영춘	0.739
2	현철해	0.944	3	이용무	0.941	4	김철만	0.565
5	김하규	0.889	3	전재선	0.941	4	조명록	0.565
6	김영춘	0.722	3	조명록	0.941	6	김용연	0.522
7	이명수	0.444	7	박기서	0.882	6	김익현	0.522
8	김대식	0.389	8	김용연	0.765	6	박기서	0.522
8	이을설	0.389	8	김익현	0.765	6	이을설	0.522
10	김명국	0.333	8	김철만	0.765	6	이종산	0.522
10	김일철	0.333	8	백학림	0.765	6	이하일	0.522
10	박기서	0.333	8	이을설	0.765	6	장성우	0.522
10	이용무	0.333	8	이종산	0.765	6	전재선	0.522
10	이하일	0.333	8	이하일	0.765	6	현철해	0.522
10	장성우	0.333	15	박재경	0.588	15	이명수	0.478

역시 군 인사 가운데는 2004~2008년 기간에 현철해와 이명수의 중심성이 높아진 것이 특기할만하다. 동일한 인물의 중심성 수치가 시기별로 하락한, 즉 해당 인물의 중심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수행단의 규모가 적어지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수행의 빈도가 적어진 동시에 같이 수행한 다른 인사들과의 동행(연결)이 이전 시기에 비하여 적어졌음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박재경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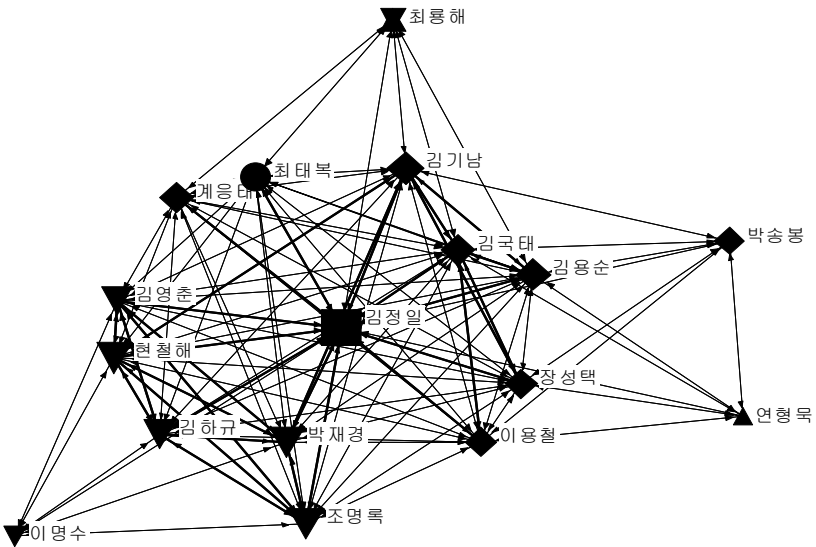
### 나. 시기별 네트워크의 중심성 변화

한편 표(table)를 이용한 연결망 분석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그림을 이용한 분석이 주장되는데 그림 분석은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묘사와 탐구를 가능하게 하고 표 형태의 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경향들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것에 바탕을 둔 예측도 가능하게끔 한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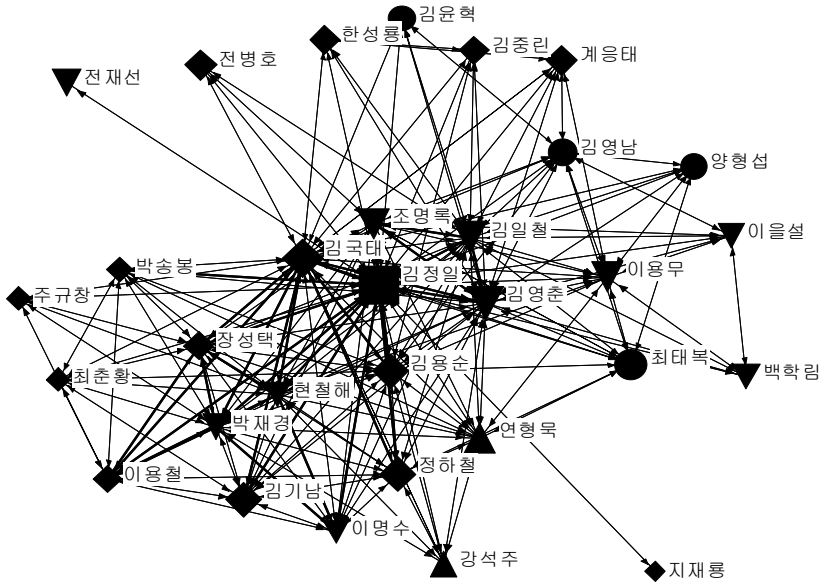
<그림 Ⅲ-5> 북한 주요 인사의 네트워크

※ 그림에서 사각형 노드는 김정일, 원모양 노드는 최고인민회의, 삼각형 노드는 내각, 다이아몬드꼴 노드는 당, 역삼각형 노드는 군 소속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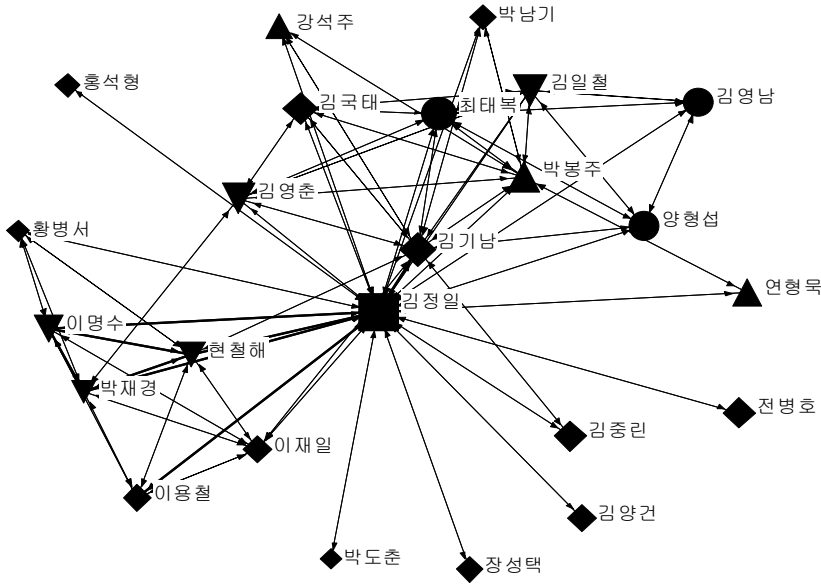
<1996~1998년>



<1999~2003년>



<2004~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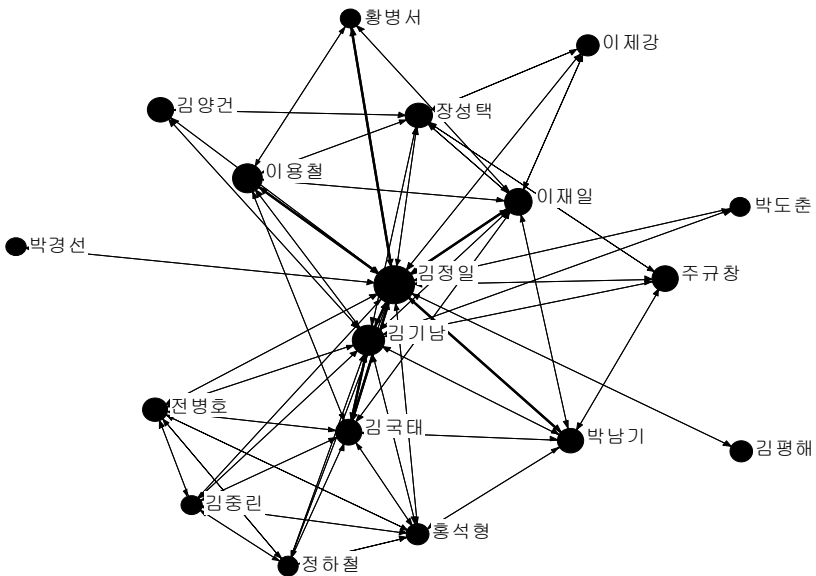
연결망의 전체 구조에서 연결선이 조밀하거나 많아진 것은 연결망이 그만큼 복잡해졌음을 뜻한다. 즉, 노드들이 서로 연결된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1999~2003년의 그림에서 김정일 주변의 노드들인 김국태, 김일철, 김영춘, 조명록은 다른 노드들과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또는 다른 노드와의 연결들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중심적인 노드들이 제거되면 전체 연결망이 와해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에서 누가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누가 변방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1999~2003년 시기가 2004~2008년 시기에 비해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노드들이 군부 인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8년 ‘선군정치’가 주장되는 한편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의 지위가 격상되고 국정에서 군의 역할이 강조된 시대상과 일치한다.

다음 그림은 가장 최근 시기인 2004~2008년에서 당과 군 소속 인사들 가운데 누가 연결망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6> 당 간부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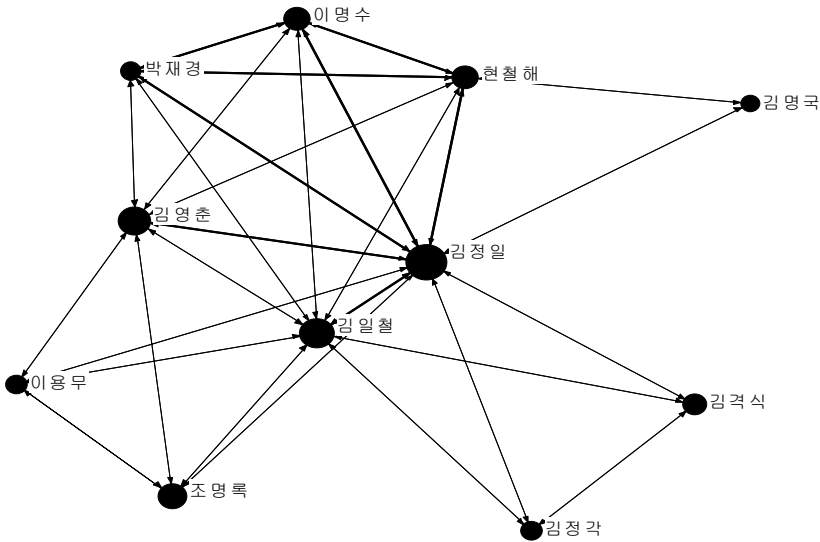
<2004~2008년>





&lt;그림 Ⅲ-7&gt; 군부 인사 네트워크

&lt;2004~2008년&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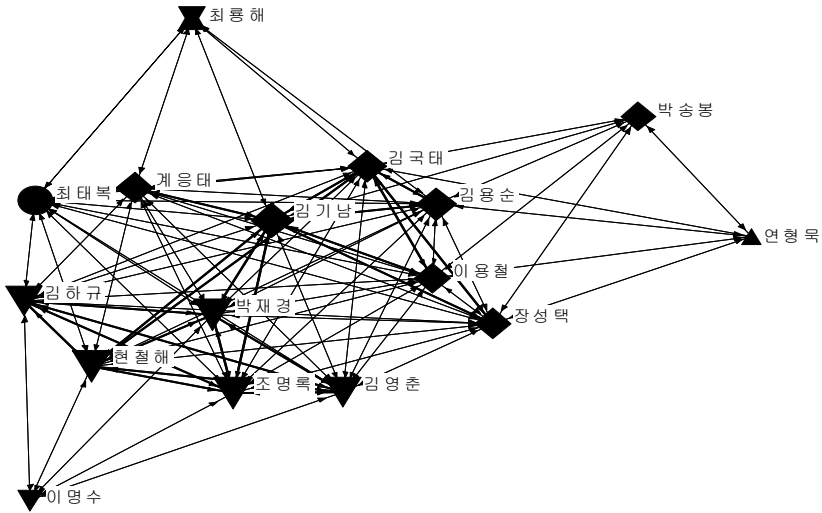


#### 다. 김정일을 제외한 네트워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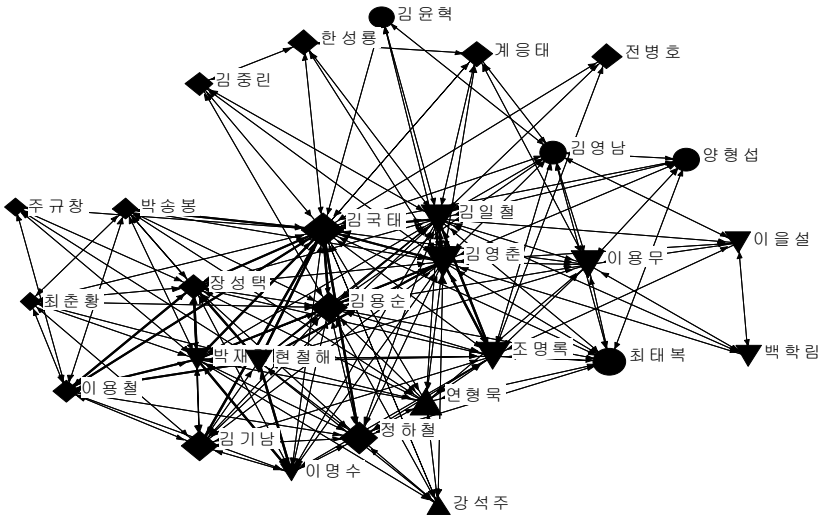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현지도 수행인물이라는 원자료의 성격상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 김정일이 정중앙에 오기 마련이지만 만약 김정일을 제외하면 누가 중앙에 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이런 연결망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김정일 사망 후 누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의 중심고리가 되는가를 예측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림 III-8> 김정일을 제외한 북한 주요 인물의 네트워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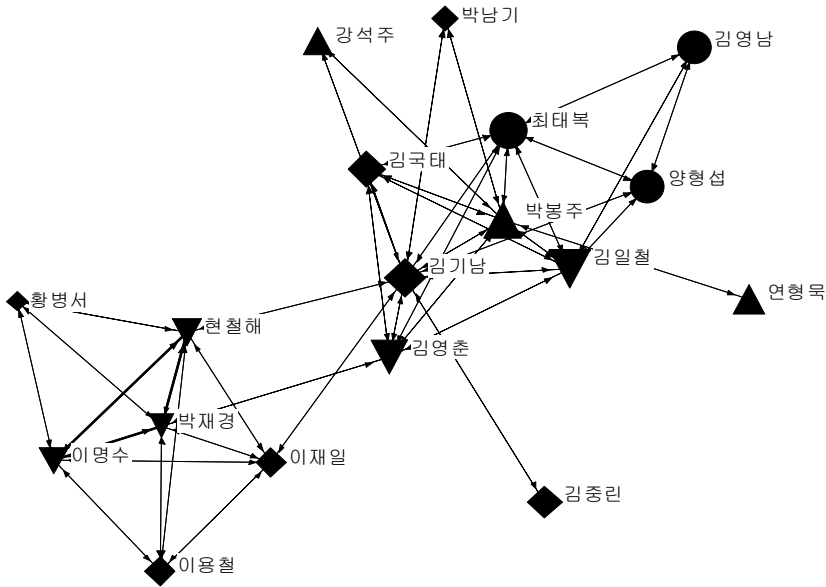
<1996~1998년>



<1999~2003년>



<2004~2008년>



김정일을 제외하고 그린 연결망에서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연결망의 중심 고리에 해당한다. 1999~2003년의 경우 김국태, 김영춘, 김일철, 김용순, 조명록 등이, 2004~2008년의 경우는 김기남이 독보적이다. 김기남은 당이나 내각,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인사뿐 아니라 군부 쪽 인사와도 접촉이 잦다.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인물들이 김정일의 현지도도 수행시 상호간 얼마나 접촉이 잦았는지를 비교해 보면 <표 III-5>와 같이 나타난다.

<표 III-5> 1996~2008년 김정일 현지도도 수행시 상호접촉 횟수

	강석주	김기남	김양건	김영남	김영춘	김일철	김정각	박남기	박재경	이명수	이용무
강석주		25	19	11	31	20	4	16	19	11	3
김기남	25		5	22	77	64	6	24	71	49	30
김양건	19	5		4	10	11	3	2	13	11	
김영남	11	22	4		37	47	3	1			31
김영춘	31	77	10	37		113		7	112	61	48
김일철	20	64	11	47	113		8	5	57	33	46
김정각	4	6	3	3		8				2	1
박남기	16	24	2	1	7	5			7	9	

박재경	19	71	13		112	57		7		213	15
이명수	11	49	11		61	33	2	9	213		11
이용무	3	30		31	48	46	1		15	11	
이용철	4	70	4		32	18		5	123	102	14
이재일	3	20	4		6	5	1	9	23	31	
이제강	2	8	4		3	4	1		11	16	
장성택	18	89	7		44	28		9	97	60	17
전병호		24		25	30	30			2	2	25
조명록	9	54	3	36	136	85		1	77	32	39
주규창	4	16			6	3		9	19	16	2
최춘황	2	22			5	5		1	23	11	3
최태복	25	72	10	41	56	61	2	3	24	14	33
현철해	20	85	17		113	58	5	11	353	293	19
황병서		2			4	2			31	32	
	이용철	이재일	이제강	장성택	전병호	조명록	주규창	최춘황	최태복	현철해	황병서
강석주	4	3	2	18		9	4	2	25	20	
김기남	70	20	8	89	24	54	16	22	72	85	2
김양건	4	4	4	7		3			10	17	
김영남					25	36			41		
김영춘	32	6	3	44	30	136	6	5	56	113	4
김일철	18	5	4	28	30	85	3	5	61	58	2
김정각		1	1						2	5	
박남기	5	9		9		1	9	1	3	11	
박재경	123	23	11	97	2	77	19	23	24	353	31
이명수	102	31	16	60	2	32	16	11	14	293	32
이용무	14			17	25	39	2	3	33	19	
이용철		20	9	102	10	22	21	26	15	145	13
이재일	20		6	6	1		4		6	33	16
이제강	9	6		12		1	5	2		19	
장성택	102	6	12		8	35	27	37	23	112	2
전병호	10	1		8		30	3	5	31	3	1
조명록	22		1	35	30			6	53	80	
주규창	21	4	5	27	3				4	23	
최춘황	26		2	37	5	6			1	23	
최태복	15	6		23	31	53	4	1		27	1
현철해	145	33	19	112	3	80	23	23	27		31
황병서	13	16		2	1				1	31	

위의 도표에서도 김기남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김기남은 80대의 고령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김정일 유고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권력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분야에 걸친 넓은 인맥으로 김정일 후계체제 수립에서 조정자, 중재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제2인자로 일컬어지는 장성택은 김기남, 박재경, 이용철, 현철해와 자주 대면했다. 그의 형제가 유력한 군인인 데다 그 자신도 군부 인사와의 접촉이 많음은 그에 대해 군부가 호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위의 표에서 군의 실세로 평가되는 현철해, 이명수, 박재경이 상호 접촉한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당의 군사담당 제1부부장인 이용철도 직책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군부 인사와 동행한 경우가 많음을 파악할 수 있다.



# 제 4 장

## 당과 국가기구



## 제4장

### 당과 국가기구

본 장에서는 복잡계 이론의 핵심개념 중 비평형성(far-from-equilibrium)과 비선형성(non-linearity)을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여, 먼저 선군정치 체제에서 북한의 ‘당과 국가기구 행위자의 비평형성’을 위상과 운영방식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당과 국가기구 행위자 상호작용의 비선형성’을 관계의 질서와 무질서 중심으로 다루려 한다. 복잡계 현상은 비평형성과 비선형성의 조건하에서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북한 선군정치 체제의 주요 행위자인 당과 국가기구의 비평형성과 비선형성 연구를 통해,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하는 북한 체제 ‘중범위 수준의 패턴’을 규명하고 향후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패턴을 예측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

복잡계 이론의 가장 주요한 연구방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현실 복제와 가상의 실험이었다.<sup>52)</sup> 정치학에서는 특히 국제정치학에서 1950년대 이후 대규모 글로벌 시뮬레이션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약 4만여 개 정도의 수많은 변수들과 작동규칙들을 컴퓨터에 코드화하여 메인프레임에서 처리함으로써 미래세계의 모습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하였다. 복잡성은 변수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규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시스템을 움직이는 수많은 변수를 포함시켜도 나비효과로 인해 미래의 모습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성과로 “대강의 질서, 즉 패턴을 찾아내는데 모델의 주안점은

52) 복잡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동태적 시뮬레이션 모형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변수 기반 모형(variable-based model)이다. 기본 구성요소가 시스템 변수인 모형으로 시스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형화하고 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시스템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전체적 행태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둘째,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이다. 기본 구성요소가 행위자인 모형으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모형화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그들의 총합인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어떠한 동태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서도 시스템 변수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시스템 내 행위자들의 분포의 변화, 이들 간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 등 시스템의 진화경로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김정욱·윤영수, “복잡계이론에서 예측·통제·적응의 문제,” 복잡계 네트워크, 민병원·김창욱 편, 『복잡계 워크샵』, pp. 564~565.



둔다”면, 변수의 수보다는 변수들 사이에 작동하는 관계의 법칙을 중요하게 하였다.<sup>53)</sup>

개별 행위자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본 연구는 ‘행위자 기반 모형’에 기초하여, 선군정치 체제에 주요 행위자인 당과 국가기구 ‘행위자 패턴의 규명’과 ‘행위자 상호작용’을 비평형성과 비선형성이란 복잡계 현상의 핵심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이 방법론은 무엇보다 미시의 영역과 거시의 영역을 구분하고 양쪽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시와 거시 양자를 연결시켜주는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이다.<sup>54)</sup>

여기에서는 복잡계의 비평형성과 비선형성 이론에 기반하여 북한의 선군정치 체제의 행위자 중 당과 국가기구의 위상과 운영방식, 그리고 상호작용 및 관계의 질서와 무질서를 문헌분석에 기초한 역사구조적 방법론, 비교사회주의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며, 객관성과 구체성을 보충하기 위해 선군정치 체제를 경험한 간부출신 탈북자의 구술 면접자료를 활용하여, 선군정치 체제 북한의 당과 국가기구의 비평형성과 비선형성을 논증하려 한다.

## 1. 위상과 운영방식의 비평형성

비평형성은 어떤 체계가 질서 있고 안정적인 평형(equilibrium)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복잡계의 자생적 질서는 평형상태나 평형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평형상태에서는 시스템의 요동이 상쇄되어 새로운 질서가 창출될 수 있는 요소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형 상태에서라야 분산구조(dissipative structure)가 형성되고 새로운 구조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분산구조란 체계의 하위요소들이 새로운 구조 창출에 필요한 에너지를 환경으로부터 유입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엔트로피<sup>55)</sup>를 환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sup>56)</sup>

53) 민병원, “불확실성 속의 질서: 복잡계이론과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06), p. 216.

54) 그 근본적 시각은 복잡계적 시각으로, 즉 단순한 규칙에 의한 국지적 상호작용(local interaction)에 의해 거시적 구조가 창발(emergent global structure)된다는 관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장덕진·임동근, “복잡계와 사회구조,” 복잡계 네트워크, 민병원·김창욱 편, 『복잡계 워크샵』, p. 73.

55) 엔트로피 개념은 열역학에서 기원하는데 가장 단순한 정의는 무질서이다.

56) Ilya Prigogine & Isabelle Stengers, *Order Out of Chaos: Man's New Dialogue with Nature*, (New York:

따라서 엔트로피를 생성하는 ‘과정(process)’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마투라나와 바렐라(Maturana & Varela)는 모든 시스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자기생산(autopoiesis)’에 있다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그들에 따르면, 행위자 활동은 스스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율성(autonomy)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자가 어떤 형태든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조직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sup>57)</sup>

이 때, 한 체제의 자기 조직적 특성을 이해하려면 개별 행위자들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행위자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다른 행위자들의 자기유지 활동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sup>58)</sup>

이러한 복잡계의 특성에 따라 여기에서는 북한 선군정치 체제의 주요 행위자인, 당과 국가기구의 위상과 운영방식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선군정치 체제의 비평형성을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평형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비평형상태)에서는 매우 작은 요동이 점차 증폭되어 거대한 흐름으로 드러나 분기점에 달하게 되고, 우연히 새로운 경로를 찾아 자기조직화를 해나가기 때문이다.

## 가. 위상과 성격: 절대권력자의 전위조직과 집행자

### (1) 당의 위상과 성격

북한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1인 절대권력자를 정점으로 선두에서 북한 체제와 인민을 지도하는 전위 정치조직이다. 그 기원은 맑스(K. Marx)의 전위론(Vanguard theory)으로부터 레닌(V. I. Lenin)의 공산당의 위상과 역할에서 출발하였으나, 소련의 스탈린(J. Stalin) 시대 제도화된 ‘국가기구와 대중에 대한 공산당의 우월성과 지도성’에 기초한다.

Bantam Books, 1984).

57) Humbert R. Maturana, & Francisco J.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Holland: D. Reidel, Dordrecht, 1980).

58) Gareth Morgan, *Images of Organiza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86).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성한 전위대가 일반 노동계급을 선도해야 한다는 맑스의 전위론은, 토론과 합의에 의한 지역단위의 자치권은 인정하지만 집중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현실 국가체제라는 상황 논리에 따라 레닌의 민주집중제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스탈린시대 국가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전위기구인 공산당의 지도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수송 벨트’로 정의되면서, 공산당이 주요 국가사안을 개별 국가기구의 토론과 합의 이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 위상과 성격이 제도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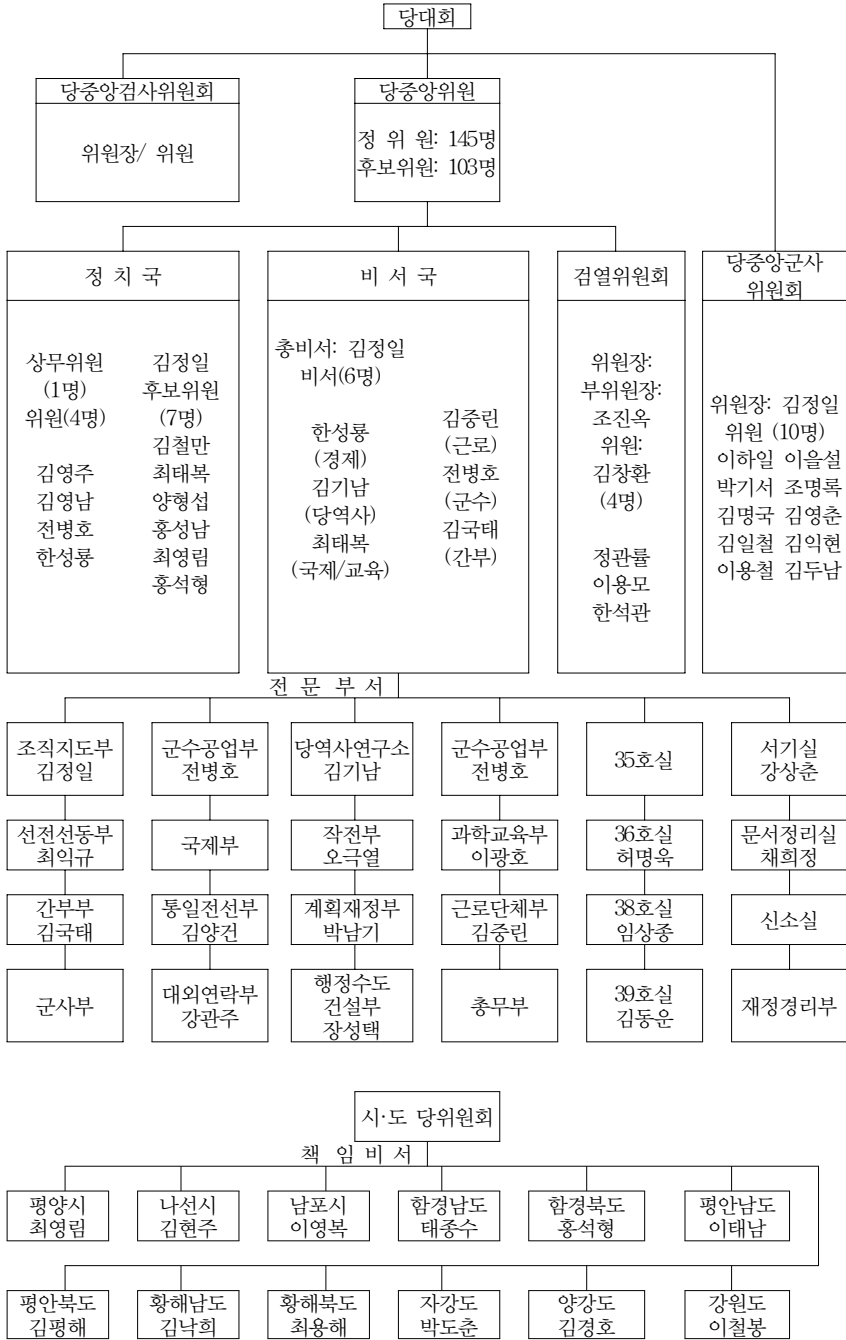
북한 체제는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후 소련군의 점령 하에서 스탈린 체제를 모델로 하여 건설되었으며,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에서의 탈스탈린 흐름과 이후 소련과 동유럽의 탈사회주의 과정과 중국 및 베트남의 탈스탈린 흐름에도, ‘당의 지도성’을 견지하면서 1인 절대권력자의 절대권위와 수령관을 기반으로, 조선노동당의 지도성을 실현하는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로 자신의 체제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현재 선군정치 체제에서도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성격은 절대권력자의 권위를 정점으로 한 당이 제반 국가기구 및 주요 정책결정을 전 방위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에 대한 총론적 이해를 위한, 2009년 10월 현재 조선노동당의 구조와 확인 가능한 책임자는 아래 <그림 IV-1>과 같다.<sup>59)</sup>

59) 자료 출처는 통일부, 『2009 북한권력기구도(당)』(서울: 통일부, 2009)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기초해 주요 북한소식을 다룬 다음의 참조자료를 교차 비교하여 그림화한 것이다.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2009년 1·2월호)(서울: 통일연구원, 2009년 3월);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2009년 3·4월호)(서울: 통일연구원, 2009년 5월);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2009년 5·6월호)(서울: 통일연구원, 2009년 7월);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2009년 7·8월호)(서울: 통일연구원, 2009년 9월); 통일연구원, 『주간 통일정세』 9월 1~2주차; 9월 3~4주차.

<그림 IV-1> 조선노동당 구조(2009년 10월 현재)



<그림 IV-1>의 조선노동당 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은,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총비서’이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일 뿐 아니라 전문부서로 실제 당과 선군정치 체제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구인 ‘조직지도부’의 부장 등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정일이다.<sup>60)</sup>

황장엽과 현성일 뿐 아니라 북한 고위직 간부출신 탈북자들은 당의 위상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비서국과 조직지도부, 그 외 선전선동부, 간부부라고 한다. 특히 조직지도부가 가장 핵심적인 단위라고 공히 증언한다.

조직지도부는 당생활과 공안/행정, 군사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지도 및 감찰, 그리고 주요 경제이권 결정까지를 조절한다. 2009년 10월 현재 당 조직지도부 부장은 김정일이고, ‘조직지도부’에는 4개 부서가 있는데 제1부부장들은 리제강(중앙당), 장성택(공안/행정), 리용철(군사), 김경옥(지방당)<sup>61)</sup>이다.

그 외 당중앙의 김정일 측근으로 전문부서 핵심 부서장인 선전선동부장은 올해 3월 22일 새로 임명된 최익규이며, 제1부부장은 리재일이다. 그리고 간부부 부장은 김국태이다. 이들은 모두 김정일의 측근으로, 이들의 중심에는 당사업을 총괄 지도하는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있다.

그들의 사상논리에 따르면, 당은 전위적인 정치조직으로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기 때문이다.<sup>62)</sup>

## (2) 국가기구의 위상과 성격

북한은 1948년 최초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수상·최고재판소라는 3권 분립 형식의 합의제적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였으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으로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국가기구는 입법, 행정, 사법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법부문은 인민회의, 행정부문은 주석·인민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원, 사법부문은 재판소·검찰소 등이

60) 한편 규약상 5년에 1회 개최되어야 하는 당대회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당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당의 권력 우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이후 운영방식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려 한다.

61) 당 조직지도부는 당·군·정을 모두 통제한다. 제1부부장이 김경옥이라고 올해 처음 보도되었는데, 그는 공석이던 지방 당조직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9년 1월 3일.

62)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p. 191.

다. 그러나 삼권 위에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당이 있고, 국가기구는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 역할을 하였다. 1992년 헌법까지는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을 통해 국가기구를 지도하는 형태였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인 김정일의 선군정치 체제로 들어서며,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가기구 내 국방위원회가 강화되었으나 당의 지도성은 유지되었다.<sup>63)</sup>

그리고 2009년 북한은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국방위원회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당의 영도성’은 지속되고 있다.<sup>6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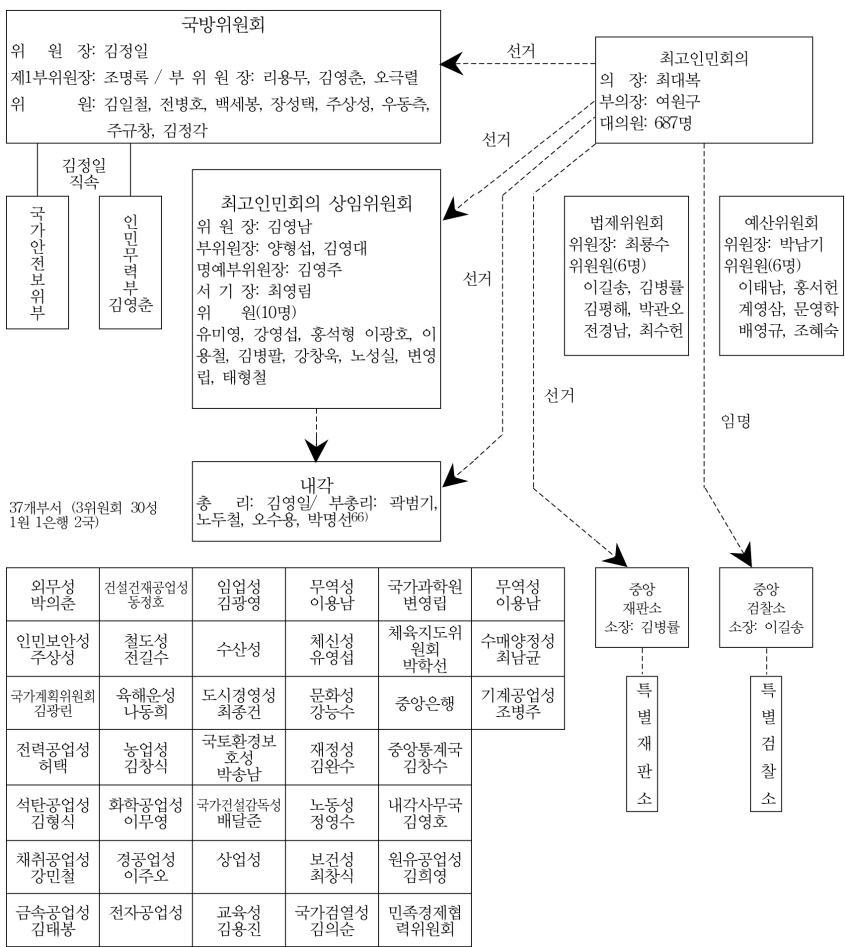
2009년 10월 현재 북한 중앙국가기구의 구조와 확인 가능한 책임자는 <그림 IV-2>와 같다.<sup>65)</sup>

63) 박영자, “북한 중앙국가기관 특성과 체제운영 실태: ‘민주집중제’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동아연구』, 제49집(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5), p. 247.

64) 이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살펴본다.

65) 자료 출처는 통일부, 『2009 북한권력기구도(국가기구)』(통일부, 2009)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기초한 주요 북한 소식을 다룬 다음의 참조자료를 교차 비교하여 그림화한 것이다.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2009년 1·2월호)(서울: 통일연구원, 2009년 3월);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2009년 3·4월호)(서울: 통일연구원, 2009년 5월);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2009년 5·6월호)(서울: 통일연구원, 2009년 7월);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2009년 7·8월호)(서울: 통일연구원, 2009년 9월); 통일연구원, 『주간 통일정세』 9월 1~2주차; 9월 3~4주차.

<그림 IV-2> 중앙국가기구 구조(2009년 10월 현재)



국가기구의 위상과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북한의 『정치사전』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력기관

66)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일 ‘정령’을 통해 박명선을 내각부총리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내각 부총리 4명 가운데 지난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12기 1차 회의 당시 곽범기, 태중수, 노두철 3명이 유임되고 2003년 9월 임명된 전승훈 대신 전자공업상을 지낸 오수용이 새로 기용됐으나, 지난달 태중수 부총리가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인사는 태 부총리의 자리 이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론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신임 박 부총리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북한 주요 인물 가운데 박명선은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에 이어 12기 대의원이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과 내각 인민봉사위원회 대외봉사국장을 거쳐 평양 대외봉사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인물이 있으나 동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연구원, 『주간 통일저서』 9월 1-2주차.

으로서 혁명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독재를 실시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보장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국가는 “적대분자들에게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 같이” 하는 것이다.<sup>67)</sup>

북한의 『철학사전』은 국가를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라 정의하고, “무엇보다 먼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정도를 온 사회적 범위에서 조직적으로 실현하며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 위상과 역할을 이론화하였다.<sup>68)</sup>

그러므로 국가기구에는 “독재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국가기구체계의 총체”이며, “각급 주권기관들과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 및 사법, 검찰 기관들로 구성”된다. 국가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 혁명의 원수들을 진압”하기 위해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 검찰 및 사법기관들이 존재하며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의한다.<sup>69)</sup>

북한은 국가의 형태를 첫째,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sup>70)</sup>에 따라 군주제와 공화제로, 둘째, 국가권력의 지역조직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단일제와 연방제로, 셋째 국가권력이 어떤 방법으로 실현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제도와 전제제도로 나눈다.<sup>71)</sup> 이 논리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체제는 공화제, 단일제, 그리고 민주주의제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인 국가체제는 공화제보다 군주제에, 민주주의제도보다는 전제제도에 가깝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국가는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로 권능을 발휘하는 당적 지도를 인민들에게 실행하는 인전대로서, “정치적 지배를 담당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며 “지배계급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스리는 권력기구”이기 때문이다.<sup>72)</sup>

67)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79. 북한주민들은 어릴 적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독재’라는 개념을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68)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p. 191.

69)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p. 80, 86.

70) 한편 국가주권기관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포괄적인 인전대로 인민들의 선거로 선출된다고 정의한다.

71)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p. 93, 95.



따라서 북한은 중앙집중제, 독재, 당과 국가기구 관계에서 ‘절대권력자를 핵으로 한 당적 지도와 전략 시행’이라는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 원리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95년 이후 2009년 10월 현재까지 선군정치로 군의 위상과 역할이 절대권력자의 지휘 하에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군 역할이 비대해진 ‘변형된 스탈린체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나. 운영방식: ‘수령 영도’와 ‘민주집중제의 중앙집권제로 변형’

##### (1) 당의 운영방식

북한의 당과 국가, 근로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원칙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대해 북한당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집권제는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는 위에, 전체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절대 복종하며 아래기관은 웃기관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웃기관은 아래기관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통일과 전 조직의 활동을 유일적인 지도에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적 특성은 모든 지도 기관의 성원은 선거되며, 사업에 책임을 지고 선거자들로부터 소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 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당과 전체 인민의 조직적 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인 수령은 당, 국가, 근로단체 등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의 총체를 유일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sup>72)</sup>

20세기 현실사회주의 국가로서 소련과 중국 역시 공히 전위론에 기초한 민주집중제 노선에 따라 공산당에 의한 국가기구와 주요 정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했으나, 소련은 스탈린체제 이후 탈스탈린화 과정과 다민족 역사전통, 그리고 실적주의로 각 국가기구와 당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비해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 시기에는 북한과 유사한 당에 의한 수평적·수직적 국가지배 체제였고, 개혁개방 이후 2009년 현재까지도 당의 국가기구에 대한 정치지도적 성격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분권화 조치로 각 국가기구의 자율성이 상당히 증대되었고, 전인대

72) 리명일, 『국가관리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8), p. 6.

73) 위의 책, pp. 435~436.

가 당에 필적할 만큼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2009년 현재까지 북한은 어느 현실사회주의 국가보다 강력한 당우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sup>74)</sup>

그러나 그 운영방식을 보면, 당 자체가 고유한 전위적 체제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당을 통해 국가와 사회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수령은 당 조직을 통해 국가와 사회 전반 사업을 장악 및 통제한다. 북한의 행정, 입법, 사법 기관들은 당이 최고 지도기관으로 통제하고 있다. 당은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상급당에 하급당이 절대복종하며 전당은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고, 당중앙위원회는 수령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 수령은 당중앙위원회의 총비서로서 전당에 대한 지도 통제권을 가질 뿐 아니라 공적인 지위 이상으로 절대적 존재이다. 당 조직은 기층 조직인 초급당 조직으로부터 군당위원회, 도당위원회, 중앙당위원회까지 각급 지도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당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당기관의 전임일꾼들이다.<sup>75)</sup>

당중앙위원회는 형식상 당의 최고기관이지만 제기된 정책안들은 당중앙위원회 안에 있는 집행부서들이 작성한 것이며 당중앙위원회에서의 심의는 형식적이다. 또한 당 정책안을 작성하여 최고지도자에게 건의하는 것도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위원회 각 부서들이 작성하여 담당비서들을 통하여 최고지도자에게 올려 비준받게 된다. 따라서 실제 당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것은 비서국 성원들이다. 다시 말해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총비서와 비서들이 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며,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당책임비서와 비서들이 도당위원회사업을 지도하고, 군당위원회에서는 군당책임비서와 비서들이 군당사업을 지도하게 된다. 이 체계가 “수령의 개인독재를 보장”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골격이다.<sup>76)</sup>

이러한 수령 중심 체제에 더하여, 1995년 이후 약 15년 정도의 ‘비상 위기관리체제인 선군정치’로 김정일 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이 몇 몇의 당내 주요

74) 박영자, “북한 중앙국가기관 특성과 체제운영 실태: ‘민주집중제’와 ‘프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p. 251.

75)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 시대정신, 2006), pp. 91~92.

76) 당중앙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당 조직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도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다. 당중앙위원회는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부서들을 가진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비서국을 두고 있는데 정치국은 중앙위원회를 축소한 것으로 역시 지도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여기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의 여러 집행부서들은 비서국의 지도 하에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에 따라 전당을 움직인다. 위의 책, pp. 92~93.

전문부서 부부장들과 모든 국정을 관리 및 지시하면서, 당 운영의 체계성은 현격히 약화되었다.

2005년 이후 탈북한 고위직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군정치 이후 당 내에서는 전문부서를 담당하는 당내 부부장들이 가장 중요한 파워 엘리트이고, 그 중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부, 그리고 김정일의 측근들이 배치되어 현지도인 인물 등을 선정하는 서기실 등이 가장 중요한 파워 엘리트 밀집 부서라고 한다.<sup>77)</sup>

당내 각 부들은 특수기관으로 특수경제의 90% 이상을 장악하여, 실질적으로 국내자원은 특수가 다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부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부서는 중앙과 지방 당-간부, 군사, 공안/행정 4개 부서로 구성되어 국정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지도부(부장 김정일)이다. 조직지도부는 당생활 지도와 감찰, 공안/행정부분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인데, 경제이권(와크)을 최종 조정 및 결정까지 한다.<sup>78)</sup>

탈북자 증언과 북한문헌 및 2009년 새 헌법 등을 교차 비교할 때, 2009년 10월 현재 당의 운영은, 전체적으로 ‘김정일 주도의 당 전문부서 라인 특히,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간부부 라인’과 ‘선군정치에 의한 군대의 당라인 특히, 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인민군 총정치국-인민군 총참모부’를 중심으로 지도와 통제가 실현되고 있다.

한편 1980년 이후 비록 형식적 추인제도라 할지라도 당기구 중 최고 권력 기구인 당대회가 2009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당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김정일의 개인적이고 비상설적인 은둔정치·연회정치 등 비제도적인 정치행보가 당 운영의 안정성을 침해하였다.

## (2) 국가기구의 운영방식

20세기 현실 사회주의국가의 ‘급속한 발전전략’ 뿐 아니라 북한의 ‘수령영도와 일체화된, 유일당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은 실현될 수 없었다. 그 상황과 특징을 북한당국이 최고주권기관이라 정의하는 최고인민회의의 운영방식을 통해 살펴보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1936년 제정된

77) J00, 평양시·외무성 중앙간부 출신, 2006년 탈북.

78) B00, 평양시·인민보안성 중앙간부 출신, 2005년 탈북.

소련의 ‘스탈린헌법’에 ‘최고소비에트’를 모방한 것이다. 남한의 국회에 대비되는 국가기구로 입법부에 해당된다.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 행정부·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구를 관장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즉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소환하는 권한을 가지고, 헌법 수정,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는 달리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1~2회 정도 열리고 한번에 2~4일 정도 진행되기에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산하에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 등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국정심시기관으로서 기능하지는 못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당, 군, 내각, 사회단체 등에서 주요 고위직 직책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의원 직책보다는 당이나 군/행정 기구에서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임에도 ‘당의 영도’와 자신이 선출하는 ‘국방위원장의 지도’를 받는 기관으로, 실제 핵심 권력기구라고 볼 수 없다. 역대 최고인민회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국가체제 운영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sup>79)</sup>

한편으로, 체제 정당화 기제로서의 선거 활용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라고 평한다. 20세기 근대 국민국가처럼 북한 역시 헌법상 ‘공화국’을 표방하며, 해방 후 여성의 선거권 도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그 운영을 보면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의 선거는 아니다.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선거유세는 당과 정부의 업적 및 계획을 선전하기 위한 대중 선전·선동의 장으로 기능하곤 했다. 다수 인민을 위한 국가이기에 정치적 갈등이 있을 수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1~2기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찬성자는 백함에, 반대자는

79) 박영자, “북한 중앙국가기관 특성과 체제운영 실태: ‘민주집중제’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pp. 252~255.

흑함에 기표지를 넣도록 하는 흑백 투표함 제도를 채택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3기부터는 단일투표함제로 바꾸었으나, 대의원 후보 선출과정은 선거구마다 단 한 명만이 입후보할 수 있는 단일 입후보제를 채택했다. 선거 과정을 보면 당에서 선거구마다 후보자를 미리 내정해놓고 당 조직을 통해 각종 회의에서 지정한 입후보자를 지명 선출하는 방식이다. 북한정권은 ‘근로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화국은 갈등이 없으며 당이 노동계급의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선거는 필요 없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선거는 패거리 싸움으로서 사기와 협잡으로 일관된 반동적이며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다당제의 배후에는 이를 조정하는 독점자본가들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sup>80)</sup>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대표적 근대제도인 선거가 북한에서는 정책에 대한 선전·선동 및 정권 정당성과 권위 재창출을 위한 제도로 기능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주권의 수동적 역할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연 1~2회 정도 개최되며, 정기회의도 2~4일 정도이고 임시회의가 소집되는 경우도 드물다. 또한 당과 절대권력자의 지도성이 주권보다 상위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의 결정을 추인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주권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처리해야 할 일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법기구의 회의 수와 일시가 증대되곤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995년 선군정치 이후 증대되기보다 축소되는 경향이 경우가 더 많아, 최고인민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도 2~3일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입법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주권이 실현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절대권력을 가진 김정일이 당내 비서국이나 전문부서 및 측근 중심이나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위계적 지도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국가기구의 활동이나 운영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입후보자들은 당에서 사전 선발하여 지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기구의 주요 간부들이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전제된다. 또한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및 상임위원회,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내각의 간부

80)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년 5월 27일.

들이 당원이기 때문에, 국가기구 차원에서 당적 지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소조를 통해서도 당생활 및 당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지도 및 감찰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회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당이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후 의안이 상정된다. 따라서 사실상 최고인민회의에서 제대로 검토하거나 수정을 할 여유가 없이 안건이 기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최고주권기관이지만, 실제 운영방식은 선군정치 체제를 합리화하고 주권 개념을 수동적으로 변질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주권기관의 권한과 자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1967년을 기점으로 형성되고 1972년에 제도화되어, 1980년대까지 강화된 북한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최종목적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가관리의 기본 원칙은 첫째, 국가관리에서 절대권력자의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 둘째, 국가관리에서 사상적 지도원칙을 견지하는 것 셋째, 국가관리에서 중앙집권제를 실현하는 것 넷째, 국가관리에서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관철하는 것이다.<sup>81)</sup>

북한 역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근대의 산물인 ‘공화국’을 골간으로 하고 있기에, 국가운영의 합의제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특징이 국민주권의 실현이나 민주집중제에서 ‘민주’의 무게 중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가기구 중 하나인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선군정치와 김정일의 절대권력으로 전체 국가기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도 국가기구의 파행적 운영은 불가피하다.

구체적 운영 양상을 고위직 출신 탈북자 구술에 기초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2)</sup> 예를 들어 국가 경제·행정기구라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인민무력부 등이 관할하는 특수경제는 당 산하, 정확히 김정일 가계 자금 관리실로 제2경제 사업 담당부서인 당 산하 39호실에서 관리하고 내각

81) 리명일, 『국가관리학』, p. 8, 14.

82) B00, 평양시·인민보안성 중앙간부 출신, 2005년 탈북.

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김정일의 방침과 싸인을 통해 일을 처리한다. 내각 총리와 부총리는 일반적인 인민경제 부서만 관리한다. 경제 및 무역, 외화벌이 등 몽치 돈이 움직이는 주요 결정과정과 단위는 김정일과 핵심 측근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인민무력부(일반범죄)와 국가안전보위부(정치사찰)는 내각 감찰 역할도 겸하며, 연합 그룹빠를 형성해 대대적인 캠페인 형태로 공동검열을 수행하곤 한다. 그 이유는 상호 묵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감찰에서 예외로 하는 인물은 간부 자식, 비행사, 공작원, 주요 간부친척, 핵종사자 등 예민한 분야 종사자들로 권력자와 그 혈연이 아님에도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

2005년 현재 세관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며 허가량(수량) 감찰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인민보안성에서는 외화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무역성은 기능이 축소되어 국제시장조사, 무역정보 및 가격 감독을 한다. 대외문제는 정책적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내각총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주요 군사기구 중 군 사업 관련해서는 총정치국(정치사업 조직 집행)과 총참모부(군령권 행사, 군사작전 지휘)가 중요하다.<sup>83)</sup>

선군정치 이후 국가기구 운영이 ‘수령 유일지배와 당지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기구 내에서 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2009년 새 헌법에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위상과 역할 강화라는 법제도적 현실화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선군정치 체제의 파행적 국가기구 운영은 ‘2012년 강성대국과 후계체제 구축’ 목표와 맞물려 일층 강화될 것이다.

## 2. 상호작용, 관계의 비선형성

비평형성과 함께 제기되는 복잡계의 또 다른 조건은 비선형성(non-linearity)이다. 비선형성은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선적인 선형구조에서 벗어난 복잡계의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한 체제가 운영되는

83) 한편 구술자에 따르면, 김정일이 세상을 너무 잘 알기에 개방이 아닌 봉쇄정책을 지속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내 정책방향 관련해서는 정권이 순간적인 캠페인식 규제는 지속하나, 꾸준히 인민 규제는 완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중적 저항이 봉기로 발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데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히 개별 행위자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양태보다도 개별 행위자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질서와 무질서 상태를 주목하는 것이다. 한 체제 내의 개별 행위자들은 복잡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복잡계에서 상호작용과 관계를 표현하는 피드백(feedback)은 ‘무질서한 편차(偏差)를 상쇄하는 부정 피드백’과 편차나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무질서와 변화를 초래하는 긍정 피드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떤 체제가 운영되는 양상은 대개 이 두 방향의 피드백이 상호작용하면서 개별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질서와 무질서를 동시에 보여준다. 결국 복잡계에서 중시하는 자기조직화는 부정 피드백과 긍정 피드백의 보완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스템의 생존 가능성은 무질서와 질서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커지게 된다.<sup>84)</sup>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사회과학에서 주목하는 가장 미시적 수준의 구성요소인 인간은 수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진 생명체로서, 그 존재가 이미 창발된 질서를 유지하는 생명체로서 지능을 가지고 있다. 분자들이 아무런 고민없이 화학결합을 하는 것과 달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진 않는다. 결국 자연과학에서의 구성요소들과는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외부 환경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하며 주변 환경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이 단위 개체가 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복잡계 관점에서는 적응성으로 해석한다.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계는 복잡계에 개별 행위자들의 적응성이 추가된다.<sup>85)</sup>

또한 우리 주변 환경의 복잡성은 이미 자연과학에 기초를 둔 뉴턴적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복잡성과 상호연결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의 탐색이 요구됨에 따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 구성된 개별 행위자로서 조직, 역시 역동적인 적응 및 진화체제로 간주되고 있다.<sup>86)</sup> 그 이론적 기원은 뉴턴의 절대시공 개념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에 의해 무너지면서, 시간과 공간이 독립된 개념이 아닌 서

84) 이광모·장순희, “복잡성이론의 적실성에 관한 사례 연구: 「2002 월드컵」 거리응원의 자기조직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서울행정학회, 2004), pp. 362~363.

85) 장덕진·임동균, “복잡계와 사회구조,” 복잡계 네트워크, 민병원·김창욱 편, 『복잡계 워크샵』, p. 57.

86) 최창현, “복잡계와 행정조직,” 복잡계 네트워크, 민병원·김창욱 편, 『복잡계 워크샵』, p. 385.



로 얽힌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된 물리학 이론의 발전이다.<sup>87)</sup>

뉴턴 이래로 서구문명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었던 인과론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적실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됨으로, 닐스 보어의 입자-파동설에 의해 뉴턴의 입자설이 부정되고,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에 의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입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고 관찰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sup>88)</sup>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물리학 이론의 과학성에 기초하고 있는 복잡계의 비선형성 이론에 기초하여, 북한 선군정치에서 당과 국가기구 개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즉 관계의 양태인 질서와 무질서를 동시에 주목하며, 이들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기 때문에 단선적인 선형구조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한다. 복잡계의 자기조직 체계는 선형적인 인과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군정치 체제에서 당과 국가기구라는 개별 행위자들 관계의 질서와 무질서를 비선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 가. 관계의 질서

### (1)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질서

북한체제에서 행위자 관계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권력구조의 안정성이다. 20세기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집단지배체제’인가 ‘1인지배체제’인가이다. 이러한 권력구조를 헌법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은 각료회의형 헌법에서 1인 지배체제로, 국가평의회형 헌법의 경향을 거쳐 대통령형 헌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경우 1948년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집단적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는 권력구조상 각료회의형 헌법유형을 취하였으나, 김일성 1인의 권력강화와 함께 1972년 헌법으로부터 국가주석에게 권

87) 모든 관찰자에게 공통되는 절대시간은 없다는 것과, 거리나 시간 등도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다. 한편 상대성 이론을 조직관리에 연결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성을 지칭하는 합리성 뿐 아니라 감성을 지칭하는 비합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양창삼, 『조직혁신과 창조적 경영』 (서울: 민영사, 1997), pp. 136~137.

88) 카프라, F., 이성범·구운서 옮김,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서울: 범양사, 1985); 카프라, F., 김용정·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서울: 범양사, 1998).

한이 집중되는 대통령형 헌법으로 전환되었다.<sup>89)</sup>

한편 1992년 헌법 개정에서 국방위원회가 군사권을 장악하여 새로운 권력 기관으로 등장한 후, 1998년에 이어 2009년 현재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국방위원회는 국정 전반의 권력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헌법 개정 과정이 북한 권력구조에서 ‘당-정 관계와 당-군 관계의 성격변화 논쟁’을 10여 년 동안 불러온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9년 현재까지 국방위원회가 비대해졌으나 국방위원회는 국가 기구의 통제/지도를 받지 않고 있다. 당 권력의 중심에 있는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다. 이를 당과 절대권력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당비서국과 조직지도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틀어쥐고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정일은 2009년 10월 현재까지 당을 중심으로 ‘1인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형식상 3권 분리체제인 최고인민회의, 내각, 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당우위 원칙에 따라 삼권위에 실권을 행사하는 당이 있고 또 그 위에 김정일이 있다. 김정일은 당총비서와 조직지도부 부장으로 당을 장악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군정치’의 중심에 있다. 더욱이 북한체제 운영의 실세인 조직지도부 및 전문부서 부부장들, 군내 당사업 라인에 소위 ‘만경대 혈통’이라는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자손이며, 자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물로 배치하고 이들이 서로 충성 경쟁하도록 유도하여, 체제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권력자를 정점으로 하는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질서’가 지속되는 것이다.

2006년 탈북한 고위직 탈북자의 구술에 따르면, 당 운영방식에서 각종 결정 사항은 각 관련 기관의 합의 후 김정일에게 올라간다. 보고 라인은 ‘직접 보고라인’과 ‘협의 보고라인’이 있는데, 1980년대부터 김정일이 결재하였고 조직지도부를 관장하는 김정일이 걸러서 김일성에게 올라갔다고 한다. 내각과 군은 당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그리고 각 부의 지도를 받는다.<sup>90)</sup> 김정일과 당이 군을 충성경쟁 구도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또한 간부 인선은

89) 박영자, “북한 중앙국가기관 특성과 체제운영 실태: ‘민주집중제’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p. 262.

90) 대개 경제부분은 혼선이 많다고 한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경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데, 경제부분의 혼선이나 갈등 시 조직지도부가 중재에 나선다.

간부부와 협의를 거치나 최종적으로 조직지도부에서 김정일 명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지시1, 지시2, 지시3으로 이루어진다.<sup>91)</sup>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은 당 간부로 군이나 내각 간부를 겸직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 구조이다. 즉, 절대권력자와 특권계급의 지속이다.<sup>92)</sup> 사적 소유를 대체할 사회적 소유의 주체인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전략과 어우러져 ‘전 인민의 소유 = 국가 소유’라는 등식을 성립하게 하였다. 또한 국가소유에 기초하였기에 사회적 생산으로 이루어진 잉여가치가 국가에 집중됨으로써 사회적 분배의 주체도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국유화에 의해 국가의 재부는 분배문제와 직결되었다.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개념은 분배 당사자가 된 당·국가 관료에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생산물을 분배하는 주체가 된 핵심 권력층들은 점차 특권계급화 되었으며, 1인 절대권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지배층은 기득권 및 응집력이 높으며, 다른 사회집단들에게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구조적 특성상 정치·행정 엘리트들이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법률 차원까지 독점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해 온 집단이다. 북한에 특권계급이 존재하며 각종 세도와 관료주의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연구와 탈북자 증언 뿐 아니라 김정일의 언술<sup>93)</sup> 등을 통해서도 이미 상식이 되었다.

북한은 1967년을 기점으로 절대권력자의 친위대를 당 간부층으로 구조화 하였기에, 기실 ‘정치적 엘리트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967년까지 약 20년 간 지속된 김일성의 반대세력 제거와 1인 지배체제 구축 작업은 절대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간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였다. 한편 정치적 경력의 중시는 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더욱 강하게 하였고, 출신

91) J00, 평양시·외무성 중앙간부 출신, 2006년 탈북.

92) 박영자, “북한 중앙국가기관 특성과 체제운영 실태: ‘민주집중제’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pp. 264~267.

93) 김정일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은 간부들의 관료주의 폐해로 인민대중이 정권으로부터 이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합리화하고 세도와 관료주의 등 사회주의의 부패를 단속해야 함을 지적한다. 즉, “역사적 교훈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집권당이 간부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이러한 김정일의 언술은 역으로 북한 사회에 팽배한 관료부패와 세도를 확인하게 한다.

성분에 대한 규제는 특권계급의 재생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특히 혈통에 기초한 가족적 배경은 특권계급의 재생산에 가장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권력집중의 고도화, 간부들의 자율성 부족, 권력층의 집단적이고 높은 결속력 등이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김정일 또한 파벌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정책의 최우선 원칙을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충성도로 하였다. 더욱이 인사권을 특정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짐으로써 파당형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 간부들의 횡적인 관계는 불안정하여 기관별·개인별로 김정일에 대한 충성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정책노선에 대한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반대세력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정책의 일종이다. 왜냐하면 간부층 내 충성경쟁은 절대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세력 형성을 어렵게 하여, 1인 지배체제 질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들 당 간부이며 군과 내각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특권계급은 북한의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주축들이다. 2005년 탈북한 고위직 탈북자에 따르면, 이들 특권계급은 세대별 차이로 인한 방식과 능력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살아남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정권=김정일 정권”이라는 일체화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94)</sup> 이것이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 (2) ‘당과 국가기구’ 관계의 질서

당과 국가기구 관계에서 당의 영도를 국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북한은 “당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기초 위에서 행정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게 한다.<sup>95)</sup> 당의 행정대행은 북한당국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이를 소련과 비교해 보면 그 정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sup>96)</sup>

94) B00. 평양시·인민보안성 중앙간부 출신, 2005년 탈북.

95) 리명일, 『국가관리학』, p. 32.

96) 예를 들어 소련은 기본적으로 연방-지방-지방 자치단체(도시, 농촌거주지역 등)라는 3단계 행정체제를 갖추었다.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행정상 지역주의 원칙과 민족자치에 따른 연방공화국 원칙이 공존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당과 국가기구 간부의 겸직현상도 현저히 낮았다. 소비에트 대의원과 각급 간부 인선에서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물이 후보자로 지명되어 찬반투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적었으며, 후보자 지명기관으로 공산당 외에 노조·코스몰·협동조합·공공기관·군대의 병사의회 등이 참여하여 협의구조도 북한에 비해 발전하였다. 더욱이 소련은 실적주의 평가문화가 팽배했기에 경제성장과 공업·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는 행정분야의 권한이 상당히 컸다.

당의 국가행정기구 지도 관계를 볼 때, 소련보다는 개혁·개방 이전 중국과 유사한 수평적·수직적 당의 지도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다민족 국가 특성 등으로 북한에 비해 당에 대한 각급 국가기구와 여타 사회단체의 자율성과 권력도 컸고 이들 간 상호작용도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sup>97)</sup>

앞서 밝혔듯, 북한의 국가기구는 수령-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로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따라서 절대권력자가 노동당을 통해 국가기구를 지도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국방위원회가 점차 강화된 1992년, 1998년, 2009년 헌법 개정시에도 변화되지 않는 지속성이다.

물론 2009년 10월 현재 북한 중앙국가기관 중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국방위원회이다. 현재 국방위원회는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총참모부, 후방총국, 호위총국, 총정치국, 보위사령부 등을 지도하며 이들 부서의 책임자들 뿐만 아니라 당에 주요 직책을 두고 있는 장성택 등까지 포괄해 구성되어 있다.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간부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 등 해외 유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행정·외교 등에서 전문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신입이 깊은 기술관료 출신이며 고위직 간부들은 대부분이 60~70대 연령층이다. 이들은 모두 당원이며 대개 당간부들이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겸 당 총비서인 김정일이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조명록(군 총정치국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도 겸직하고 있다. 그 외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군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명국, 군내 당생활지도와 인사를 담당하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이용철, 군대의 후방사업을 지도하는 리하일, 전 호위총국장 리을설, 전 평양방어사령관 박기서, 전 당중앙위원회 민방위부장 김익현 등 당내 군관련 고위직 엘리트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sup>98)</sup>

이렇듯 선군정치 체제에서 군사관련 주요 간부 이력을 보면 모두 당간부로

97) 박영자,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한국정치학회, 2005), p. 309.

98) 통일부, 『2009 북한의 주요인물』(서울: 통일부, 2009).

군이나 내각에 겸직을 하고 있으며, 주요 감찰은 당으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국방위원회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한편, 개별 구성원 측면에서도 생활과 업무 모두에서 당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관계로 질서 잡혀 있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당적 지도는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수준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수평적·수직적 당에 의한 국가기구 지도 관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sup>99)</sup> 권력구조에서 당우위성이 선군정치 시대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당의 지방국가기구 지도 상황을 통해 살펴보자.

당적 영도의 우월성을 국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북한은 지방에서도 지방당에 의한 지방국가기관의 수평적 통제가 국가관리의 기초이다. 지방당에 의한 지방국가기구의 수평적 통제 양상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군당위원회 기구도와 사업내역을 살펴보자.<sup>100)</sup> 가장 중요한 인적 통제로서 군당위원회 간부부의 간부사업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과장 및 지도원 ② 군 검찰소 검사와 예심원 ③ 협동농장 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 기사장, 부기장 등 3급 기업소 이하 군내 모든 공장, 기업소 지배인 ④ 모든 행정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체신소, 배전소, 위생방역소, 가축방역소, 병원, 학교, 위생지도/체육지도위원회 등)이다. 또한 군당위원회 산하에 ‘군당학교’를 운영하는 데, 간부부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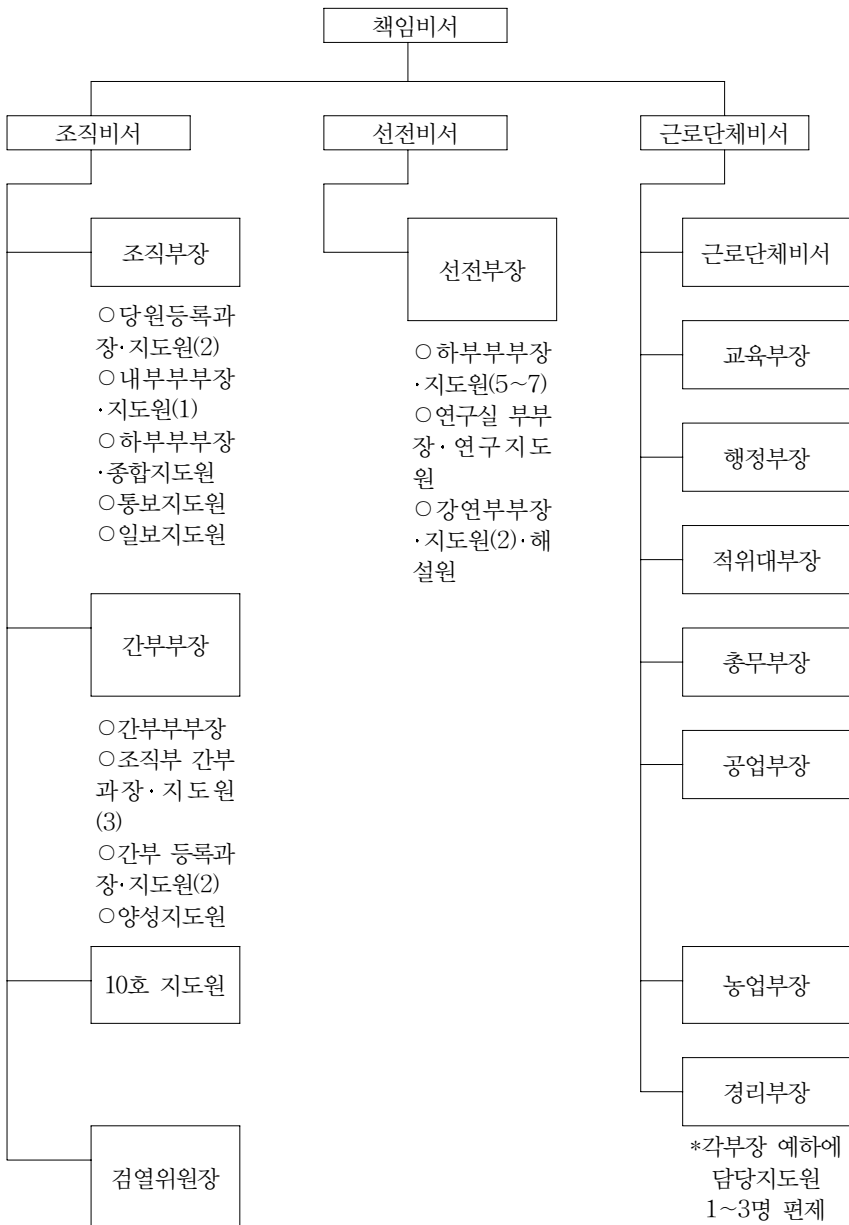
구체적 사업은 ① 군내 초급간부 양성 ② 당세포비서반, 작업반장반, 청년동맹일꾼반은 6개월을 교육기간으로 년 2회 교육/졸업 ③ 군내 모든 간부들을 대상으로 년 1회 1개월 간 재직강습 등이다. 당에 의한 수평적 통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군당위원회<sup>101)</sup> 각 부서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차원에서 당에 의한 국가/행정 사업 통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권력구조는 <그림 IV-3> ‘북한 군당위원회 기구도’<sup>102)</sup>를 참조하기 바란다.

99) 박영자,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pp. 316~317.

100) 정보사령부, 『북한조직편람』 (서울: 정보사령부, 2004), pp. 67~75.

101) 북한의 군당위원회의 총 인원은 약 80명 정도이고, 책임비서 유고시 조직비서가 대리한다.

<그림 IV-3> 북한 군당위원회 기구도



102) 정보사령부, 『북한조직편람』, p. 66.

북한의 김정일과 핵심 권력세력에 의한 당의 통제력은 여전히 국가기구에 대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미시적 관계의 질서를 지역 간부출신 탈북자 구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북한 공장에서는 국가기구에 해당하는 행정반이 작업반인데, 작업반 활동에 작업반장·기술지도원과 함께 당비서가 관여한다. 이것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초이다. 이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최종 주요 결정을 할 때는 당비서가 나서서 처리한다. 농장에서 농장원들이 행정간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당비서 말을 듣는데, 경제난으로 생활총화가 제대로 안되어 당비서가 나서서 진행했다고 한다.<sup>103)</sup>

한편 ‘선군정치’로 인해 국방위원회와 함께 군(軍)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당을 중심으로 한 통제 질서는 지속되고 있다. “군대 안에서도 당기관하고 행정기관이 있는데, 행정 쪽으로 보면 내가 살던 실례를 본다면 작업반장이 나 부락당 비서가 있는 것처럼 행정 쪽은 중대장이 위지만, 조직생활에서는 정치지도원이 위인 것처럼 당의 밑에서 일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sup>104)</sup>

이렇듯 당과 국가기구 행위자 관계에서, 선군정치 체제에서도 절대권력자 김정일을 중심으로, 당의 국가기구에 대한 지도와 통제의 질서는 지속되고 있다.

## 나. 관계의 무질서

복잡계의 비선형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행위자 관계의 무질서 양상을 당과 절대권력자, 당과 국가기구 관계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1)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무질서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대표적 양상은 절대권력자와 소수 친위대 권력층의 지도/통제로 당 체계 및 제도의 형해화, 즉 당의 비체계적이고 무질서한 운영이다. 익히 알듯이 5년에 1회씩 개최되도록 되어 있는 노동당대회는 80년 이후 2009년 10월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열리지 않고

103) L00, 함경북도·농장 간부출신, 2002년 탈북.

104) L00, 함경북도·농장 간부출신, 2002년 탈북.



있으며, 6개월에 1회 이상 열어야 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1993년 12월 제6기 21차 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개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당군사위원회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어떤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앙군사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도 1997년 10월 당 규약상 절차를 무시한 채, 김정일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를 통해 이제는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아닌 ‘당총비서’로 바뀌었다. 1995년 선군정치 이후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대표회, 도(직할시) 대표회, 성, 중앙 및 도당기능을 수행하는 당조직들의 대표회에서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의 형식을 취한 뒤,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연명으로 선거나 공식 의결도 거치지 않고 “우리당의 공인된 총비서로 추대하였음을 엄숙히 선포한다”는 선언으로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것이다.<sup>105)</sup>

당의 중추 기관인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일성 사망 후 그 위상과 권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상징적 제도가 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기존 멤버들의 사망으로 김정일 1인 위원회가 되어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가 되었으며, 정치국도 거의 휴업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일성 사망 전에 자주 열렸던 협의회도 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다만 비서국이 당내에서 그나마 기능하고 있는 권력기관이다. 정치국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비서국은 노동당을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비서국에서 김정일이 주재하는 회의는 한 달에 1~2회 정도 개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회의보다는 주로 해당부서에 문건을 내려 보내고 전화로 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고 한다.<sup>106)</sup>

그러나 앞서 운영원리에서 설명했듯, 이 비서국마저 2000년대 이후 점차 별 다른 기능을 못하고 전문부서 특히 김정일과 조직지도부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은 권력을 장악한 초기에는 스스로를 ‘당중앙’이라 부르며 하였고, 다음에는 ‘당’이라 부르며 하고, 이후에는 ‘조국’이라 부르며 하고 있다.<sup>107)</sup> ‘김일성 조국’에서 ‘김정일 조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105) 『로동신문』, 1997년 10월 9일.

106)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107) 위의 책, p. 52.

것이다.

2006년 이후 탈북한 고위층 탈북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이와 같이 파행적인 김정일의 개별적 정치와 지도 방식은 선군정치 내내 지속되었다.<sup>108)</sup> 비밀리에 조직하고 정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김정일은 공식석상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측근과의 연회를 통한 정보 수집과 정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연회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김정일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09)</sup>

측근들이 밀집해 있는 부서는 김정일이 대표하고 있는 조직지도부이다. 조직지도부에서 당생활지도와 감찰, 행정, 경제 분야 등 체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0월 남북정상회담 과정과 2009년 현재 북한 주요 정책의 시행 및 선전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같은 당 체계의 무질서는 2009년 10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또 한 축으로 살펴볼 것이 특권계급인 엘리트층의 변화조짐이다. 기본적으로 절대권력자의 친위대인 특권계급 주도의 사회라 하여도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장·청의 갈등, 청·홍의 갈등, 해외파·국내파의 갈등, 김정일 친인척과 비친인척의 갈등, 군부 내 정치 간부와 작전 간부의 갈등도 있으며, 개혁파 성향과 보수파 성향의 갈등도 있다. 다른 사회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세대 간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 권력층 내부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7년 10월 김정일 비서가 당 총비서에 추대된 시점을 전후해서이다. 이후 김정일은 1998년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대의원 선거를 통해 내각과 근로단체의 간부들을 상당수 교체한 후,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권력승계를 마무리하였다.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으로 특권계급으로서 ‘혁명 2세대’의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김정일이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후 24년 만에 세대교체가 완료된 것이다.

그리고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실력이 검증된 인사를 중심으로 간부층이 보강되었다. 이는

108) B00. 평양시·인민보안성 중앙간부 출신, 2005년 탈북; J00. 평양시·외무성 중앙간부 출신, 2006년 탈북.

109)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pp. 60~61;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2003년 8월 제11기 대의원 선거를 통해 군과 내각 고위인사 변화에 반영되었다. 실력과 함께 김정일의 신뢰를 받는 이들이 대의원으로 세대교체된 것이다. 그리고 2009년 제12기 대의원 선거에도 이 경향은 큰 변동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국 60년을 넘은 북한체제에서 소위 혁명2세대들의 평균 연령대는 2009년 현재 70대로 물리적 생명이 다 해가고 있다. 또한 선군 정치와 함께 실리주의를 추구한 김정일 시대, 특히 2003년 대의원 선거 이후 정보·과학기술, 실력·실리가 강조되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의 전문성을 갖춘 경제관료와 군부의 40대 ‘혁명3세대’들이 부상하면서 간부층원의 세대 폭이 넓어졌다.

이들 혁명3세대들은 청장년기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고 ‘사상과 이념보다 돈과 생존’의 중요성을 깨달은 세대이다. 따라서 2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의식과 행동을 보이곤 한다. 중앙 간부출신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sup>110)</sup> 구체적으로 정치엘리트들 중 보수 엘리트층은 주로 고령층으로 외부 개방에 알리지 반응을 보이고, 개혁·개방에 대해 자유주의 바람이라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반면, 진보 엘리트층은 주로 젊은 엘리트들로 북한도 이제 국제시장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고 한다. 젊은 정치엘리트의 논리는 개혁·개방을 하면서 실리를 챙겨, 경제를 살리고 김정일 정권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념과 사상이 약화된 상황이기에 엘리트 간에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는 소위 “돈에 의한 선”들이다. 엘리트층이라도 승진, 진학, 입사에 돈이 80~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맥관계의 성격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친인척, 형제, 동창이 중요했는데, 지금 이런 연고는 약화되었고 돈(뇌물)에 의한 인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나 현재에나 중요한 인맥은 당 및 군 관련 권력자/기관과의 네트워크이다. 권력관계가 돈(뇌물)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군정치 체제에서 당과 절대권력자 관계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대표적 양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그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은둔정치, 측근정치, 연회정치 등으로 표현되는 절대권력자를

110) B00. 평양시·인민보안성 중앙간부 출신, 2005년 탈북.

중심으로 한 당 운영의 무질서는 절대권력자 개인에게 업무하중이 집중되는 구조를 창출하여, 절대권력자 개인에 의해 체제 전체의 안정성이 좌우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이론에 기초해 볼 때 체제 불안정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것이 김정일의 건강이 북한체제 전망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현실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특권계급 네트워크의 성격변화, 특히 세대별 의식변화와 돈(뇌물)에 의한 특권계급 관계 변화 조짐 등이다. 제도와 달리, 대인관계적 인맥정치의 특징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 정치구조의 질서가 자리 잡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제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개인적 이익과 상황에 따른 각종 임명, 결정 등은 북한체제의 무질서를 증폭시키고 있다.

## (2) '당과 국가기구' 관계의 무질서

당에 의한 국가기구의 영도성(지도성)이 전제된다고 하여도, 선군정치 체제에서 무엇보다 당과 국가기구 관계의 무질서를 대표하는 기구는 김정일로 대표되는 국방위원회이다. 국방위원회는 북한 국가기구 체계도로 보면 국가기구의 하나로 최고인민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군 행정기구이다. 그러나 선군정치 이후 국방위원회가 국가기구의 실세로 부각되고 선군정치를 주도하면서, 국가기구의 위상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국정전반을 지도/통제하는 양태를 취하고 있다.

원래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불과했으나, 1992년 개정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또한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하였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신설된 국방위원회는 당시 주석이 겸임하였기에 권력구조상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1992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분리되고, 1993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그 의미가 달라졌다.

1970년대 중반이후 김정일 후계체제가 가시화되면서 김정일의 권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김일성 사망 이전인 1993년 김정일이 최고군사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무력의 통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1997

년 공식적으로 당총비서로 추대되고, 1998년 헌법에서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포괄하며 국방위원회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어, 선군정치와 함께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권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보강과 함께 이루어진 국방위원장위상과 역할 강화가, 후계구도와 2012년을 기점으로 한 북한당국의 강성대국 건설론과 맞물려, 선군정치를 넘어선 선군체제로 이해될 정도로 국정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이러한 선군체제로의 체제전환 방향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준비해 온 측면이 있다. 선군정치 관련 2002년 발행된 북한의 공식문헌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이미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기구체제에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와 권능을 격상시킨 군중시의 국가정치체제”를 수립했다고 한다. 종전에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다음 순위에 있었다면, 1998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다음 순위에 놓임으로써 국방위원회의 법적지위와 구성, 임무와 권한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주권기관들, 사법검찰기관보다 우위에 놓였다는 것이다.<sup>111)</sup>

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형식적 의결기구이며, 실제 임무와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미 1998년 헌법개정 이후 국방위원회가 실질적인 국정 전반 사업에 대한 권한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직책”이라고 한다.<sup>112)</sup> 따라서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국정전반에 대한 최고권력자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점은, 선군정치체제가 군정체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즉, 국가기구 자체를 군사체제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 체제에서 군사를 우선시하고 군사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도록

111) 김현환, 『김정일장군정치방식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p. 200.

112) 위의 책, p. 200.

권능을 규제한 정치체제”라는 것이다.<sup>113)</sup>

그런데 2009년 새 헌법은 혁명의 주력군으로 군대와 군인을 법제도적으로 공식화했을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가 국가기구와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이번 헌법 개정은 북한체제 운영의 현실과 권력승계를 포함한 차세대 북한 정치체제를 전망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현격한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sup>114)</sup>

외형적으로는 조직규모의 확장으로 드러났다. 2009년 3월까지 국방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김정일 포함 총 8명(조명록 제1부위원장, 김영춘, 이용무, 오국렬 부위원장, 그리고 전병호, 김일철, 백세봉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앞선 북한 중앙국가기구도에서 확인 가능하듯 2009년도 헌법 개정과 함께 국방위원회는 총 13명으로 대폭 증원되었다.

새 헌법은 최고권력자 위상과 임기 관련, ‘최고영도자로서 국방위원장’(제10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5년)와 같다’(제101조)고 규정하고, 임무 및 권한(제103조) 관련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지도, 국방부문 중요간부 임명/해임, 외교 조약 비준/폐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전시사태·동원령 선포 등 6개항을 적시했다.

국방위원회는 1998년 헌법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제100조)’이었으나, 새 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제106조)’으로 규정됐다. 권한과 관련, 이전 헌법은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등 군사관련 사항만 있었지만, 새 헌법은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국방위원장 명령·국방위원회 결정 등을 감독하고 대책 수립, 국방위원장 명령·국방위 결정 및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폐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기능을 부여했다.

명목상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의 권한은, 특별 사면권과 ‘중요조약’에 대한 비준·폐기 권한이 국방위원장에게 넘어감에 따라 상당히 위축되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국방위원회의 강

113) 위의 책, p. 201.

114)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2009년 9월 28일; 『연합뉴스』, 2009년 9월 28일; 『경향신문』, 2009년 9월 29일.

화이다. 새 헌법에서 국방위원회가 국가기구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정책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군의 민간정치 활동 범위와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군정체제’를 의미한다.

한편 이번 새 헌법은 98년 이후 김정일이라는 절대권력자 1인이 당총비서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며, 조직지도부장이며, 동시에 국방위원장으로 당-군-정 의 절대권력을 모두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진행된 무질서를 법제화한 측면도 있다. 이미 선군정치 체제에서 국방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이전부터 “국방은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 사회생활 등 민족의 생활영역 전반에 비끼게 되는 거대한 창조사업으로 민족번영과 사회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지향하는 국사중의 최대 국사”인 것이다.<sup>115)</sup>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위원 모두가 선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내용은 어떤 부서의 감독도 받지 않고 국방위원장이며 당총비서인 김정일 주도로 이루어졌다. 군을 국가사업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군의 기풍을 온 사회에 전파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지는 것이 선군정치이다. 이러한 군주도 국가운영은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체제유지의 핵심기관인 군대 중요성, 대민통제, 군조직의 위계성, 김정일 정권 안정화 등이 고려되어 실시되었다. 그러나 위기관리 정책이었던 선군정치는 2009년 새 헌법을 기점으로 ‘사상이자 이념으로 법제도화’ 되었다. 주체사상만을 지도적 지침으로 명시한 이전 헌법과 달리 새 헌법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고 명시했다. 그리고 종전 헌법 3개 조문에 있던 “공산주의” 단어를 삭제하였다. 국가의 기능을 담은 제8조에서 “국가는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면서 기존 헌법에 없던 ‘군인’과 ‘인권’을 포함시켰다. 한편, 신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국가의 기능에서 인민의 ‘인권’ 개념 포함은 국제적 공세와 대응을 의식한

115) 『조선중앙방송』, 1998년 11월 15일.

조치이고 ‘조선노동당의 영도성’은 전통적 원칙이다. 주목할 점은 김정일이 창조했다는 선군사상을 김일성이 세웠다는 주제사상과 나란히 병렬하여 사상적 입지를 동등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당국은 2000년대 초부터 맑스(K. Marx)의 공산주의와 노동계급론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판하였고, 혁명의 주력군을 군인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해 2003년 1월 29일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 세기 반전에 맑스가 내놓은 리론과 공식이 오늘의 현실에 맞을 수 없습니다. 사회환경, 계급관계, 노동계급 처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과학기술과 정보산업 발전과 함께 노동계급 인테리화, 부르조아 사상 범람으로 노동계급의 계급적 각성이 억제되었습니다 … 시대적 환경으로 보나 노동계급의 노동과 사회적 처지, 노동운동의 실태로 보나 오늘의 노동계급을 산업자본주의시대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시기의 노동계급과 결코 같이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선군정치를 펴면서 노동계급이 아니라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 것은 혁명의 주력군 문제, 혁명과 건설에서 군대의 역할문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관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혁명의 주력군 문제는 고정 불변이 아니라 계급관계의 기초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sup>116)</sup>

또한 2001년 이후 북미갈등이 고조되면서 선군사상 이전에 군대를 앞세워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총대사상, 총대철학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북한당국은 총대사상, 총대철학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총대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불변성에 있다. 총대는 오로지 주인이 겨누는 목표를 향해 곧바로 탄알을 날린다. 국제정세가 변했다고 하여, 모든 것이 어렵고 간고하다고 하여 결코 그 양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세추이를 보아 가며 갈 길을 선택하는 간신들의 기회주의적

116)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김정일 선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pp. 356~359.



작태는 총대의 변함없는 모습과는 상반되는 몰골이다. 총대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 어떤 약조건에서도 쏘면 탄알을 날리기 마련이며 에들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 총대의 생리는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혁명 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 가는 혁명동지의 참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총대는 타협과 양보를 모른다. 혁명은 그 자체가 원칙이어서 단 한걸음의 후퇴와 양보가 열걸음, 백걸음의 후퇴와 양보를 가져오며 그것은 혁명의 순결성을 흐리게 하며 적에게 룡락 당하는 비극적 후과를 빚어낸다. 쏘면 목표판을 구멍내기 마련인 총대의 무한한 비타협성이야말로 혁명을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편차도 없이 곧바른 길로 전진하게 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총대는 단호하고 무자비하다. 원수에 대한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력은 총대의 근본속성인 동시에 최대의 장점이라 하겠다. 총대앞에서는 리유와 구실이 통하지 않는다.<sup>117)</sup>

이렇듯 총대사상에서 한 발짝 나아간 ‘선군사상’은 2009년 신 헌법에서 주체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북한의 사상으로 법제도화 되었다. 이 선군사상의 법제도화는 향후 후계체제와 맞물려 북한의 당-국가기구 관계의 무질서를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국방위원회 위원의 총대와 위원들이 당에 고위직 인물로 겸직을 통해 당과 국가기구를 동시에 관장하면서, 역할의 혼선과 무질서가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특히 주목해 볼 점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당과 국가기구 행위자들 관계의 무질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군정치 체제에서 군과 함께 북한 체제유지의 핵심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와 노동당 간의 관계 특히, 지역단위에서 무질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간부인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보위부는 중앙 직속이기에 각 지역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보위부에 걸려들면 각 급 당책임비서도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sup>118)</sup>

앞서 당의 수평적·수직적 통제에서 설명했듯이, 공장·기업소에서는 여전

117) 김현환, 『김정일장군·정치방식연구』, p. 204.

118) K00. 황해남도·건설총국 지도원 출신, 2003년 탈북.

히 초급당이 결정적 권력을 행사하는 데 이들은 구역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당원이 아닌 각 작업반 선동원을 선출할 때도 공장 초급당에서 구역당에 등록하게 한 후, 구역당의 비준이 있어야 선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역당이 초급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식량난 이전보다 상당히 약해졌다고 한다.<sup>119)</sup>

이처럼 중앙-지방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지역 단위와 인민생활의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선군정치 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의 당과 국가기구 개별행위자들의 관계는 선군정치 이전에 비해 무질서한 모습이 상당히 증대하였다.

119) K00, 함경북도·공장자재 지도원 출신, 2004년 탈북.

# 제5장

## 일반 주민



# 제5장

## 일반 주민

이 장에서는 북한의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행위 주체들 간의 관계와 그 변화 양상을 통해 북한 체제변화의 가능한 경로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를 집단의 사회정치적 기능과 체제 내에서 위치와 영향력에 따라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자면 수령, 간부, 일반 주민으로 나눌 수 있다. 주체사상에서는 사회를 일종의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인민대중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성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통일체”이며, 지도자인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전체 인민이 굳게 뭉쳐 하나의 통일체로 활동하게 하는 인민대중의 심장”이다.<sup>120)</sup> 이러한 비유 속에서 설명하자면, 간부는 뇌수이자 심장인 수령과 말단 기관에 해당하는 일반 주민들을 연결하는 혈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북한 주민과 지도자와의 관계, 주민과 중간간부와와의 관계, 일반 주민들 간의 관계로 나누어 각각의 사회주체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각 행위자 집단의 행위 규칙을 도출하고, 북한 사회에서 창발성이 출현할 수 있는 혼돈의 가장자리와 자기조직화의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 1. 주민과 최고지도자간 관계: 시혜로부터의 독립

#### 가. 물질적 자립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인 수령과 일반 주민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체제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북한 체제의 성격에 관해서는 북한의 특수성과 사회

120)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pp. 213~214.

주의적 보편성 중 어느 측면을 주요하게 보는가,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 중 어느 관점을 취하는가 등에 따라 전체주의 국가, 스탈린체제, 사회주의적 조합주의국가, 유격대국가/정규군국가, 수령체제, 유일체제 등 다양한 규정과 해석이 존재한다.<sup>121)</sup> 그렇지만 어떠한 시각과 접근법을 취하든간에 북한 사회의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북한 사회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총체적 지도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당의 역할을 수령이라는 초월적 존재에게 이양하였고, 수령이라고 불리우는 최고지도자의 권위가 이데올로기와 법, 제도, 규범, 절차 등을 규정하며, 그 규정력이 항구적으로 제도화되었다. 당은 수령의 영도를 정책화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지도하는 집행자의 역할을 하며, 대중은 당의 영도를 받으면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는 주체가 된다. 이것이 수령, 당, 대중 간의 유기적 관계이다.<sup>122)</sup> 사회적으로 볼 때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수령은 전체 국가 유기체를 이끌어나가는 중심이자 북한 사회라는 대가족공동체의 아버지이고, 일반 주민들은 수령과 당과 주민이 하나가 된 유기체 속에서 수령의 시혜를 받고 그 뜻을 받들으로써만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아 생존하고 기능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구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배급제와 복지제도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분배제도라는 물질 기반과, 교육기관, 언론·문화매체, 대중조직 등 수령과 주민을 혼연일체화하는 각종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그 이전 시기까지 유기체적 사회관에 근거해서 유지되었던 최고지도자와 일반 주민들 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sup>123)</sup> 해방 후 50년간 북한 주민들은 배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심화되자 국가는 배급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배급제는 일종의 간접 임금으로 일반 주민들의 실제

121) 북한 체제 연구의 관점과 쟁점에 관해서는 곽승지,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 『현대 북한 연구의 쟁점 2』,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122) 전현준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박영사, 2005), p. 68.

123)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란 과거의 평형 상태가 급격하고 불안정한 변동 때문에 더 이상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순간을 말한다. 존 루이스 개디스, 『역사의 풍경』 (서울: 에코리브르, 2004), p. 152.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즉, 식량, 주택, 교육, 보건, 의료 등의 현물보조가 배급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말부터 식량공급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배급이 간헐적으로 중단되었으며, 1994년에서 1995년경에 이르면 배급이 거의 중단되어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배급제에 의존할 수 없게 되고 아사자도 속출하였다. 고난의 행군 이전에도 공급할 소비재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인플레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생활비’로 지불되는 화폐임금의 격차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물질적 자극이 되지 못했지만, 실질소득의 50%를 차지하는 배급제의 존재는 노동자들을 계획의 틀에 묶어두는 강력한 물질적 요인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제의 마비는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선택하게 만들었다.<sup>124)</sup>

주민들은 국가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각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존의 방식을 강구해야 했다. 자재와 원료 부족, 전기 공급의 중단으로 거의 대부분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장사, 가내작업, 각종 일당 노동 등을 통해 하루 생활을 유지했다. 공장에서는 ‘8·3노동자’로 등록하거나 부업으로 번 돈을 공장에 내고 출근을 대체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였다. 노동의 속성상 일터에 긴박될 수밖에 없는 사무직 노동자나 인텔리 계층은 여가시간이나 노동시간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시장과 연계된 부업을 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기술을 사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했다.

주민들의 경제활동의 터전은 공장에서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주민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합법과 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비공식 생존시스템을 형성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북한 당국이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한 1998년경에 장마당은 시장적 거래공간으로서 불안정하지만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sup>125)</sup> 이영훈은 주민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상거래와 개인 생산이 확대되는 시장화현상을 국가 주도의 시장화와 대비되는 ‘자생적 시장화’로 개념화하고, 그것의 전개를 ‘시장과 계획의 이중운동’으로 분석하였다.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가운데 북한 당국에서는 공식

124)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pp. 48~49.

125)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역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p. 130.

적 제도의 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조직에 새로운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는 ‘실리’를 추구하되 계획경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sup>126)</sup>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적 조치는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3월의 시장확대 조치이다. 2002년 7월 1일에 발표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가격과 임금의 대폭적 인상, 정부보조금의 대폭적 축소와 재정의 건전화도 모, ‘변 수입’에 의한 기업경영관리 평가방법의 도입, 성과에 따른 분배방식 도입 등 자원배분, 의사결정권, 인센티브 등 경제 전반적인 부문에서의 변화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7·1조치 이후에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임금인상폭을 상쇄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당국은 배급을 정상화하지도,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증가시킬 만큼의 물질적 유인을 제공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을 시장에서 생산현장으로 복귀시킬 수 없었다.

북한 당국은 2003년 3월에 종래의 ‘농민시장’을 ‘시장’ 또는 ‘종합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종합시장의 도입은 이미 확산된 시장을 제도화함으로써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장이라는 제도를 계획과 연계시키려는 7·1조치 이후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sup>127)</sup>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종합시장의 도입은 북한주민들의 실제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전까지 불법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던 상행위의 상당 부분이 합법적 영역 속에서, 또는 합법적 시장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 이후 국가가 부여한 직무와 무관하게 생계 유지를 위한 자구책으로서 불법적 영역 속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해왔던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일종의 ‘경제적 시민권’<sup>128)</sup>을 획득한 것이다.

이 조치로 시장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2003년 3월의 종합시장 조치 이후 전국적으로 약 300~350여개의 종합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는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구역마다 시장을 하나씩만 세우라고 했고, 전국적으로는 군 단위에서는 1~2개씩, 시 단위에서는 3~5개를 세우

126)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2005년 하반기호, 통권 제44호(평화문제연구소, 2005), p. 61.

127) 위의 글, p. 66.

128)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208.

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현재 평양에만 약 40여 곳 이상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9)</sup> 일부 학자들은 현재 북한의 시장화 수준은 소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기업구조조정, 사적 고용 등의 지표를 고려했을 때 구소련·동구의 체제전환 초기 수준에 도달해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특정 부분에서는 체제전환에 착수해서 1~2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제도가 아니라 현실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기의 모습과 체제전환 초기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인 시장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sup>130)</sup>

시장화의 진전 정도는 주민들의 국가와 수령으로부터의 물질적 자립 정도와도 비례한다. 자생적 시장화가 진전되고 이에 대한 당국의 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개별 기업과 시장활동을 하는 개인이 국가와 수령을 대신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주체가 되었다. 식량난 이후로 배급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식량이 부족할 때마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 주민들을 계획이라는 틀로 장악할 수 있는 통로인 동시에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배급제를 공식적으로 유지하되 수매가격을 높여 농업 생산자들에게 생산성 증대의 물적 유인을 제공하고 국정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배급에 의존하는 비중을 낮추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식적 제도를 조정했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배급제를 공장, 기업소 단위로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식적 제도를 조정했다. 배급제도가 자력갱생의 논리에 지배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공장, 기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제대로 배급을 받게 되지만 성과가 저조한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배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sup>131)</sup> 일부 외화 벌이 기업소 등에서는 이전 시기에 국가가 지급했던 일상적인 식량뿐만 아니라 명절 공급, 노동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국가를 대신해서 지급하고 있다.

129)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담론 201』, 제10권 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p. 88.

130)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9권 3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6), p. 39.

131)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p. 67.



북한이탈주민들은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말한다.<sup>132)</sup> 즉 과거 국가의 배급에 의존해왔던 방식에서 지금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13)은 경제난 이전 시기에 “입당을 해서 당원이 되고 직위를 얻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의 힘이라는 게 사람들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국가 배급망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가족이 시장과 연계된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로 기능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대가정’을 대체하여 개별 가족이 생계유지의 기본단위이자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자 신뢰의 단위로 자리잡았다. 2000년대 들어 경제적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부분적으로 일부 지역이나 군수부문 노동자 등 일부 부문에서는 배급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가서 매달려 있는 경우는 없다고” 말한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소득에서 배급이나 직장에서 받는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북한이탈주민 122명을 대상으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배급이 규정대로 지급되었다는 응답은 2%, 배급 기일이 지켜졌지만 배급량이 줄었다는 응답이 10%, 배급 기일과 배급량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39%,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 식생활을 주로 배급을 통해 해결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에 불과했다.<sup>133)</sup>

132) 이 연구에서는 2009년에 실시한 심층면접 자료를 포함하여 총 13건의 북한이탈주민 면접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술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례번호	성별	연령대	직업	지역	탈북연월	면접일
사례 1	남	20대	장사	함남 함흥	2002	2003.11.27
사례 2	여	60대	노동자, 공장세포비서	함북 무산	1998.5	2004.4.6
사례 3	여	30대	의사	함북 청진	2000.3	2008.5.19
사례 4	여	40대	장사	함북 무산	2007.6	2008.5.27
사례 5	남	40대	관리직	평남 남포	2002.8	2008.5.28
사례 6	남	40대	노동자	함북 청진	2008.2	2009.4.21
사례 7	남	50대	교원	황북 사리원	2008.9	2009.4.22
사례 8	남	40대	인민위원회 부원	평북 온천	2008.6	2009.5.11
사례 9	여	30대	연구사장사	평양	2007.9	2009.5.13
사례 10	여	60대	공장 창고장	양강도 해산	2008.5	2009.5.26
사례 11	남	30대	장사	양강도 해산	2008.9	2009.6.1
사례 12	남	40대	보안 부문 간부	평양	2005	2009.6.9 /2009.6.16
사례 13	여	40대	여맹선전대	함북 온성	2008.9	2009.8.20

본 연구에서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25명 중 가족 몫까지 안정적으로 배급을 받으며 100% 노임만으로 생활한 사람은 안전원 등 간부 계층에 해당하는 세 명과 평양거주자 한 명에 불과했다. 이외에 네 명이 한달에 보름치 이하, 또는 명절마다 조금씩 간헐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7명은 전혀 배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주민이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배급을 받는 경우에도 배급량과 기일이 지켜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소득에서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미만인 경우가 18명, 5% 정도가 1명, 20% 정도가 1명이며, 나머지 소득은 주로 장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고, 기타 외국 거주 친척으로부터의 송금, 소토지농사 등의 수입이 주된 소득 원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임과 배급만으로 생활한 다섯 사람 중 간부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은 소토지농사로 식량을 충당하여 하층 생활을 하거나 극빈층의 삶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정확한 계량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현재 북한 주민들 대다수는 국가의 배급이나 노임이 아닌 시장과 연계된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사회심리적 독립

국가와 최고지도자로부터의 물질적 자립은 또한 주민들의 사회심리적 독립을 가져왔다. 배급제와 국가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던 의료,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는 수령과 당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 도덕적으로도 수령과 주민들을 결속하는 강력한 기제였다. 1980년대 말에 고등중학교를 다녔던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1)은 학교를 다니면서 해마다 지급되었던 교복과 선물을 받았을 때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33) 이우영 외,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8), p. 161.

매 해마다 무료 교육에다가, 무료 교육을 우리가 받는데다가, 매 해마다 교복을 말이에요, 학생 교복을 무료로, 국가가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주니까, 돈 일푼 안 받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해마다 4월 15일, 2월 16일에는 그 선물, 다 똑같은. ... 인민학교부터 고등중학교, 십년 동안 매년마다 교복을 새로 딱딱 주니까요. 그 새 교복 받을 때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 그러니까 충성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죠.

배급과 무상교육과 매년 최고지도자의 생일에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물품들은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시혜와 은덕으로 인식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 과업과 국가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에 보답해야 할 의무감을 절감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총체적인 경제적 난관은 체제의 도덕적 지배를 정당화하던 계획-재분배체계의 마비를 의미했고, 이와 맞물린 정치적 재분배 체계에도 위협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기존의 인민적 시혜와 노동을 통한 보답이라는 기본적인 도덕담론 구조가 위협받을 수 있는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도덕담론의 질서 속에서 위장되어 있던 사회 각 층위의 ‘생계윤리’들이 경제난 속에서 현실적 생계논리로 적극화되면서 개인의 생계활동을 정당화하는 도덕담론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34)</sup>

그 결과 수령과 주민을 결속했던 도덕담론에 모종의 변화가 발생했다. 배급체계의 마비와 시장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의 시기는 도덕적 지배의 위기와 생계논리의 부상에 따른 사회주의대가족의 호주인 수령으로부터의 심리적 이유기(離乳期)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를 일컬어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6)은 고난의 행군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사람들을 밝게 해 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전환점”이라고 말한다. ‘전환’의 요점은

134) 홍민, “북한의 ‘관계자본’ 교환구조와 시장교환의 전유,” 『현대북한연구』, 9권 3호(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6), p. 74.

주민들이 “국가의 그늘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밀착됐다”는 것이다. 경제난 이전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사고 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나의 안위가 분리되기 어려운 것이었다면, 이제는 ”정부는 정부끼리, 우리는 우리끼리“라는 한 북한이탈주민의 말로 단적으로 표현되듯이 개인과 가정이 국가와 최고지도자로부터 떨어져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국가와 최고지도자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이전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당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게 만들었다. 최근 들어서도 경제적 사정이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배급제의 복구를 장담하지만 배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와 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가까운 친지들이나 믿을만한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국가 정책이나 최고지도자를 비판하는 말들이 오고간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6)은 지식인 출신의 친한 친구들과 간에 “야! 이번에 김정일이 또 핵 준비한대! 미사일 한 번 쏘므로 해서 6자회담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겠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다니?” 정도의 정권에 대한 비판이 오고간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국가 지도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은 중대한 정치적 범죄로 취급되어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친밀하고 믿을만한 사람들간의 사담 수준을 넘어서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이나 조직적인 저항 행위를 쉽게 찾아볼 수는 없다.

## 2. 주민과 간부간 관계: 타협과 기생

### 가. 생존전략으로서의 흥정과 타협

북한에서는 간부를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군”이라고 설명한다.<sup>135)</sup> 이들에게는 “당의 골간 력량이며 당정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라는 사회적

135)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p. 64.

역할이 부여된다. 간부들은 당 또는 행정 부문에서의 직위와 직무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이들을 정치관료와 경제관료로 구분하기도 한다.<sup>136)</sup> 각 부문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하층 간부와 중간 간부들은 국가와 당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전달, 주민들 속에서 구현하고, 각 부문의 실태와 주민 동향을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들은 사회적 장의 역학관계에 따라 지배와 인민을 오가고,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정·적응·변화시킨다.<sup>137)</sup> 즉 간부들은 수령과 주민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북한의 중간 간부와 하층 간부들에게 주어진 매개의 공간은 수령과의 관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충실한 재현과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간부들과 주민들 양자 간의 공모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전유<sup>138)</sup>의 공간인 것이다.

간부들은 주민들과의 일상적 대면 속에서 교환관계를 만들어낸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간부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주민들의 일상에 약탈적으로 기식하면서 교환관계를 갖는다. 생산관료들은 작업장에서 권위적으로 군림하거나 노동을 규율하는 수단으로 소소한 분배의 특혜와 편의 제공을 통해 복종을 교환한다.<sup>139)</sup> 주민들은 간부들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제공한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생존전략으로서 인맥과 연고를 활용하는 ‘블라트(blat)’의 일종이다. 구 소련에서 나타난 블라트는 ‘내가 너를 돕고, 네가 나를 돕는다’는 상호적 관계에 기초하여 친구, 친지, 지인들과의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결핍 경제 하에서 부족한 물자와 서비스를 확보하는 비금전적 거래를 의미하였다.<sup>140)</sup>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136) 김영희·김병욱,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북한관료들의 사경제활동 연구,” 『통일문제연구』, 2008년 하반기 통권 제50호(평화문제연구소, 2008), p. 228.

137) 김중욱, “북한 관료의 일상세계,” 『현대북한연구』, 11권 3호(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8), p. 76.

138) 여기서 ‘전유(專有, appropriation)’는 앙리 르페브르가 일상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진한 핵심 개념이다. 소유는 소유이되, 남의 것이나 공동의 것 혹은 원래 자기 것이었어도 빼앗겨 남의 것이 된 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육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시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것들을 스스로 장악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박정자, “용어해설,” H. Lefebvre,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Paris: Gallimard, 1968),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기파랑, 2005), pp. 36~39.

139) 홍민, “북한의 ‘관계자본’ 교환구조와 시장교환의 전유,” p. 55.

140) Alena Ledeneva, “Continuity and Change of Blat Practices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S. Lovell, Alena V. Ledeneva & A.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London: Macmillan

체제 전환 과정에서는 블라트는 기업활동을 위해 국가재산의 소유권에 접근하거나 시장정보와 관료적 의사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개인의 사적인 재산 증식을 위해 동원되었다. ‘자유 시장’이라는 환경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비금전적 상호관계에 금전이 개입되면서 부패로 변질된 것이다.<sup>141)</sup>

북한 사회에서도 블라트의 변형이라 볼 수 있는 뇌물과 연줄에 의한 흥정과 관료들의 부패 현상이 널리 나타나고 있다. 흥민에 의하면 북한의 뇌물과 연줄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직형’ 뇌물과 연줄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료들과 기업소 관리들이 연루된 부패이다. 둘째, 개인 또는 조직을 위한 ‘보호자’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보호대가용’ 뇌물과 연줄이다. 조직 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 특히 후원-수혜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셋째, ‘횡령’에 해당하는 개인 부패이다. 넷째, ‘생활형 뇌물’이다. 당, 행정기관에 속한 관료들이 행정처리, 인사이동, 직장배치 등 응당 해주어야 할 일을 뇌물을 받고 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sup>142)</sup> 이러한 타협과 흥정의 관계 속에서 간부들은 자신의 정치적, 행정적 지위에 내재된 사회적 자본, 즉 관료자본을 활용한다. 관료자본은 제도적 규제와 관료적 감시에 둘러싸인 주민들이 다양한 개인적 목적을 일상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관료들로부터 묵인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자본을 말한다. 비공식적으로는 생계 차원이든 개인적 이해 차원이든 일탈, 탈법, 비법적 행위로 간주되는 것들을 묵인받는 것이고, 공식적 영역에서는 정해진 관료적 절차를 보다 유리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sup>143)</sup>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과 이후 시장관계의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흥정과 부패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9년에 탈북한 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사례 7)이 들려주는 학교에서의 ‘공모’의 사례는 기업소의 생산목표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실적’의 평가와 보고를 둘러싸고 현장과 간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타협과 공모라는 점에서

Press Ltd., 2000), pp. 183~184.

141) Klavs Sedlenieks, "Cash in an Envelope: Corruption and Tax Avoidance as an Economic Strategy in Contemporary Riga," Karl-Olov Arnstberg & Thomas Borea, eds. *Everyday Economy in Russia, Poland and Latvia* (Stockholm: Södertorns hogskola, 2003), pp. 40~41.

142) 흥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43) 흥민, "북한의 '관계자본' 교환구조와 시장교환의 전유," p. 67.

조직형 뇌물 수수가 행해지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북한 학교에서는 우리의 장학평가에 해당하는 검열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출석 실태와 학력, 청년동맹과 소년단 관련 규율과 조직활동 실태 평가가 중앙과 시·도 교육성의 장학관인 시학과 도강습소 교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교육 수준을 높일 데 대한 지침이 계속 하달되면서 학력 검열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학력 검열은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기 위해 학교 측과 교육성 간부, 도강습소 교원들 간에 흥정과 공모가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시학이나 도강습소 교원들과 교섭을 하고, 교육간부들 입장에서도 자기 관할 구역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낮게 나오면 교육지도를 잘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학교는 살려줘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들면 사전에 시험 과목과 문제를 유출하고 시험 대상 학급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검열을 받는 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sup>144)</sup>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급의 자원을 받거나 심지어는 공부 잘 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임시적으로 학급을 따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검열에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한 간부들에게 “가방 하나씩”에 들어갈 몇십만원 상당의 물품이나 현금을 제공한다. 교육성 간부로부터 도강습소 교원, 각 학교의 관리자와 교사들이 학교조직의 보호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대한 허위보고에 공모하고, 그러한 공모의 결과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국가의 의도는 형식적으로는 관철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절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타협과 공모, 간부들의 부패는 경제난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면서 더욱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 관련 경제활동이 전 주민층으로 확산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활동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보호 대가용’ 뇌물·연줄과 ‘생활형 뇌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확대되고 상행위가 주민들의 생계 유지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우려하여 북한 당국에서는 최근 시장

144) 1990년대에는 사상교과, 자연과학, 외국어 각각 세 문제씩 출제를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열 문제씩 출제를 한다고 한다. 시험과목은 세 과목을 다 보기도 하고 특정 과목만 보기도 하고, 시험 대상도 반을 선택해서 보기도 한다.

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sup>145)</sup> 시장에 대한 통제는 시장 운영 시간 제한, 판매 품목 제한, 장사 연령 제한 등이 추가 된다. 하급 간부들이 지침에 위배되는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뇌물을 받고 불법적 활동을 묵인하는 형태의 교환이 이루어진다.<sup>146)</sup> 즉 시장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이윤 창출에 하층간부들이 기생하는 것이다. 시장 단속과 관련된 타협은 대부분은 술이나 음식, 담배를 받는 정도의 소소한 물질적 대가를 제공받고 금지되어 있는 물품 판매를 모른척하거나 단속을 미리 알려주거나 장사 연령 제한 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정도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간부들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동원해서 밀수 등의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큰 처벌이 가능한 주민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줌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상향계층이동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간부들이 점하고 있는 수령의 대리 지배의 영역이, 즉 간부들과 주민들 간의 타협, 흥정, 공모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법행위 중에서도 밀수, 도박, 마약 등 국가가 강력하게 금하고 있는 불법행위와 정보유출, 불법유통 등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법적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당기관, 보위기관, 안전기관이 ‘비사그루뵂’를 조직해 집중검열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혜산, 무산, 회령 등 국경연선지역에서는 중국에서 불법 CD 유입이 증가하면서 검열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연합지휘부가 본격적으로 검열을 개시하기 전에 각 지역의 시, 군당 선전부에서는 미리 불법녹화물 시청자 명단을 작성해두고,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고 명단에서 삭제해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sup>147)</sup> 이처럼 법과 실체가 분리되는 현실, 국가의 의도가 간부와 주민들

145) 2007년 강연 제강 “장사하지 말데 대하여”에서는 “시장 장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왜해시키고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앞당기는 근본 원천”이라고 규정하고, “시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빈부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민들이 “말은 직종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자”고 권고하고 있다. 이승용, “북한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평화재단 제 2차 전문가 포럼』 (평화재단, 2008), p. 4

146) 시장활동 단속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흥정에 관해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안전원을 자체가 장마당은 그래요. 동에 안전원, 시에서 나온 보안원, 돌이서 하는데, 장사꾼들하고 다 통해 있거든요. 오늘 누구네 어디가서 밥을 먹어야 돼, 이번에 우리차례예요, 이렇게 차례가 거의 다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담배도 주고 수고했다고 돈도 준단 말이에요, 단속 안하지요.”



사이의 타협과 공모의 공간에서 변형되는 현실에 관해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6)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2005, 2006년도, 그때는 일반통제가 세졌지. 정책화도 되고 많이 법 기관들이 많이 통제방법도 나오고 많이 세졌는데 현실은 안 세졌습니 다, 사람들 있는 데는 통제하는 일꾼들이 점점 더 깊이 물 젖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 쳐버리면 자기가 생존수단이 떨어지니까. 내가 이 사 람 압박해서 그 사람한테서 “야, 너 조심해라”하면 썩 뒤에서 “어째 그렇습니까”하고 밀어 넣어줬는데, 그거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을 쳐 버리면 내 밥벌이가 떨어지는데 이 사람을 함부로 치겠습니까?

검열을 할 때는 검열을 하는 간부도 검열을 받는 주민들도 “아주 착실하게 참가하지만” 주민들은 검열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합법이건 불법이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검열에 걸리면 “돈만 투자하면 무마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도 검열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첫째는 상부에서 보고할 검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 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일사상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소리”를 하거나, “적선(敵線)”, 즉 남한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흥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위험대상인 경우에도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뇌물의 액수가 크고 적발시에도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커버를 서 주기도” 한다.<sup>148)</sup> 간부에게 제공하는 뇌물의 액수가 커질수록 불법활동을 한 사람의 안전성과 활동의 폭도 커진다.

#### 나. 중간간부의 기생과 주민의 불만

북한에서 중간간부라고 불리는 관료들은 관료기구의 위계마다 국가로부

147) 『오늘의 북한소식』, 258호, 2008.12.23 (좋은벗들, 2008).

148) 중국에서 CD 등의 물건을 밀수하는 장사를 했던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12)은 국경을 드나들 때 국경경비대 에게 제공하는 뇌물이 작으면 2~3만원 상당의 담배 한 막대기, 많으면 수십만원 수준에 이르렀는데, 뇌물 을 많이 주면 경비대들이 “아주 책임성 있게 한다”고 증언한다.

터 부여된 위임통치의 권한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공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수령’과 당의 의도를 수정, 변형시키고, 지배와 인민의 중간에서 ‘개입’을 통해 조정과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지배자에게 ‘매수된 관료’이며,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약탈’을 자행하는 존재이며, 일종의 ‘작은 수령’들이다.<sup>149)</sup>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간부들은 직권을 이용한 월권과 횡령, 부패의 표상이다.<sup>150)</sup>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5%가 북한 관료들이 직무 수행에 있어 뇌물이나 접대를 제공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99%가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에 부패가 더욱 증가되었다고 응답했다.<sup>151)</sup>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간부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고난의 행군기와 ‘선군정치’의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강해졌다. 1990년대 후반에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2)은 이전 시기의 당원과 간부들에 대해 “가장 마음이 좋고, 선량하고, 도덕적인, 청렴한 사람”이며, 정치일꾼은 “김일성의 리론, 체제를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최근 간부들에 대해서는 “하나 온전한 게 없고”(사례 10), “돈 맛을 가장 잘 아는” “가당치 않은 존재들”(사례 7), “직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사례 11)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간부들 중에서도 주민들의 주된 불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각종 단속과 통제 등에 있어 주민들과 대면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하급간부들이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간부들 중에도 당간부(25.5%), 국가안전보위부 간부(20.6%)의 부패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간부 중에는 초급비서들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5.1%로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하급간부의 부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부패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부문의 간부일수록 그 직업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선호도가 높은 근무처는 당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149) 김중옥, “북한 관료의 일상세계,” pp. 77~83.

150) 김영하김병욱,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북한관료들의 사경제활동 연구,” p. 244.

151) 이 조사(채원호·손호중·김옥일,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1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12명을 대상으로 2004년에 실시한 것이다.

인민보안성 순이며, 보안기관에서도 감찰과나 예심과와 같이 범법자를 취급하는 기관, 당기관에서는 조직부, 간부부가 잘 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사례 1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민보안성이나 보위부 등이 그들의 권한을 이용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7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sup>152)</sup> 이 설문조사 결과는 보안부문 간부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정부패와 주민에 대한 기생행위가 그만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보안부문 간부 출신의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12)은 보안원은 돈을 버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에 물들기 가장 쉽다고 말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때 “봐줄테니 혼자 벌지 말고 같이하자고” 하여 공모자가 되어 보안조직의 보호 하에 불법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번 돈을 전체 보안 기관의 간부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거나 “조직에 기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간부들 중에도 ‘먹을 알’이 없는 지방의 행정하급간부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주민들에게 “기껏해야 술이나 몇 리터 얻어먹고”, “돼지 사료같은 거라든가 강냉이 이런 거 조금 달래다가 그거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정도”에 불과하다(사례 8). 그런 간부들은 “무슨 애로되는 거 문제를 가서 도와주려고 해도 가지고 있는게 없으니까 발언권이 없다고” 한다. 즉 주민들에게 뇌물수수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관료자본이 미약한 것이다.

간부들의 뇌물 수수가 광범위한 사회현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2009년에 청진에서는 수남시장 관리원들이 장세를 착복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신소를 주민들이 함경북도 도당에 제기하여 시장 관리원들에 대한 집중검열이 실시되었다. 2007년에는 수남시장 관리소 소장의 착복 행위가 발각되어 관리소 간부들이 대폭 교체되기도 하였다.<sup>153)</sup> 신의주에서는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에 걸린 주민들이 그루빠에 소속된 간부와 보위부, 보안서 간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자 평양에 신소하는 일도 발생했다.<sup>154)</sup> 지역의 당조직이나 단일

152) 이우영 외,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 p. 164.

153) 『오늘의 북한소식』, 265호, 2009.2.10 (좋은벗들, 2009).

154) 『오늘의 북한소식』, 263호, 2009.1.27 (좋은벗들, 2009).

기관에서만 검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들과 유착되어 허위보고를 하거나 뇌물을 받고 처벌을 면제, 경감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도별 교차검열이나 보위부, 안전부, 보위사령부, 당일꾼 등 여러 기관이 연합그루빠를 구성하여 검열을 실시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일탈과 불법행위에 간부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간부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해야 주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국가안전보위부의 핵심 간부들과 금성정치대학의 우수 학생을 선발해 국경연선지역에 중앙당 검열그루빠를 파견하고 있다. 2009년 여름에는 중앙당 검열 결과 신의주시에서만 60여명의 간부들이 직무를 이용해 밀수에 가담하거나 뇌물을 받고 밀수를 눈감아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구류되었다고 한다.<sup>155)</sup> 또한 당에서는 간부강연제강이나 지시문을 통해 간부들의 사상해이 실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열정이 없이 일하는 현상, 국가 재산 유용과 횡령, 주민들에 대한 불법 세외부담, 국가 법규에 어긋난 조직본위의 경영관리 등이 간부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56)</sup>

간부들의 비리와 뇌물, 탈법은 모든 층의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반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주로 시장통제나 일탈행위 통제와 관련하여 대면하게 되는 하급 간부들의 행위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대한 불만은 최고지도자와 당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하급간부나 군당책임비서나 직장 책임자 같은 중간간부들에게 전가된다. 북한의 강력한 사회통제정책으로 인해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공공장소에서 국가시책이나 사회실태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경제난을 경유하면서 주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친지, 친구들 간이나 시장이나 직장 등에서 사회적 불만을 공공연하게 토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불만의 내용은 생계의 어려움에 대한 막연한 호소인 경우도 있고, 간부층의 뇌물수수라든지 시장 통제나 사회 동원 등 사회정책에 대한 비판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의 특징은 생계의 호소이든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이든 지간에 불평과 비난은 고위 관료나 최고지도자가 아닌 중간간부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간부들에 대한 불평과 비난이지만 ‘작은

155) 『오늘의 북한소식』, 292호, 2009.8.18 (좋은벗들, 2009).

156) 『오늘의 북한소식』, 256호, 2008.12.9 (좋은벗들, 2008).

수령'인 간부에 대한 비판은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비판에 다름아니다. “중간다리들이 더 나쁘다”는 북한 주민들의 말은 최고지도자와 당이, 사회체제와 국가정책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이나 국가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만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거나 장사하는 물건을 빼앗거나 뇌물을 받는 등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행위를 직접 행하는 사람들이 중간간부들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들에게 기생하는 행위가 중간간부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그들이 대항하고 있는 통치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간부라면 누구나 다 그럴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한 불만은 당이나 고위엘리트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불만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고위엘리트층은 문제의 책임을 중간간부층에게 전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체제와 지도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 실패의 최종책임이 최고책임자에게 있고 주민 불만의 표적도 이에 집중되는데, 북한사회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무오류와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론상 최고지도자가 면할 수 있고 이 체계에서 수십년간 살아온 일반주민들도 정책실패에 대한 불만을 최고지도자가 아닌 중간간부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sup>157)</sup> 간부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전가’가 간부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의 전가’와 결합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고지도자와 통치엘리트들은 부패나 횡령으로 문제가 되는 간부를 시범적으로 숙청하는 방식을 통하여 여론을 관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적 처벌로 간부들의 부패와 일반주민에 대한 기생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황해북도 사리원 도인민위원회의 한 간부는 중앙당의 간부 사상검토와 단속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정책도 나오지만, 말만 하고 실지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부들이 여러 해 동안 그런

157)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04), p. 102.

방식으로 살아왔고, 이것을 바꾸는 일은 곧바로 정책 집행자들이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입으로는 정책을 외치지만, 뒤에서 여전히 뒷받겨라나 안면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sup>158)</sup>

북한 당국도 부패 간부들의 단속을 통해 부패와 일반주민에 대한 기생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간부들의 부패, 뇌물수수, 비법적 행위를 통한 축재, 행정 절차 처리상의 오류 등을 처벌함으로써 구조적이고 제도적 차원의 모순을 은폐하고 정책 실패를 부패한 일개인 간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간부들을 해직하거나 심한 경우 처형하는 극적인 연출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사회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간부들의 뇌물이나 비법적 행위를 간헐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일부 중간간부들이 경제적 상류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을 차단하고<sup>159)</sup>, 간부들이 ‘시범케이스’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상부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정적 보상’ 기제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 3. 일반 주민간 관계: 사적 관계망의 팽창

#### 가. 개인주의 확산, 가족의 복귀, 사적 영역의 팽창

일반 주민들간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개인주의의 확산과, 생산·재생산·소비의 단위로써 가족의 복귀, 이에 따른 사적 영역의 팽창이다. 이는 곧 북한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의 주요 행위 주체로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1990년대 이전 시기에도 일반 주민들이 사회를 유지, 변화시켜나가는 사회적 행위주체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난 이전 시기까지는 공적 영역에서 공식 담론이나 통치엘리트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는 주민들의 사회적 행위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국가적 통제를 벗어나 주민들만의 개인적 삶을 추구하는 내밀한 사적 영역은 넓지 않았을 뿐만

158) 『오늘의 북한소식』, 293호, 2009.8.25 (좋은벗들, 2009).

159) 최봉대에 따르면 국가는 ‘보호세’의 수탈, 개인재산의 ‘합법적 몰수’, 준조세에 의한 전 사회적 수탈이라는 세 가지 방식에 의해 비공식경제에 악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비공식경제 내에서 사적 소유의 물질 기반이 형성될 여지를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윤대규 역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p. 170.

아니라 상당부분 공적 영역에 통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공적 보장에 의해 대체되었던 일련의 사적 처분기능들이 가족의 영역으로 반환됨으로써 가족은 소득과 여가의 소비자로 재탄생한다. 즉 국가적 공급체제와 사회보장 제도가 유지되었던 시기에 공적 영역과 상당부분 중첩되었던 소비와 여가활동이 개별 가족의 관할권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적 행위 주체로서 개인과 가족의 의미가 확대되었다.

자신과 가족의 세계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거나 배려할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유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결속하였던 심리적, 도덕적인 유대가 해체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었다. 집단주의의 쇠퇴와 개인주의의 확산에 대해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10)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집단주의 정신 없어졌지. 집단주의 정신 없어지지 않으면, 그게 있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서로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노력하는 편인데, 집단 언제 다 생각할 새 있어요. 이상사회는 그런 거 보고 죽자해도 없어.”

집단주의적 유대는 2000년대 이후에도 복구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가족이 시장과 연계된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로 기능하게 되면서 집단주의적 의식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유대가 사적 관계망에 기초한 배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유대로 복귀되었다. 이것은 결국 사적인 소유의식의 강화와 공적 무관심의 증대를 낳을 수밖에 없고, 점차 사회적 개인화 경향과 사적인 가족주의의 강화를 가져오게 된다.<sup>160)</sup> 주민들의 생활에서 개인주의는 “옆집 일은 생각 안하고, 오직 내 일, 내 삶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사례 13). 특히 농촌에 비해 도시 지역의 주민들 속에서는 타인의 삶에 무관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오히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편안한 삶의 방식으로 여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심성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행위주체로서 개인과 가족의 복귀는 특히 소비와 여가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분화되기 시작한 개인의 사적 욕망이 의식주의 차별화된 소비와 여가 생활의 향유에서 표현의 출구를

160)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p. 108.

찾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노동자로 생활하다 1990년대 말에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6)의 다음과 같은 구술증언은 1990년대 이전 시기에 공적 담론에 묻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북한 주민들의 사적 욕망이 고난의 행군 이후 어떻게 분화되어 나타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구술자: 노동자들은 직장, 기숙사,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들어 배운 것은 애국심이에요. 그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들이 바로 회의, 사상교양이죠. 교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사상사업이라는 게 독재가 아니고 그런 선전을 듣는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개조되고 훌륭해질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 사회가 유지되었죠. 그래서 조선은 당을 가장 중시했죠. 그래서 당이 권위가 있는 것이예요.

연구자: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했던 것인가요?

구술자: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외부를 못 봤잖아요. 좀 더 쉬면서 하려는 욕망이야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욕망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신적, 물질적 여유가 이 사람들에게 없죠. 외부와 연결된 고리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제껴덕 변질되겠죠.

위의 증언이 시사하고 있듯이, 1990년대 이전 시기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을 지배했던 것이 ‘애국심’과 ‘당의 권위’로 대표된다면, 이후 시기에는 개인의 ‘욕망’이 그 틈을 비집고 나오게 되었으며, 그러한 욕망의 현실화가 가능했던 것은 자생적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물질적 여유와 국가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따른 정신적 여유 때문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제난, 자생적 시장화, 외부세계와의 접촉면 확대와 정보 소통이라는 사회적 변화는 한편으로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와 주민의 심리적 분리를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 실현의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내면에 억압되어왔던 사적 욕망을 일깨우고 표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다.<sup>161)</sup> 이는 개개인의 욕망의 증가뿐만 아니

161)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의 유형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최완규·노귀남, “북한주민의 사적 욕망,”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8).



라 이러한 욕망이 공통적으로 표출되고 공유되고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사적인 영역(private sphere)의 팽창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장마당의 활성화로 표상되는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가 분산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에 의해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유지해왔던 공적 영역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 균열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 재조정 압력을 가중시켰고, 사적 영역의 질적 변화와 구성부들을 재구성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sup>162)</sup>

주민들의 욕망이 표출되고 교환되는 대표적인 공간은 시장이다. 시장의 확대는 돈만 있으면 기존에는 얻기 어려웠던 다양한 상품을 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비욕구를 창출하고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장의 활성화, 상거래 공간의 확대로 인해 일부 계층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높아졌고, 이는 소비 욕구의 분출과 소비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소비의 욕구는 먹는 것, 입는 것, 주거 공간을 꾸미는 것 등으로 표현되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상당히 다른 소비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상층가구의 경우에는 고급 소비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새로이 형성되는 경제적 불평등체계 내에서 하층에 대하여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자기차별화 전략의 일환이다.<sup>163)</sup> 계획경제와 배급제 하에서 물자의 제한과 결핍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히 제한된 계층으로 한정시켰다. 시장의 팽창은 집단주의적 방식의 소비생활에서 억제되었던 차별화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형성하였고, 자신의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물질적 상징의 소유를 통해 확인하고 과시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욕망이 차별화된 소비행태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소비생활의 팽창과 소비를 통한 사회적 지위의 과시 행위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기 또는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북한에서도 시장화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계층에 따라 의식주의 소비

162) 함택영·구갑우, “북한의 공과 사: 이론화를 위한 비교,”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8), p. 123.

163) 최봉대, “1990북한사회변화: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한국방송』 (<http://office.kbs.co.kr/tongil2>); 최봉대, 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pp. 213~215.

양상이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르디외(P. Bourdieu)에 따르면 의식주 취향, 문화활동과 스포츠, 소비품 선호 취향 등은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문화적 기준이 되는데, 북한에서도 최근 들어 주민들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소비 패턴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의식주 소비 실태를 보면, 상층의 경우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면서, 고기나 과일 등의 부식물을 즐기고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과 외식을 즐긴다. 반면 하층은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최대목적으로, 다양한 부식물을 즐기기는 어렵다. 때문에 장바구니에 어떤 물품이 들어가 있는가는 주민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또한 의상과 신발은 경제 수준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다. 상층의 의생활의 초점은 ‘멋’이기 때문에 최신 유행의 디자인과 좋은 옷감의 옷을 구입한다. 반면 중산층의 의복선택의 기준은 저렴한 가격과 편안함이고,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년에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입는 경우도 많다. 주택의 규모와 형태, 집안 꾸밈새 또한 집주인의 경제력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국가에 의한 주택 배정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고, 시장을 중심으로 부유층 거주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sup>164)</sup>

헝가리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적 영역의 팽창과 소비주의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독특한 역사적 궤적을 그리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헝가리 정부는 1956년 혁명 이후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주력하면서 개인주의화와 소비주의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동유럽에서 크리스마스에 바나나와 오렌지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헝가리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헝가리의 소비수준은 높았다. 헝가리 국민들이 개인적 영역과 사업장에서의 자치권 인정과 정치적 무관심을 교환한 결과 정치적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정권 유지가 가능했다. 이는 헝가리에서 체제전환 과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졌던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체제전환 이후에도 경제정책의 초점은

164) 최근 북한의 주택 상황과 관련하여 ‘뒤그루’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새로 지은 현대식 집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 살고, 그들이 살던 집은 그의 친척들이 살고, 친척들이 살던 낡은 집에는 새 집을 지으면서 철거된 세대들이 드는데, 그 집을 ‘뒤그루’라고 한다는 것이다. 최진이 편, 『임진강』 제5호 (임진강출판사, 2009), p. 145.

경제개발이 아니라 주민생활 향상에 두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복지예산 축소 등의 시장지향적 개혁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개인주의 확산과 사적 영역의 팽창이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의식을 무더지게 함으로써 체제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은 부의 증가에 따른 소비의 팽창이나 시장의 확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주민들은 시장을 통하여 또는 소비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와 접촉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와 연결된다.<sup>165)</sup> 세계 각지에서 북·중 접경지역을 통과해서 각 지방의 시장을 거쳐 북한 주민들의 안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각종 상품들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단순한 소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간 접촉이 차단되었던 외부 세계의 아이콘이자 외부와의 접촉 통로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 영화, 한국 드라마 등 외국의 문화상품이다.

북한 주민들의 사적 영역 속에서 개인적 여가 활동 시간에 소비되는 이러한 문화적 상품들은 역설적으로 그간 단절되어 있던 외부 세계와 북한 주민들을 잇는 중요한 매개고리가 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외국 영상물 시청은 여가 생활에서 사적 영역의 확대 추세와 맞물리면서 여가시간 활용의 새로운 양상으로 등장했다.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디오, CD 등의 문화상품은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의식 약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영상물은 아파트 등 공동 주거공간, 학교, 직장 등의 사적, 공적 장소를 통해 교환된다. 믿을만한 직장 동료들끼리 작업을 마친 후에 모여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학교, 아파트 등의 공간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상물이나 관련 정보를 친구, 이웃과 교환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들은 어느 집에 새로운 CD가 있다는 걸 알면 집으로 찾아와서 보자고 하고, 여러 부로 나뉘어진 드라마를 서로 나누어 구입해서 바꿔보기도 하고, 서로 다른 녹화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바꿔보도록 중간에서 중개하기도 한다.<sup>166)</sup>

북한 당국에서는 외국 영화나 남한 영상물이 주민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165) 김광역, “중국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패러다임 시론: 문화접점론과 국가-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권 3호 (서울대학교국제지역원, 2002), p. 41.

166)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 286.

을 우려하여 잦은 검열을 하고 있지만, 검열시에는 대부분 인민반장이 이를 미리 알려주어 단속에 대처하도록 하고, 적발시에도 어느 어느 정도는 뇌물을 통해 무마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 북한의 영상물과는 전혀 다른 재미를 제공하는 외국이나 남한의 영상물 시청은 최근 북한 주민들이 시간적 여유만 생기면 단속의 위협을 무릅쓰고 밤을 새워가면서 즐기는 중요한 여가 활동이 되었다.

이러한 영상물은 그동안 북한의 사적 공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음란비디오이다. 중국 등지로부터 들어온 음란물 CD는 그 자리에서 보는데 5천원, 하룻밤 빌려보는데 1만원, 구입하는데 3-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 음란물 CD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지하수처럼 삼투하면서” 성생활의 쾌감을 보급하는 일종의 성교육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sup>167)</sup>

#### 나. 시장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의 진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의 개인과 가족의 회복과 사적 영역의 팽창은 개인 주체와 그들이 점유하는 사적 공간이 주로 시장관계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연결의 점과 선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 티리(C. Tilly)에 의하면 개인들의 집합은 범주(category)와 관계망(network)으로 구성된다. 범주로서 정의된 집단은 범주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범주를 공유한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이 중요한 사회적 성격을 공유한 집단이라는 것을 상호 인식하게 되고, 공통의 이해를 깨닫게 된다. 또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과 집합적 이해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게 된다.<sup>168)</sup>

북한 사회의 변화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인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전 시기에 북한에서는 식량과 주택의 배급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을

167) 손혜민, “박기원 그 순천사람,” 『임진강』 제5호 (임진강출판사, 2009), pp. 58~63.

168)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8); 김용학, 『사회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2007), p. 35에서 재인용.

직장과 지역사회내의 공적 관계망에 긴박시켰다. 인민반 조직이나 직맹, 여맹, 청년동맹 등 각종 근로단체, 당 조직 등 강력한 관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해왔다. 이러한 공적 관계망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공민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가와 수령에 대한 충성의 심성을 공유하였다. 경제난 이후 주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독립은 또한 주민들을 공적 관계망의 속박으로부터도 해방시켰다.<sup>169)</sup>

축소되고 이완된 공적 관계망을 대체한 것은 사적 관계망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이었다. 현재 북한에서 발전하고 있는 사적 관계망은 시장의 상거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의 관계망이다. 비합법적 거래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연줄연줄 걸려” 처벌이 불가피하며, 이를 무마해줄 수 있는 관계망을 동원하여 “뒷사업”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주로 친구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간의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강한 연대감을 동반하는 관계망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한 연고 관계라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계이지만 경제적 이득이라는 근대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sup>170)</sup>

가내 수공업품 생산자, 원료 제공자, 도소매상인, 외국과의 무역업자, 시장과 거래하는 공장과 기업소의 담당자 등 시장을 중심으로 상행위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주민들이 이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노드들이라면, 이들간의 거래관계는 연결선이 되고, 시장은 점과 선이 만나 형성하는 새로운 관계의 면을 구성하는 장이 된다. 시장이 설치되어 있는 각 지역 사이를 ‘달리기 선수’와 ‘되거리 장사’로 불리는 중간상인들이 오고가면서 북한시장 경제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선을 따라 상품과 함께 각 지역의 소식과 정보가 이동하고, 그것은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관계망의 면, 즉 시장을 통해 끊임없이 공유되고 유통되고 갱신된다.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12)은 지역상인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전달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

169) 여기서 사적 관계망은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그 구성원들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비인격적이고 이혜타산적인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맺어가는 사회적 관계를 가리킨다. 공적 관계망은 국가사회 내에서 형성된 관료제적 조직체계가 시민사회로 침투해서 위로부터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한다.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5), pp. 106~107, p. 126.

170) 이우영, “북한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1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8), p. 137.

다고 말한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농토산물의 가격이 해관에서부터 해안지역과 산골마을에 전달되는데 하루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연결망은 주로 사람을 통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가격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동향과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유언비어 등도 같이 전달된다.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시장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무수한 점과 선들이 만나고 진화한다. 각 지역의 주요 시장에는 전국 각지의 상인들을 통해 흘러들어온 각종 정보가 모이고, 이 정보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운반된다. 시장은 사적 담론이 형성되는 공간<sup>171)</sup>이자, 공론화된 사적 담론이 사적 관계망의 공간적 확장<sup>172)</sup>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시장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자기 공간의 형성을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주민들은 일상에서는 접할 수 없는 정보의 유통에 참여하게 되고 세속적인 권력과 규칙의 강제성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시도한다. 장터와 장터 바깥의 공간은 공권에 의한 질서와 규범을 두고 판이한 경계선으로 나뉘어진다. 즉, 장터 안에서는 일상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권력과 법규와 규범문화가 무시된다. 일상을 지배하던 규범과 비일상적 세계의 엄격한 경계선은 모호해진다. 이러한 시장의 의미와 기능 때문에 국가는 시장의 분위기에 주목을 하며 시장에서 교환과 거래가 되는 물자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관여하려 든다. 곧 시장은 국가와 사회가 만나는 점점이며 가장 은밀하고도 심각한 긴장과 경쟁을 벌이는 공간이다.<sup>173)</sup>

현재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즉 체제 변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비공식적 사회 조직의 존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민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도 부재하고,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sup>17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대안적 담론의 창출이나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발원지는 시장을 중심으로

171) 위의 글, p. 135.

172)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270.

173) 김광연, “중국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패러다임 시론: 문화접점론과 국가-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pp. 39~40.

174)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 가능한가?” 『현대북한연구』, 제4권 1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1), p. 233, p. 243.

형성, 발전되고 있는 사적 관계망일 것이다.

## 4. 행위의 규칙과 창발성의 영역

### 가. 행위의 규칙

(1)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탈행위를 통한 사적 이익 극대화  
북한 사회에서 일반 주민과 간부 등 사회적 행위자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 적용하는 행위의 규칙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탈행위를 통해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개인적, 집단적 수준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일탈행위는 경제난 이후 일종의 생존전략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인식, 공유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의 규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일탈행위가 행위의 규칙으로 등장한 것은 배급이 중지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국가가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제난 속에서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장사를 통한 영리 추구, 국가 재산의 절취와 유용, 지식, 기술, 노동의 사적 판매, 개인경작, 편의 제공의 대가로서의 뇌물 수수 등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주민들 스스로 “자력갱생”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사회일탈형 생존 방식은 고난의 행군기 이후에 자생적 시장화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더욱 뚜렷한 사회적 경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행위와 관련된 거래관계를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합법적인 무역 거래는 항상적으로 수출입이 허가된 품목 이외에 금속, 골동품, 자동차, 마약 등과 같은 불법적인 품목의 거래를 수반하는데, 이는 이러한 불법 거래가 더 큰 이윤을 보장한다. 도소매상인들의 경우에도 상인들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북한 당국이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간 이동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이나 사업 허가권을 받기 위해 간부들에게 크고 작은 뇌물을 제공하고 장사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받는다.<sup>175)</sup> 북한 주민들은 합법적인 틀 속에서의 상행

위만으로는 결코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한 규모를 넘어서서 일정 규모의 자산을 축적할 수 없다. 당국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장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전적 뇌물을 써서 처벌을 면제받는다. 뇌물을 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감수할 수 있는 위협의 수준, 자산 축적의 가능성과 비례한다. 경제적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불법행위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4)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비행이 없고는 잘 살지 못한다”고 말한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합법행위와 “비법”이라고 부르는 불법행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은 이러한 일탈행동을 보편화,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비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법에는 걸리는 것이 있고, 안 걸리는 것이 있고요 … 바치면 안 걸리는 것이고, 안 바치면 걸리는 것이고요 … 장사하는 것도 실재는 똑같은 일인데, 법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산물도 국가에서 대주는 물건이 아닌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장사를, 천을 사다가 하는 건데 국가에다가 몇 프로라도 바치지 않으면 법에 걸리고 바치면 괜찮고 그런 거지요 다 비법은 같은 비법 행위인데, 국가에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주면 괜찮은 거고 그래요.<sup>176)</sup>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더라도 단속망을 피하면 합법이고 단속에 걸리면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법을 위반했는가가 아니라 문제행위가 적발되었는지가 불법성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돈이 있고 권력 있는” 것이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단속망을 피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불법적 뇌물공여이거나 권력층과의 관계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행위를 통해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는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먹여살리고 결과적으로

175)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p. 221~224.

176) 50대 남성, 공장 노동자, 함북 무산 출신, 2007년 탈북, 위의 책, pp. 112~113에서 재인용



국가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행위라는 논리를 통해 정당화된다. 7.1조치로 공장과 기업소의 독립채산제와 기업소 이윤에 대한 자체 처분권이 강화된 이후 ‘무역회사 사장’ 또는 소위 ‘개인기업’의 지배인으로 성공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지역마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신흥부자의 성공사례는 시장경제활동과 관련된 일탈행위를 통한 사적 이익 창출이 최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움직이는 주요한 행위의 규칙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내부인들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소식지의 한 통신원은 “현 시대 기업가의 주요한 조건은 나라가 비법이라 정하는 바로 거기에 리운 날 사업이 있다는 방향 감각을 소유하고 특하고 짧은 삶의 방식을 즐겨야 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개인업자”들은 100%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북한지역에서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은 군사복무, 육체적, 심리적 극한훈련의 체험, 외국생활 경험, 교화생활과 같은 법과의 충돌 경험으로 인해 “국가 통제품에도 손을 내밀고 주무르며, 보안원, 군인 등으로 신분을 위조하고 렬차를 타는 등 상식 이하의 초활동”을 대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불법적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큰 이익의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sup>177)</sup> 이들 성공한 기업가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들과 성과물을 공유하고, 주민들에 대한 배급 지급과 선물 보장 등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시장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관련 간부에게, 당과 행정기구와 국가에 헌납함으로써 국가가 허용하는 시장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추구 활동의 합법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뇌물공여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시장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차원의 일탈행위와 위법행위를 무마하는 것에는 항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안정성이 내재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가공업, 무역, 서비스업, 건설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순천 지역 경제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다가 2007년 간첩죄로 총살당한 순천 돌가공공장 지배인 박기원의 사례<sup>178)</sup>는 현재 북한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사회적 일탈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사이의 간격이

177) 손혜민, “박기원 그 순천사람,” p. 51.

178) 위의 글, pp. 45~73.

그다지 크지 않으며 상황의존적임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생존을 위한 일탈행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관계망과 정치적 상황, 사회적 통제의 정도 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타산하고 자신의 행동을 그에 맞게 조율해나간다.

## (2) 일상형의 소극적 저항 형태로 불만 표출

북한의 사회적 행위자의 행위 규칙의 또 한 가지는 일상형의 소극적 저항의 형태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저항은 의도적인 정치적 반체제 행위와 반란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적·경제적 불복종, 생존전략으로서 인맥이나 연고를 활용하는 부정행위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sup>179)</sup> 특히 정치적 억압기구가 발달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저항은 주로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불복종하는 행위, 일하면서 꾸물거리기, 고의로 불성실하기, 도주, 무지한 체 하기, 시치미 떼기, 줌도둑질하기 등의 소극적인 저항의 형태로 나타난다.<sup>180)</sup> 이는 명백하고 적극적인 불복 선언이라기보다는 교묘하고 은폐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소극적인 ‘동의 유보’이며, 전략적으로 계획된 의식적인 집단행동만이 아니라 의도되거나 의식되지 않은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행위자들의 저항은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극적인 저항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과 연계된 상행위가 확산되고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신소’와 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통로를 통한 불만 제기, 꾸밈과 넋두리 형태의 우회적 비난, 특히 상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항의와 같은 형태의 저항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사회적으로 허용된 제도화된 불만 표출 방식은 신소이다. 북한의 신소청원제도는 북한 내부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행정처분이나 활동에 대한 북한 국민의 이의제도로 고안된 것이다.<sup>181)</sup> 북한은 1948년 제정헌법에서부터

179) S. Fitzpatrick, *Everyday Stal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80) 서재진·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181) 양영희, “북한의 신소청원제도,” 『통일사법정책연구(2)』 (서울: 법원행정처, 2008), p. 187.

신소청원제도를 규정하였고, 1998년에는 ‘신소청원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의 신소청원법 제2조는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일군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신소의 내용은 간부들의 부정부패나 비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sup>182)</sup>

간부들과 돈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좋아지고, 대중들의 생활은 점점 못해진다. 중앙당에서는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강원도 문천시, 40대 남성)

사민(일반 주민)들의 비법행위는 거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처벌하지만, 간부들의 비법 행위에 대해선 제때 타격하지 못하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백성들이 직장 출근을 제대로 못하면, 담당 보위부원들이 오라 가라 하면서 문초하고, 심지어 단련대 대원 신세가 되고 있으나, 간부들의 비법 행위는 정당한 것처럼 인정되고 있다. 법을 집행할 때는 누구에게도 공정해야 한다.(강원도 원산시, 50대 남성)

우리 시와 다른 도내 도시에서 요직을 차지한 많은 간부들은 호화 주택 꾸리기 경쟁을 하며, 틀어진 권력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열중하고 있다. 풍족하고 사치한 생활을 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생활 질고에는 무관심하다.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강원도 원산시, 4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신소를 통해 제기된 불만이 반영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은 듯하다. 불만의 대상이 간부를 비롯하여 권력을

182) 『오늘의 북한소식』, 293호, 2009.8.25 (좋은벗들, 2009).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신소의 대상이 된 간부들에게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거나 간부들 간의 정치적 파워게임과 결부되어 신소에서 제기된 내용이 크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간부들의 부정부패나 비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간부들에 대한 전국적인 검열총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상반기에 실시된 비사검열 결과 80여 명의 간부들이 구류돼 예심을 받고, 이중 일부는 직위 해임과 철직, 재산몰수, 교화, 추방 등의 형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신소와 같은 청원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신소 내용에 대한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고통을 털어놓도록 하는 사회적 환기구 역할을 하고, 일반 주민들의 관심, 갈등, 고통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알려주며, 진정한 관심의 일치를 찾아가는 정치적 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sup>183)</sup> 특히 이는 사회적 불만과 저항을 제도화된 형태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일부를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행위자 개개인에게 일종의 “숨구멍을 열어주는”(사례 9) 동시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저항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북한의 사회적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보편적인 저항의 형식은 꾸념과 신세한탄의 형태로 개인적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이러한 개인적 불만조차도 정치적 비판으로 간주되어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쉽사리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였지만, 경제난 이후에는 생활이 어렵다보니 “살기 힘들다는 소리는 다 한다”고 한다.(사례 8) “세월이 그런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는 “많이 눈을 감아준다”<sup>184)</sup> 그런데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도 “이러다간 우리 조선 사람들 다 굶어죽겠다”, “이 놈의 고생 언제면 끝이 나겠는지, 망하면 빨리 망하던지”, “중국은 개도 이밥을 먹는다는데, 우리는 사람이 푸대죽도 못 먹으니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 공화국은 날이 갈수록 더 곤란해진다”, “딸네 지역은 다 죽게 생겼더라” 등의 말들은 국가와 당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sup>185)</sup>

183) Mary Fulbrook, *The People's State*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p. 274.

184) 40대 여성, 협동농장원, 함북 회령시 출신, 2005년 탈북.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의 표현은 우회적이고 풍자적, 반어적 형태를 띤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 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세상이 뒤집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는 말이지만, 주위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를 문제삼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인민군대가 단번에 승리할텐데”와 같은 말을 덧붙여 그 의미를 전도시켜버리는 것이다.(사례 8, 사례 6) 대화하는 상대방과 “심금이 통할 때는” “그 놈이 원수요.”라고 하면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공유하다가, 누가 옆에서 들으면 “미국 놈이 원수지, 죽일 것이 미국이요.” 이렇게 덧붙여 처벌을 피해간다고 한다.(사례 6) 또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야, 우리 정일동지 최고야. 장마당 쪽 열고 돈 벌잖아. 이게 얼마나 좋나.”라고 말하지만, 이는 말하는 사람이나 주위에서 이에 호응하는 사람이나 모두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사례 7) 즉, 표면적으로는 개인적 불평불만이고 신세한탄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와 최고지도자,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과 도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불평불만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저항의 형태는 시장 단속을 비롯한 정책 집행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항의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안전원들이 골목장마당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집행하기 위해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단속할 때 안전원에게 “안전원 동지요, 돈 달라요 (돈 주면) 매일 우리 (시장에) 안 나가요. 개고생하면서 살겠어요?”(사례 7)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 비사현상이면, 대체 어떤 것이 사회주의란 말이야?”<sup>185)</sup> 라는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다. 안전원이 벌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면 “내가 번 다음에 줄게요.”라고 대응한다. 안전원이 단속 과정에서 노인을 때리면 “너는 이 새끼, 어미도 없냐? 너는 무슨 밥 처먹기에 노인을 팔시하고, 여기 와서 우리 장사질 하는 거 이렇게 하나?” 하고 항의를 한다.(사례 6) 이러한 항의에 사용되는 어휘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급간부들에게 하는 “너는 무슨 밥 처먹기에”라는 말은 “너는 김정일이네서 따로 배급을 받아먹지 않느냐?”라는 말로, 국가가 배급을 주지 않는데 대한 항의 표시이자 생계 유지를 위해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자신들

185) 『오늘의 북한소식』, 282호, 2009.6.9 (좋은벗들, 2009).

186) 『오늘의 북한소식』, 269호, 2009.3.10 (좋은벗들, 2009).

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의의 언술들은 표면적으로 국가 시책에 대한 노골적 반발이나 정권,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 수준으로 행해지지는 못한다. “국가에서 이따위도 못하고 말이야, 법적으로 뭐이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국가 시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크게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국가와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우회적인 언술을 통해 국가를 대리하는 하급간부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한다.

개인적인 항의는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이 가세하면서 집단적인 항의로 발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안전원이 시장판매금지품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쌓아 놓은 것을 발로 차서 무너지면 “장꾼들이 일어나서 번진다.” 상인들이 몰려들어 “말로 그러지 왜 물건들을 발로 차고 그러냐”고 집단적으로 항의하면 안전원이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사례 7) 이와 같은 집단적인 항의는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때로는 시장 축소와 같은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사례는 주로 “좋은벗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08년 3월에는 청진에서 여성 상인들이 각 구역의 시장관리소에 몰려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진시 보안서와 각 구역 보안원들이 항의 군중을 설득하여 해산시켰다고 한다.<sup>187)</sup>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의 일반적 사회행위자들이 보여주는 소극적 저항, 일상형의 저항은 저항행위인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체제순응 행위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주로 체제 유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행위자들, 즉 권력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한편으로는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와 강압적 사회 통제의 구조 속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숨구멍을 열어놓음으로써 체제 변화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성격을 변형시키고, 경우에 따라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요소를 끌어안고 가는

187) 『오늘의 북한소식』, 115호, 2008, 3, 12 (좋은벗들, 2008).

것이다. 북한 사회의 행위자들이 보여주는 저항의 이중성으로 인해 체제의 안정과 붕괴 사이의 간격은 그리 크지 않다. 그것이 체제의 유지보다는 체제의 변화로 이어지는 시점은 “사회 안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일상성을 지속시키지 못할 때”<sup>188)</sup>가 될 것이다.

### (3) 체제 내 적응이 불가능할 경우의 대안으로서의 탈북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 체제 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은 그 사회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사회적 행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행위의 규칙이다. 그런데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외국으로의 이주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를 한다는 것은 곧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에서 탈북이 급증한 계기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이다. 그 당시 북한 내에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방도를 찾지 못했던 많은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로 나와 살아갈 방도를 모색했고, 그 중 일부가 남한 땅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국가의 배급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각자가 생존의 방도를 찾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한 탈북은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다른 이유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탈북의 동기와 의미가 다양화되었다.

2000년대 이전의 탈북이 식량난을 피해 양식을 구하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2000년 이후 탈북은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의 모색, 체제에 대한 불만, 차별에 대한 기피 등 삶의 질적 차원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탈북의 동기가 작용한다.<sup>189)</sup> 현재 탈북 동기 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1990년대 중반과 마찬가지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탈북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탈북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13)은 탈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북한보다

188)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p. 91.

189) 최대석·조영주,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북한학보』, 33집 2호 (북한학회, 2008), pp. 93~96.

더 동경하는 사회에 대해 알아서 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극빈층이다. 최근까지도 국가적 배급체계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극빈계층의 생활고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배급이나 임금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장사밑천이나 수단도 없는 극빈층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경우는 고리대로 빚을 지고 식량을 꾸어서 먹는 사람들이다. 보통 고리대는 이자가 월 30~40%에 달하며, 식량으로 하면 봄에 빌린 식량의 3배를 가을에 갚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리대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살던 집도 팔고 꽃제비가 되거나 탈북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후자의 유형은 북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후대 교육이나 보다 나은 삶의 모색 등의 정치사회적 동기, 구직이나 경제적 부의 축적 등 경제적 동기에서 탈북을 하는 경우이다. 남한을 비롯한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북한 사회와 외부 세계를 비교하게 되고,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사례 3)의 증언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그렇게 넘어온 것들(남한 드라마) 많이 봤어요, 사실. 그걸 보고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있잖아요, 세상에 저렇게 자유스럽고 그리고 모든 게. … 북한에 있을 때도 저한테, 가정에서 내가 얘기를 해요, 너 참 답답하다고 정부도 그렇고, 정말 있잖아 너무, 나란 존재가 너무 없으니까 답답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대로도 못하고, 막 말하고 싶어도 정말 참고 못하고 그리고 부모자식간이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입조심하라고, 너무 조마조마 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디 잡혀갈까봐 무섭대요. 나가서는 안 그런데 부모님 앞이니까 얘기를 한다고. 나 좀 어디 있잖아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일부 지식인 계층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에 비추어 북한 사회와 자신, 가족의 발전 전망을 평가해보고 보다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사례 5)의 증언이 그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사실 제가 탈북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교육 조건, 이 나라는 안 되겠구나. … 우리 같으면 자료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때 보니까 안되겠더라구요 … 우리 같은 경우는 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난 대학도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위도 있고 배급도 타는.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 이게 지금도 계속 생각, 그런 생각이. 자다가도 이거 내가 북한이 아닌가, 그 생각이 아직도 멎어있던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나만한 나이 때 이 아이의 능력은 얼마큼 될까? 내가 보니까 장기전이더라구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걸 내가 그저 뜨든가, 다른 방도는 없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탈북이 북한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탈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구직이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탈북하는 주민들은 많은 경우 탈북을 체제에 대한 전면적 거부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일시적 월경으로 이해한다. 중국 등 제3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중 상당수는 경제적 목표 달성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지로 많은 사람들이 탈북과 재입국, 재탈북을 반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탈북자들은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로서의 특성보다는 구직 등 보다 나은 경제적 조건을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도 탈북에 대해 “나라를 배반하고 갔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일반적으로는 “가겠으면 가고 오겠으면 오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다”고 한다. 오히려 최하층의 주민들은 “하루를 살아도 잘 먹고 잘 살다 갔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옳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사례 13).

북한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든 일시적인 대안의 모색이든간에, 또 정치사회적 동기가 탈북의 근본적 동기로 작용하든 아니면 경제적 동기가 근본적 동기로 작용하든 간에 탈북은 북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된 일탈 행위이다. 하지만 생계의 곤란과 사회적 불만을 북한 사회 체제 자체의 변화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북한 사회 외부로 탈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될 수만 있다면 북한 내부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도 북한 내부의 식량사정과 대외관계 등에 따라 주민들의 탈북에 대해 일시적 묵인, 방조와 강력한 단속을 오가는 대응을 하고 있다.

#### 나. ‘창발’의 영역: 외부 문화의 유입과 소통, 대항 담론 형성

사회 체제의 변화는 그 체제 내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창발’ 현상을 통해 일어난다. ‘창발’이란 시스템의 각 부분들의 성질만을 이해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성질이 시스템 전체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이 ‘창발’을 통해 사회 체계 전체의 변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혼돈의 가장자리’라고 부른다. 균형상태에서의 작은 변화는 균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혼돈상태에서의 작은 변화는 차별화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데 반해, 균형과 혼돈의 중간상태인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풍부한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러한 ‘혼돈의 가장자리’를 비롯하여 불균형 상태에 있는 시스템이 구성요소들 사이의 집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화된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현상을 ‘자기조직화’라 한다.<sup>190)</sup>

북한 사회에서 창발의 가능성이 높은 ‘혼돈의 가장자리’는 어느 영역이며, 이러한 영역에서는 어떠한 ‘자기조직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가? 우선 ‘혼돈의 가장자리’로 중국과의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과 여러 문화 매체들을 통해 중국, 남한 등 외부세계의 문화와 정보가 유입되고, 상거래관계망이나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이러한 문화와 정보가 전사회적으로 소통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을 통해 유입된 비디오와 컴퓨터, CD기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대도시와 국경연선 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영화와 드라마, 외국 영화를 접하는 주민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190) <<http://www.complexity.or.kr/doc/01/CPCommon.html?submenu=0101>>.

의하면,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을 비롯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43%였고, 이중 21%가 한국과 중국의 언론이나 문화매체를 통해, 18%가 해외의 친척이나 이웃을 통해서 정보를 접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문화상품을 통해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북한의 방송이나 문화매체를 통해서 얻은 언을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개인적 욕구를 충족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 문화 상품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되고 이들에 의해 소비된다는 것은 그 문화상품이 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관한 정보,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 생활양식, 삶의 방식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수용, 이해, 모방, 거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본주의 사회, 특히 남한의 대중문화 상품이 유통되는 북한의 전지역에 걸쳐 문화변용<sup>191)</sup>을 불러일으킨다.

공식적으로 금지된 문화의 향유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친구 등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끼리 국가가 통제하는 내용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은 매우 사적이고 비정치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공간이 주민들 개개인이나 가족에 국한된 형태로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공적 연결망을 통해 연결되고 공유되고 교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인 여가생활의 영역은 밀폐된 개인적 공간을 넘어서 공적 영역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계에 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북한에서 이와 같은 개인적 공간의 연결과 공유를 통해 국가의 지배 담론에 대항하는 사적 담론이 생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비공식적 정보유통 경로를 통해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정보, 문화, 가치관, 생활방식이 전국 각지로 전달되는데, 특히 상거래관계망과 전화 등의 정보통신매체는 주요한 정보유통의 경로가 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상행위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사회적 행위자들은

191) '문화변용'이란 한 문화가 다른 한 문화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혹은 두 문화 쌍방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문화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문화변용은 두 문화들 간에 어느 정도의 수렴이 일어나는 변동의 유형을 의미하는데, 그 수렴은 두 문화 모두, 또는 두 문화 중 주로 어느 한 문화에 있어서의 변동을 수반한다. R. H. 라우어, 정근석 옮김,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pp. 359~368.

거래관계와 생산-소비자 관계의 전국적 그물망을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만이 아닌 각 행위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고 거래된다.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12)은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시장 통제를 강화하고 일부 시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이지만, 시장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망 이외에 최근 더욱 발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도 향후 북한 주민들 간의 정보 전달과 소통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특히 국경연선 지역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이나 남한과의 연락이 가능하고, 또 실지로 이러한 통로를 통해 외부의 정보와 소식이 북한지역으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소식이 외부세계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를 통한 중국과의 연락을 비사회주의 검열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파탐지기와 교란기를 설치하는 등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에는 휴대전화 소지자 자진신고를 받았으며, 적발시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점차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2008년 6월에는 평양시를 제외한 전국의 가정에서 시외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체신소를 통해서 시외전화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sup>192)</sup>

북한 내의 휴대전화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개통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의 이동통신회사 오라스코미가 75%, 북한이 25%를 투자해 설립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는 2008년 12월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상용화했는데, 2009년 6월말 현재 114개 기지국과 1개 교환국을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약 4만 8천명이 가입해 있다고 한다.<sup>193)</sup> 현재 평양 지역에서만 통화가 가능하지만, 내년경에는 북한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2011년 말에는 가입자가 56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북한 주민들간의 사회적 소통과 담론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정보 및 문화의 유입과 소통이라는 ‘혼돈의 가장자리’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자기조직화’의 가능성은 대항 담론의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구 사회

192) 『오늘의 북한소식』, 151호, 2008.6.23 (좋은벗들, 2008).

193) 『미국의 소리방송』, 2009년 7월 29일.

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적 여론과 구분되는 ‘제2여론’이 시민사회 형성과 사회 변동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독의 경우 집회와 공연장에서 조성된 여론은 ‘분장된 가짜 여론’과 차별화되어 동독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공동체가 형성되고 정치시스템에 대한 저항적 정체성이 조성되었다. 198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는 제2의 여론이 갖는 경계선을 넘어서기 시작해 저항여론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인물 제작과 집회를 통해 나타났다.<sup>194)</sup>

북한에서 국가는 학교와 대중조직 등 이데올로기적 기구를 동원한 사상교양과 언론방송매체 통제를 통해 ‘분장된 가짜 여론’을 만들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행위자들은 개인적 불평불만을 담은 사적 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한다. 국가에 의한 공식적 정보 유통의 차단은 비공식적 정보유통의 경로를 상대적으로 발달시키고 다양화하며 비공식성이 갖는 은밀함과 함께 친밀한 유대감을 오히려 두텁게 한다. 그것은 제한적이지만 가까운 사람끼리 또는 믿는 사람끼리 정보를 매개하는 관계가 가능해지게 한다.<sup>195)</sup> 특히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시장, 개인 단위 사업, 개인 경작지, 대대 등의 판매시설, 당구장, 게임장 등의 여가시설이 사적 담론 형성의 공간으로 등장하였다.<sup>196)</sup>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사례 6)의 증언은 시장에서 사적 담론의 공유를 통해 여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시장에서) 술한 소리들 말한단 말입니다. 말하다보면 서로 그, 한 가한 시간에는 장사 안 되고 한가한 시간에 앉아서는 오가는 말이 다 험담이란 말입니다. 다 생활에 대한 험담. 김일성을 딱 빗대어 놓고는 안 말하지만 다 속 타서. “에휴, 하늘이 무너져라. 벼락이나 쳐라.” 이렇게 말하다가는 “벼락이 갑자기 칠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 제도

194) 이우승, “유언비어와 제2여론의 개념: 북한 사회에 적용을 위한 이론적 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4), pp. 122~124.

195) 홍민, “북한 사회변화와 주민의 생활: 일상생활과 의식구조의 변화,” (2007 북한 인권 토론회 자료집), p. 95.

196) 이우영, “북한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pp. 130~134.

에 대한 비난이란 말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말하는 부인들이 있는가 하면 “아휴, 전쟁이나 꼭 일어나라.” 우리 북한에서 교양할 때는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그러나 구걸하지는 않는다.” 당 정책은 그렇습니다. 평화를 바라나 평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총대 위에 우리 제도가 있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바라지 않고 우리는 전쟁 억제력을 위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자들이 앉아서 말하다가 술한 소리 하다가는 “에휴! 전쟁이나 꼭 일어나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 일어나라는 것은 이 제도가 망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쑥 둘러보고는 보위부 스파이들이 들을까봐 “아무래도 이기겠는 거.” 탁 이렇게 자기네 커버 서지.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여 앉아서, 김일성, 김정일 나쁘고 이렇게 말 못 해도, 그렇게 말할 정도는 다 됐지.

이와 같이 지배적 담론과 분리되어 사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사적 담론은 사회적 행위자들간의 정보전달과 공유의 과정을 통해 일종의 대항 담론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적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적 담론이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을 갖추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은 사적 영역을 포괄하는 생활세계에 정박해 있으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갈등을 매개하고, 시민사회와 체계 영역을 매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근거가 된다. 공론장은 경고체계의 기능과 더불어 문제의 압력을 증폭시키는 기능, 즉 문제를 지각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있고 영향력있게 주제화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또 그 문제를 극화시켜 그것이 의회에 수용되어 처리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적 공론장에서의 제약 없는 논의와 민주적 결사는 시민사회의 조건이 된다.<sup>197)</sup>

북한 사회에서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민사회 영역의 존재를 현 단계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sup>198)</sup>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네트워크의 증가,

197) 이영재, “하버마스의 소통적 권력과 민주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p. 158~176.

198)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 가능한가?,” pp. 233~234.

외부 정보 및 문화의 유입이라는 조건 속에서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내부 정책 변화로 인한 창발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에 있을 당시 주위 사람들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토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48%의 응답자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북한에 있을 당시 반체제, 반정부적 집회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는가,” “비공식적, 불법적 출판물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각각 1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sup>199)</sup> 이 조사는 북한 주민 전체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정한 집단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북한 주민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상당한 수의 주민들이 공식 담론과 대비되는 비판적 의견을 타인과 공유한 경험이 있다는 것과, 북한 사회에 정치 집회나 비합법 출판물과 같은 저항적 행동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사적 담론이 대항 담론으로 발전하고, 시민사회 형성의 기초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199) 이우영 외,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 p. 165.





# 제 6 장

## 결 론



## 제6장

### 결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방법론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요소 환원론적 사고는 “전체는 부분의 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작은 구성단위로 나뉘어질 수 있고, 이 작은 단위들을 분석하여 종합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요소환원론적 사고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는 복잡계는 “전체란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전제하고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요소들을 나누지 않으며 다양한 요소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복잡계란 “무수한 요소가 상호 간섭해서 어떤 패턴을 형성하거나 예상외의 성질을 나타내어 각 패턴이 각 요소 자체에 되먹임되는(feedback) 시스템”을 말하는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많은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분석도구로서 행위자 기반 모형(ABM)이 널리 활용된다. 행위자 기반 모형은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환경과 행위자가 활동하는 시스템 공간 속에서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행위자 기반 모형은 복잡계를 모의실험(simulation)할 수 있는 유력한 하나의 방법이다.

본 연구는 모의실험 할 2차년도 연구의 선행연구로서 북한체제의 움직임 을 이해하기 위해 체제의 행위자를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상에 따라 핵심층인 김정일과 권력중추부(Inner circle), 중간층인 당 및 국가기구, 하층부인 일반 주민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했다.

어떤 정치체제이든 체계의 모든 흐름과 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위 수준의 정책결정이다. 정책결정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의 제약을 받으나 초인적인 능력과 무오류의 절대적인 수량이 존재하는 북한의 경우 정책결정을 둘러싼 수량과 그 측근의 상호작용은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김정일은 각 기구의 최고 책임자에게 전권을 위임하지 않고 하위 직책의

간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임무도 주고 그들로부터 보고도 받는다. 그는 확고적이고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시하면서 공개된 토론이나 의견교환을 피하고 당, 정, 군의 각 보고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정보를 직접 취합한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상의 일정한 수준에서 부서간의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김정일의 지침에 따른 일상적 업무에 한정된다. 측근이라 하지만 보통은 그들 사이의 정보 흐름이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정 전반을 모두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정일뿐이다. 이는 정책결정이 일관성과 단일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사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닌다.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김정일과 그 측근의 상호작용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책결정이 김정일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정전반이 권력자 일인에게 집중되면 업무부담의 가중에서 오는 혼동, 정책결정에서의 객관성과 합리성, 신속성의 결여와 같은 부작용이 초래된다. 또한 모두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에게 보고가 집중되고 참모와 관료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은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는 있지만, 견해 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견해차를 뛰어넘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전문화되고 파편화되고 독립된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한 뒤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김정일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러 변수가 다양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 이런 정책결정구조는 적합하지 않다.

의사결정 과부하와 의사소통 부재는 혁신적 문제해결 능력을 마비시킨다. 특히 변화에 대한 담론의 불가능은 정치체계의 경화현상을 낳는다. 정치체계는 외부로부터의 요구 뿐 아니라 체계내 행위자들의 요구, 즉 내투입에 반응함으로써 자생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사회로부터의 요구 투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투입마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지체 현상을 낳고 있다.

내투입을 위해서는 엘리트간 파벌 및 노선갈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부자세습으로 이어진 장기집권은 집권자가 선호하지 않는 엘리트들의 등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특히 선군정치는 지배집단에 속할 수

있는 후보집단의 규모를 줄였고 지배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을 군부에 더 많이 부여했다. 동시에 군부를 중심으로 엘리트를 동심원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배집단의 크기를 줄였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북한의 권력엘리트 가운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위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조직은 오히려 쇠퇴한다. 안정적이고 평형상태에 있는 조직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일과 측근의 연결망(network)이 어떤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연결망 속에서 누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한 결과,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중심성이 높은 인물은 김기남, 김일철, 김국태, 김영춘, 최태복이다. 중심성(centrality)은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한 정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여 연결망을 구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이다.

수령이라는 절대적 존재이기도 하고 연결망 분석에서 사용한 원자료의 성격상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 김정일이 정중앙에 오기 마련이지만 만약 김정일을 제외하면 누가 중앙에 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이런 연결망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김정일 사망 후 누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의 중심고리가 되는가를 예측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김정일을 제외한 연결망에서 중심에 있는 인물들은 1999~2003년의 경우 김국태, 김영춘, 김일철, 김용순, 조명록 등이, 2004~2008년의 경우는 김기남이 독보적이다. 김기남은 당이나 내각,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인사뿐 아니라 군부 쪽 인사와도 접촉이 잦다. 그는 80대의 고령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김정일 유고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권력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분야에 걸친 넓은 인맥으로 김정일 후계체제 수립에서 조정자, 중재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의 제2인자로 일컬어지는 장성택은 김기남, 박재경, 이용철, 현철해와 자주 대면했다. 그의 형제가 유력한 군인인 데다 그 자신도 군부 인사와의 접촉이 많음은 그에 대해 군부가 호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한편 북한체계가 복잡계적 특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양상은 질서와 무질서

가 공존하면서 체제 질서의 파괴 양태인 ‘대칭파괴’ 현상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변화 대(對)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속, 이데올로기적 상징동원 대 경제적 보상의 결여 등이 증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칭파괴 과정은 일반적으로 체제 내에 엄청난 엔트로피를 증폭시키며 한 체제의 생존력을 낮춘다. 북한이 외견상 안정되어 있으나 체제의 이원적 작동과 하위체제들 사이의 부조화에 의해 평형상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북한체제에서 복잡계이론의 핵심개념인 비평형성과 비선형성은 당과 국가기구 각각의 개별행위자들의 위상과 운영방식의 비정상화를 증폭시키고, 당과 국가기구 등 개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인 관계의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면서도 무질서가 증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북한체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하는데, 본문에서 살펴본 비평형성과 비선형성을 고려할 때 북한체제에서 당과 국가기구 행위자의 두 가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무질서와 통제의 이완에 대처하기 위해 과도하고 비체계적인 권위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당과 국가기구 체계를 무질서하게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강제하는, 당 비서국과 조직지도부, 국방위원회와 보위부 및 인민성 등 북한체제의 핵심 권력기관을 김정일이 틀어쥐 위기관리체제이자 과도기적인 특성을 가진 비체계적 1인 절대권위 구조의 지속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당과 국가기구 체계의 무질서가 북한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파괴하여 정상화된 운영체제와 예측가능한 정책 실행을 점차 어렵게 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체계의 과부하를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김정일의 건강여부가 북한정치체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시스템 운영의 대체재가 권력내부에서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로서 북한정치체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증대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의해 엔트로피가 증대되는 수위가 극대화되고 있으며, 1인 절대권력자를 중심으로 한 소수 특권계급의 검직과 대인관계에 의한 인맥정치가, 그 내부로부터 역할 중첩과 혼선 등과 맞물려 북한 정치시스템을 해체하는 무질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자기진화의 예측 가능한 경로가 불안정하여, 북한정치 체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정권 내부에서도 ‘위험의 자기 인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계기는 김정일의 병환과 후계문제이었을 것이다. 2008년 1인지배체제의 절대권력자인 김정일의 병환 이후 체제운영에 일정한 혼선이 있었을 것이고, 후계와 관련하여 ‘김정은의 후계자로서의 권위’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군-정에서 실권을 가진 장성택이 부상하는 한편 세습을 포함한 후계 구도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2009년 헌법 개정으로 ‘선군사상’과 함께 북한체제를 선군체제로 더욱 단순화하면서, ‘무질서 속에 질서’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가운데 사회의 제일 밑바탕인 하층부를 보면 최고지도자와 일반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근본적 변화가 발생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식량난의 심화로 배급체계가 마비되자 주민들은 국가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각자 생존 방도를 강구해야 했고 주민들의 경제활동 터전은 공장에서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개별 기업과 시장활동을 하는 개인이 국가와 수령을 대신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주체가 되었는데, 이는 수령과 국가의 시혜로부터 주민이 물질적으로도 사회심리적으로도 자립해 나감을 의미했다.

주민과 간부간 관계는 이익을 매개로 한 교환관계로서 본질은 ‘타협과 기생’이다.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간부에게 주어진 매개의 공간은 수령과의 관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충실한 재현과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간부와 주민 양자 간의 공모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전유의 공간이 되어 버렸다. 주민들은 불법적 활동을 통해서까지 이익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간부들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주민들의 일상에 약탈적으로 기식하는 형태의 교환관계가 형성되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하급 간부들은 ‘군림’하면서 ‘약탈’을 자행하는 존재로 직권을 이용한 월권과 횡령, 부패의 표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일반 주민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것의 집합체로서의 사회 전반에 나타난 현상은 개인주의의 확산과 생산·재생산·소비의 단위로서 가족의 복귀, 이에 따른 사적 영역의 팽창이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고 가족이 시장과 연계된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로 기능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대가정’을 대체하여 개별 가족이 생계유지의 기본단위이자 생존을 위한 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이것은 결국 사적인 소유의식의 강화와 사회적 개인화 경향, 공적 무관심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복잡계이론에서 강조하는 ‘창발’과 ‘혼돈의 가장자리’, ‘자기조직화’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현상은 주민들이 공적 관계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시장의 상거래관계를 중심으로 사적 관계망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 체제의 변화는 그 체제 내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창발’ 현상을 통해 일어나는데 ‘창발’이란 시스템의 각 부분들의 성질만을 이해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성질이 시스템 전체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이 ‘창발’을 통해 사회 체계 전체의 변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혼돈의 가장자리’라고 부른다. 균형상태에서의 작은 변화는 균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혼돈상태에서의 작은 변화는 차별화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데 반해, 균형과 혼돈의 중간상태인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풍부한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러한 ‘혼돈의 가장자리’를 비롯하여 불균형 상태에 있는 시스템이 구성요소들 사이의 집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화된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현상을 ‘자기조직화’라 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시장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루는 무수한 점과 선들이 만나고 진화한다. 각 지역의 주요 시장에는 전국 각지의 상인들을 통해 흘러들어온 각종 정보가 모이고, 이 정보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운반된다. 시장은 사적 담론이 형성되는 공간이자, 공론화된 사적 담론이 사적 관계망의 공간적 확장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공간이다. 시장의 상거래관계망 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중국, 남한 등 외부세계의 문화와 정보, 가치관, 생활방식이 유입되어 전사회적으로 소통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가장자리’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견되는 ‘자기조직화’의 가능성은 대항 담론의 형성이다. 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보면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적 여론과 구분되는 ‘제2여론’이 시민사회 형성과 사회 변동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했다. 사회적 행위자들은 개인적 불평불만

을 담은 사적 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한다. 지배적 담론과 분리되어 사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사적 담론은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정보전달과 공유의 과정을 통해 일종의 대항 담론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획득한다.

북한체제의 행위자들은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각기 다른 입장과 환경에 처해있다. 상층일수록 저변의 무질서와 혼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생계를 위협받는 정도가 약해진다. 최상위에 위치한 지배연합은 자체의 결속과 물리적 강제력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이 최상층이 스스로 조직의 혁신적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내투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체제의 적응지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층 희소해지면서 상층 계층 사이에서도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사회 저변에서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네트워크의 증가, 외부 정보 및 문화의 유입, 비판적인 대항 담론의 형성이 더욱 진전된다면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내부 정책의 '조그만' 변화를 계기로 북한체제는 '창발'의 길을 밟아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개디스, 존 루이스 『역사의 풍경』. 서울: 에코리브르, 2004.
- 굴드너, 앨빈 W. 김래상 옮김. 『현대 사회학의 위기』. 서울: 한길사, 1982.
- 김 민·한봉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김용학. 『사회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2007.
- \_\_\_\_\_.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2007.
- 김현환. 『김정일장군정치방식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 라우어, 정근석 옮김.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루만, 니클라스, 박여성 옮김. 『사회체계이론 1』. 파주: 한길사, 2007.
- 르윈, 로저·버루트 레진, 김한영 옮김. 『컴플렉스노믹스』. 서울: 황금가지, 2002.
- 리명일. 『국가관리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8
- 리성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민병원·김창욱 편. 『복잡계 워크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바인하커, 에릭, 안현실·정성철 옮김. 『부의 기원』. 서울: 랜덤하우스, 2007.
-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기파랑, 2005.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서재진·김태일.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알몬드, 가브리엘 A.G. 빙햄 파우엘 공저. 김영훈·이종익 공역. 『비교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6.
- 양창삼. 『조직혁신과 창조적 경영』. 서울: 민영사, 1997.
- 영, 오란 R. 진덕규 옮김. 『정치학이론체계』. 서울: 법문사, 1985.

- 윤영수·채승병. 『복잡계 개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_\_\_\_\_. 『새터민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스튼, 데이빗 저. 이용필 옮김. 『정치구조의 분석』. 서울: 인간사랑, 1991.
- 이용필 외. 한국체계과학회 편 『시스템과학과 국가정책』. 서울: 신유, 1997.
- \_\_\_\_\_. 『사회과학연구와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이우영 외.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8.
- 田野崎昭夫 編. 송정부 옮김. 『파슨즈의 사회이론』. 서울: 재동문화사, 1985.
- 전현준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박영사, 2005.
- 정보사령부. 『북한조직편람』. 서울: 정보사령부, 2004.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조현일. 『1000』. 서울: 접힘/펼침, 2008.
- 존슨, 스티븐. 김한영 옮김 『이머전스』. 파주: 김영사, 2004.
- 카프라. F. 김용정·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서울: 범양사, 1998.
- 카프라. F. 이성범·구윤서 옮김.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서울: 범양사, 1985.
- 터너, 조나단. 정태환 외 공역. 『현대 사회학 이론』. 서울: 나남출판, 2002.
- 터너, J. H. 김진균 외 옮김. 『사회학 이론의 구조』. 서울: 한길사, 1989.
- 통일부. 『2009 북한권력기구도당』. 서울: 통일부, 2009.
- \_\_\_\_\_. 『2009 북한의 주요인물』. 서울: 통일부, 2009.
- 프리고진, 일리아·이사벨 스텐저스. 신국조 옮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서울: 정음사, 1989.
- 프리고진, 일리아. 이덕환 옮김 『확실성의 종말: 시간. 카오스. 그리고 자연법칙』. 서울: 사이언스북스, 1997.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 시대정신, 2006.
- \_\_\_\_\_.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 Hoffman, John. 이증호 옮김. 『국가와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신아출판사, 2000.
- Almond, Gabriel A.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1966.
- Carl, Friedrich, J.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Easton, David.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5.
- \_\_\_\_\_.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New York: Routledge, 1990.
- Fitzpatrick, S. *Everyday Stal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Fulbrook, Mary. *The People's State*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 George, Alexander L. and Juliette L. George. *Presidential Personality and Performance*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8.
- Gouldner, Alvin W.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New York: Basic Books, 1970.
- Hoffman, John. *State Power and Democracy: Contentious Concepts in Practical Political Theor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 Ledeneva, Alena. "Continuity and Change of Blat Practices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 S. Lovell, Alena V. Ledeneva & A.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London: Macmillan Press Ltd., 2000.
- Lefebvre, H.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Paris: Gallimard, 1968.
- Maturana, Humbert R. & Francisco J.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Holland: D. Reidel. Dordrecht, 1980.
- Morgan, Gareth. *Images of Organiza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86.

Parsons, Talcott.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New York: McGraw, 1937

Parsons, Talcott and Neil J. Smels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6.

Prigogine, Ilya & Isabelle Stengers. *Order Out of Chaos: Man's New Dialogue with Nature* New York: Bantam Books, 1984.

Sawyer, R. Keith. *Social Emergence: Societies As Complex Syste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Sedlenieks, Klavs. "Cash in an Envelope: Corruption and Tax Avoidance as an Economic Strategy in Contemporary Riga." Karl-Olov Arnstberg & Thomas Borea. eds. *Everyday Economy in Russia, Poland and Latvia* Stockholm: Sodertorns hogskola, 2003.

Tilly, Charles.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8

## 2. 논문

고영환.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소고."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1997.

곽승지.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 『현대 북한 연구의 쟁점 2』.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7.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 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2004.

김광영. "중국연구를 위한 인류학적 패러다임 시론: 문화접점론과 국가·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권 3호, 2002.

김성철. "통치스타일과 정치체계의 운용." 통일연구원 편. 『김정일 연구: 리더쉽과 사상1』. 서울: 통일연구원, 2001.

김영희·김병욱.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북한관료들이 사경제활동 연구." 『통일 문제연구』. 2008년 하반기 통권 제50호, 2008.

김정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김정일 선집15』. 2005.

- \_\_\_\_\_.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8월 23일. 『김정일선집 9』. 1997.
- \_\_\_\_\_.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1987.
-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 1998.
-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7』. 1996
- 김중욱. “북한 관료의 일상세계.” 『현대북한연구』. 11권 3호, 2008.
- 민병원. “불확실성 속의 질서: 복잡계이론과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2006.
- 박영자. “북한 중앙국가기관 특성과 체제운영 실태: ‘민주집중제’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동아연구』. 제49집, 2005.
- 박영자. “북한 지방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2005.
- 손혜민. “박기원 그 순천사람.” 『임진강』. 제5호, 2009.
-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9권 3호, 2006.
- 이광모·장순희. “복잡성이론의 적실성에 관한 사례 연구: ‘2002 월드컵’ 거리응원의 자기조직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4.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영재. “하버마스의 소통적 권력과 민주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2005년 하반기호 통권 제44호, 2005.
- 이우승. “유언비어와 제2여론의 개념: 북한 사회에 적용을 위한 이론적 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 2004.

-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 가능한가?” 『현대북한연구』. 제4권 1호, 2001.
- \_\_\_\_\_. “북한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1권 1호, 2008.
-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2005.
-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담론 201』. 제10권 2호, 2007.
- 채원호·손호중·김옥일.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1호, 2006.
- 최대석·조영주.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북한학보』. 33집 2호, 2008.
-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윤대규 엮음.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2008.
-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6.
- 최완규·노귀남. “북한주민의 사적 욕망.”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 2008.
-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 함택영·구갑우. “북한의 공과 사: 이론화를 위한 비교”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 2008.
- 홍민. “북한의 ‘관계자본’ 교환구조와 시장교환의 전유.” 『현대북한연구』. 9권 3호, 2006.
- \_\_\_\_\_.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3. 기타자료

- 『경향신문』.  
 『로동신문』.  
 『미국의 소리방송』.

『북한 제9차 개정 헌법』. 통일부.

『연합뉴스』.

『오늘의 북한소식』.

『월간 북한동향』.

『조선중앙방송』.

『주간 통일정세』.

『조선중앙방송』.

『청년전위』.

『평양방송』.

<<http://www.complexity.or.kr/doc/01/CPCCommon.html?submenu=0101>>.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초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공저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공저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저	20,000원
2009-16	200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 '비핵·개방·3000 구상'을 위한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공저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저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공저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저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저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저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공저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저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공저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저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공저	7,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스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7-01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공저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공저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공저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공저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만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p>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20    년        월        일</p> <p>                                신청인                                       (인)</p>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시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